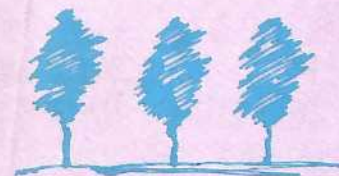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호
(제301~400호)



1995. 7

민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996년 4월 10일

인권정보자료실
R1.1.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5년 2월

(제335호 - 제351호)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권리조약 제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을 포함해 약 1백50여개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가 및 민간단체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1월 30일 개막되었다. 첫날 회의에서는 무사 빈 히탐(61,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씨가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라 아태지역을 대표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3월11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보스니아,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와 맞물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문제,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문제, ▲팔레스타인문제,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명에 따른 인권센터와 유엔의 인권관계 활동의 재조정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 평가작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정신대문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제1차보고서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

함돼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보고서(E/CN.4/1995/31 & Add. 2)를 통해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씨가 자의적 구금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4년의 황대권, 김성만, 장의균씨 사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권위원회 정기회에서 자의적 구금 해당 국가에 오르는 오명을 일깨워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반 올프텐(50차 인권위 의장)씨는 개막인사에서 "유엔인권위는 정부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 수백만 인류의 인권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전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될수록 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첫 연례보고, 이브라히마 팔 인권사무차장보통의 지난해 인권센터 사업보고가 뒤따랐다.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인권센터를 비롯한 유엔 인권관련 기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주제네바 대표부의 박창일 부대사, 이준희 참사관, 김기환 서기관, 임재홍 외무부 인권사회과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북한측에서는 사회인도과장, 국제기구과장과 민간단체 자격으로 '북한인권연구소'에서 1명이 참석했다(제336호에 유엔인권위 소개기사 게재).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끌고 다녔고, '사람과 세계'라는 주체사상을 심도있게 공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이

후 주위 '샘' 회원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의 이상을 벗어나므로 어린 아이치곤가중스럽고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6일(월) 오후 6시30분, 사랑방 집들이 합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독자, 사랑방에 관심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약도

아트 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라사라 북창학원 건물)	밤길
<숙명여대 입구역	역	->서울역
금성극장	한국전자계산(주)	목병원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317호-33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5	317	1	김영삼 대통령 「김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 의견서 제출
		2	연말, 연초 인권소식-비전향장기수 소환요구/ 김선명석방요구 목요집회/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소/오종렬의장 긴급구속/ 각 인권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6	318	1	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유엔 자의적구금실무분과 결정, 정부 다시 결정사실 숨겨/ AI '북한 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배긴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등 약속
		2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농성 성퇴직 강원도의회 의원등 삭발단식농성/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조사 시작/ AI한국지부 성명발표 고문방지조약 유보조항 조속가입등 촉구/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강입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위해 변호인 참여권 필요
1/7	319	1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경상대 장상환교수등 복직
		2	황석영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 결정(발췌)/ 황석영, 이근화·최진섭씨사건 개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1/10	320	1	2월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고문방지조약 가입서 기탁/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발표
		2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한국인 공장장 내팔여성노동자 강간/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1/11	321	1	백홍용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열려
		2	분신 전력 임윤선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못할 국보법 수감자 김연인씨/ 노사관계부문에서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발표/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1/12	322	1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변협, 중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내팔노동자 성폭행한 공장장 긴급구속
1/13	323	1	체불임금 지급·노동자 자격 인정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 장소 판명
		2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앞 규탄시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일 방문/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기도 반대, 민주노총준비위/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AI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펼쳐
1/14	324	1	박종철열사 8주기,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재판부 증인제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연기
		2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고 박종철열사 부친 박정기씨 인터뷰/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에 찍힌 시
1/17	325	1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침해 서강대재학생 86% "서약서 작성 자체 부정적"/ 서강대 박홍총장 전화 인터뷰
		2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아사히신문 내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강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유엔51차 인권위 모니터 위해 출국, 이성훈씨 인권협대표로 참석
1/18	326	1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박홍총장과 면담 시도/ 서강대총학생회 '서약서되돌려받기' 전개/ 체불임금전액지불, 주44시간 근무등 합의 내팔노동자 농성해산
		2	인권 해폐기장 시민대책위 구성,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헌 서명 시작/ 여성의 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변호사 강연요지(발췌)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317호-33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9	327	1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부산지법 제3형사부, 최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2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공보일군에 화장 덧씌운 꿀" / 용역강제 노점상 덮쳐 사당동노점상 4명부상/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 상황(1월9~17일)
		3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1) (2) (3)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
1/20	328	1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서강대총학생회 총장 사과 '서약서 반환'결의
		2	두밀학교살리기운동, 토론회, 개성과 창조성·인간성살리기 교육의 첫걸음
1/21	329	1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고 황인철변호사 2주기, 추모문집 출판기념회도
		2	단체탐방 39/노동정책연구소
1/24	330	1	고문조작의혹 부산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에 사형구형/ 언론의 인격권 침해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2	인권협 김평화상 수상반대/ AI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교육강좌·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등 계획/ 용역직원 동원, 노점상 생계위협/서울변호사회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선출/ 의문사 청원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법사위
1/25	331	1	아동의 권리 정부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2	제네바 소식1-유엔 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해설> '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란'?
1/26	332	1	인권협, 김대통령 김평화상 수상 반대시위, 김영사 "한국 인권상황 잘 모른다" / 남총련, 현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전쟁포로 장기수 송환에 응답, 북한 불교도연맹
		2	국제사면위,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가혹행위 제조사도 요구/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최 2.17-26 홍콩
1/27	333	1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촉수, 민가협 목요집회
		2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담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씨 폭행사건 1년/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1/28	334	1	특집기획-깃발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95년 1월호 기사색인
		3	95년 1월호 기사색인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족으로 <인권하루소식>
제작, 기타 업무를 보는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5번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강사-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바로 오늘 오전11시~오후1시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주요내용 :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의 역사적 배경/ 정부외조보
고서에 나타난 인권부재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그의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배, 이종길 변호사가 장기수 유정식(56, 무기형), 김병주(71, 20년형), 조상록(50, 무기형), 이성우(71, 20년형)씨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복역중인 유정식씨등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제한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들의 피고인 접견을 제한한 안동교도소측의 접견거부는 부당한 것이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안동교도소 당국을 변호사 업무방해등으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0

월에도 이장형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형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천주교인권위는 이에 즉각 법무부에 항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법무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작년 8월, 9월 재심을 준비 중이던 신귀영(59, 15년형), 강희철(38, 무기형), 조상록(50, 무기형)씨에 대한 면회도 전주, 대전, 대구교도소로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계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국진씨 재입원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약을 하면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재입원하게 된 것이다.

푸른영상, 출옥 장기수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운동단체인 '푸른영상'(대표 김동원)은 장기수들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룬 비디오물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을 21개월간의 작업 끝에 제작하여 2월중으로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상영시간 85분짜리 영상물인 이 다큐멘터리에는 총 15명의 빨치산 출신 출옥 장기수들이 해방공간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했던 당시의 현장에서 증언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상영 시간은 85분이다. 이 영상

물은 민가협과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의 후원과 협조로 만들어졌다. 연출을 맡은 김태일(33)씨는 "우리의 현대사 중 중요한 부분인 해방공간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작업을 했다.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당시의 체험자인 출옥 장기수들이 사망하기 전에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점과 아울러 올해가 해방 50주년이란 시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기수가족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전개기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장기수가족후원회'는 지난 4일 장기수, 후원회원등 7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통일을 찾는 큰 잔치'를 가졌다. 장기수가족후원회는 앞으로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 송환운동,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양심수, 장기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마을'이 합창을 하였고 '푸른영상'이 제작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을 상영하였다.

● 공판안내 ●

- 2월 7일(화)
 - 김용우(생사건), 2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등
- 2월 8일(수)
 - 한은술등(IS 관련), 2시,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등
 - 신정길(범민련 사무처장), 2시, 서울형사425호, 국보법
- 2월 9일(목)
 - 문영기(생사건), 3시30분, 서울형사317호, 국보법 위반 등
 - 이문옥(전 검사관), 2시, 서울형사418호, 공무상비밀누설
 - 윤덕산, 10시, 서울고법 404호, 강도살인 등
 - 김기환 외5명(지존파), 2시, 서울고법 303호, 강도살인 등
- 2월 10일(금)
 - 박치관, 2시, 서울형사319호, 국보법위반 등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이성훈(인권운동사랑방 국제연대 전문위원)

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2. 인권위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위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러 개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유엔의 창립목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전세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연구·검토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언문이나 인권조약을 만들기도 한다.

3. 인권위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의장단과 서기선출/의제 채택/나라별 인권상황/경제,사회,문화적 권리/발전의 권리/민족자결권/구속이나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인권위의 활동방식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방안/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국제인권조약 비준상황/인권소위 보고/민족,종교,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의 인권/인권활동가에 관한 선언/아동의 권리/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위 보고서

4.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팔레스타인, 고문 및 자의적 구금등이 오랫동안 단골메뉴로 다루었다. 최근 주목받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①보스니아,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 ②올해 3월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가 남북문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
- ③올 9월 열리는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문제
- ④인권고등판무관의 임명에 따른 인권센터와 유엔의 인권관계 활동의 재조명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과 평가
- ⑤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선언문,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전쟁중 아동의 권리, 아동매춘등에 관한 것

5. 51차 인권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92년 여름 인권소위에 처음 제기되었던 정신대문제가 단연코 관심을 끄는 이슈이다. 이번 51회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1차보고서(E/CN.4/1995/42)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되어 의제항목 11a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행된 자의적 구금문제가 나가고 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보고서(E/CN.4/1995/31 and Add.2)에서 이근희씨와 최진섭(결정 29/1994)씨 그리고 황석영(결정 30/1994)가 자의적 구금상태에 있음을 결정했다. 93년 황대권, 김성만, 장의균씨 사례에 이어 2년 연속 자의적 구금 해당국가로 지적되어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권하루소식 318, 319호 참조).

6. 인권위에는 누가 참석하나?
=현재 53개 국가가 위원회 정식 회원국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15, 아·태 12, 동유럽 5, 남미와 카리브해 11, 서유럽과 기타 10개국으로 분포되어 있다. 임기는 3년, 해마다 원칙적으로 17개 국가가 바뀐다.

정부대표이외에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ILO)등 정부간 기구, 유엔개발계획(UNDP)등의 유엔전문기구 및 민간단체등이 참석하나 투표권은 없고 발언권만 주어진다. 의장은 5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올해는 아·태지역을 대표해 말레이시아 대표 무사 빈 히탐씨가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93-95년까지 3년간 인권위원회원국이다.

7.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의사결정은 결의안(resolution)과 결정 2가지가 일반적이며 의장의 발언(statement)도 간혹 사용된다. 이중 결의안이 가장 강력하다. 표결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전원합의,

각각 찬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지명표결, 거수로 결정하는 다수결등 세 가지가 있다.

8. 민간단체도 참석할 수 있는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투표권은 없으며 서면이나 구두발언(최대 10분)을 할 수 있다. 결의안의 경우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 정부대표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정부대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9. 인권위(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어떻게 다른가?

=인권위는 유엔헌장에 기반한 기구이고 인권이사회는 조약에 기반한 기구로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유엔이 창설된 직후인 46년에 만들어졌고, 후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이 발효된 다음해인 77년 만들어졌다. 인권이사회는 B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규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로 정부의 18명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4년, 2년마다 9명이 교체된다. 해마다 뉴욕과 제네바를 번갈아 가면서 3차례 회의를 가진다. 한국은 90년 B규약에 가입해 92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

10.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권소위의 정식명칭은 '소수자(집단)의 차별방지와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다. 인권소위는 인권위 산하 보조기구로 정부대표가 아닌 정부의 추천을 받은 26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각 나라의 구체적인 인권문제보다는 전세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주제별로 접근하여 조사, 연구하여 인권위가 정치적 결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자모임 또는 두뇌집단이라고 불린다. 임기는 4년, 2년마다 13명이 교체된다. 매년 8월경 제네바에서 4주간을 회기로 열린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그의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하였다. 문국진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고 집필등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왔으나, 다시 지난 1월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고대 구로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것이다. 문국진씨가 제기한 재판은 서울민지법에서

그동안 7차례 열려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86년 경찰 연행과 구치소 생활후 고문후유증을 보여 8차례나 병원을 드나들었던 김복영(31)씨는 집에서 계속 우울증을 보이며 식사를 거르다가 지난 3일 현역 출근하였으나, 7일 현재 소계 파악이 되지 않았다. 김씨의 누나 김효숙(34)씨는 "정신도 온전치 못한 복영이가 추운 날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럽다. 언제나 고문의 아픔을 이기고 친구들과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며 매우 안타까와 하고 있다.

86년 신길동 시위 사건으로 연행, 구치소를 다녀온 후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환용(31)씨는 지난 겨울에 경북의 어느 절에 가서 요양을 한다며 집을 나갔다. 가끔 그의 동생들이 강씨를 만나고 오지만, 강씨의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혐의자로 몰려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바 있는 김종경(44)씨는 지난해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씨는 "가세는 기울고 언제 집을 쫓겨날지 모른 형편이다. 장사로 겨우 생활을 하는데, 민사소송이 이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가장인 김씨가 계속 고문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외에도 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던 최

영미(34)씨, 86년 민청련 간부를 지낸 윤아무개씨, 현재도 감옥에 있는 방양균씨 등 많은 이들이 과거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1년이 안되어 다시 재발하곤 하여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문방지조약은 제14조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문방지조약은 광의의 고문 개념, 고문에 의한 자백의 불인정,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고문 미수범도 고문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위의 친지들에게 <인권하루소식> 1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은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독자배가운동을 전개합니다.

자동이체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동이체는 통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갖고 해당 은행에 찾아가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됩니다.

<구독료 구좌안내>

계좌번호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관용의 해와 평화교육

- 일시: 2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 장소: 성공회 피정의 집(전화: 735-7832)
- 강사: 차인석교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주최: 서울평화교육센터(전화: 823-2961)

지난 6일 있었던 「인권운동사랑방」 집들이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저 더욱 열심히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욱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형사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욱(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형사 등에 의해 불법체포·연행되어 인신매매범이라는 혐의 아래 무릎을 꿇리고 구두발로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변협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 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철형사등이 임재욱씨를 청량리경찰서로 불법체포·연행하여 수사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한 임씨의 의지가 파손된 점, 같은 보호실에 감금되어 있던 변중호씨가 당시 임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들어온 상황을 자세히 증언한 점, 법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측의 주장만 믿고 임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무리하게 수사, 자백을 강요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결론지었다.

임씨는 95년 1월14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301호(담당 박승노검사)에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부모등 9명에 대해 무고, 위증교사, 불법체포, 폭력행위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임씨는 피해자 김은미(13), 채현정양을 3회에 걸쳐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채양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94년 4월 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지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낮추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추행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임씨는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140여 국내외 인권단체 소개 책자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단체편람」 1판 발간

국내 1백40여개 인권단체들의 활동과 조직구성을 담은 「한국인권단체편람」이 발간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6일 펴낸 인권단체편람은 총1백13쪽으로 국내외인권단체 소개 및 주소록과 부록으로 국내 인권관련 기관 연락처와 추모사업회 주소록이 실렸다.

단체편람에 소개된 각 단체는 연락처를 비롯해 인적구성, 창립일, 창립배경과 목적, 조직, 활동의 순으로 담았다. 여기에 <인권하루소식>의 고정란 '단체탐방'을 통해 소개된 글도 곁들였다. 국내인권단체

에는 종교, 노동, 외국인노동자, 건강과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시민운동, 일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발간사에서 "이번 단체편람은 국내 인권단체들의 연대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첫 판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증보판을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3면에서 계속)

문: 3월 WSSD가 열린다. WSSD의 준비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본회의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 비엔나세계인권대회와 마찬가지로 WSSD도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에 불과하다. A규약위원회는 그러한 문서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사회발전의 후속사업 모니터링 A규약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1백3십여개국이 가입했고 법적 구속력이 가지고 구제 모니터 체제를 갖춘 A규약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앞당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채택 못하고 3개 항목만 합의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지난 1월 16일 개막된 인권운동가(Human Rights Defenders) 지원 실무분과 제10차 회의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선언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3개 조항만 합의, 채택한 채 23일 오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채택된 3조항은 1장의 1조(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와 2조(국가의 우선적 책임과 의무), 루마니아 대표가 제안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전체 5장 22조 가운데 지금까지 15조항이 합의, 채택되었고 전문과 나머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항은 내년에 열리는 11차 회기에서 다시 토의될 예정이다.

실무분과회의를 모니터링한 10여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첫주 이번 회기에 초안이 합의, 채택되어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5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간의 협상 결과, 선언문 내용이 점차 변질되어가자 민간단체 대표들은 입장을 바꾸어 "이번에 합의,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더라도 선언문이 타협, 절충의 산물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인권봉사회」(ISHR)의 인턴으로 참가한 코레테 레트로자네씨는 "선언문의 대상과 주체가 바로 나와 같은 인권운동가인데 역설적으로 주된 인권침해자이자 책임자인 정부의 대표에 의해 선언문의 내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모순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3세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일해온 현장 인권운동가의 구체적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제네바=이성훈】

제네바 소식 ②-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편집자 주】 인권협을 대표하여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훈씨가 보내오는 51차 유엔인권위 소식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수요일에 실겠습니다. 국제인권소식은 당분간 금요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올해 5월 1-1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 한 약 9개 인권단체는 이미 작년 6월말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A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성훈씨가 A규약 위원회 사무처장 알렉산더 티코노프씨를 만나 규약 가입에 따른 한국 정부 최초보고서 심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티코노프씨는 모스크바 출신으로 지난 87년부터 A규약위원회에서 일하였고 유엔인권센터에서 14년간 활동했다.

문: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과정은?

답: 한국정부는 90년 4월 A규약에 가입했고, 이에따라 93년 10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정부 보고서는 94년 12월 11차 회기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 12차 회기에서 심의될 것이다.

문: 12차 회기가 5월 1-19일까지 3주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 보고서의 심의 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답: 첫날 5월 1일 오전 의장선출과 의제, 일정 확정 등 운영에 관한 안전을 처리하고 오후에 민간단체의 발언을 듣는다. 다음날 오전부터 나라별 보고서 심의를 하는데 한 나라의 경우 9시간 정도가 소요된

다. 6개국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고작 2주가 걸리고 마지막 주는 심의를 토대로 권고안을 해당 정부에게 제시한다. 문: 작년 6월말 사전준비(pre-sessional)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올해 5월 심의를 대비해 보다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조언을 한다던?

답: 국제인권단체가 아닌 해당 국가의 민간단체가 이처럼 성의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12차 회기에서 심의되는 6개국 정부보고서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 민간단체가 유일하게 반박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보고서의 심의는 호주 출신의 필립 알스톤 교수가 담당하는데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미 질문지가 한국정부에게 배포되었고 곧 한국정부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민간단체는 지금이라도 보다 자세한 추가자료와 정보를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3월 중순까지 3-5쪽 요약문을 제출하면 6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유엔공식문서에 포함된다. 앞서 말했듯이 첫날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문: 지난 주에 열린 아동의장선출과 의제, 일정 확정 등 운영에 관한 안전을 처리하고 오후에 민간단체의 발언을 듣는다. 다음날 오전부터 나라별 보고서 심의를 하는데 한 나라의 경우 9시간 정도가 소요된

다. 사실 나도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에게 많은 불만과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87년 제1차 회기는 민간단체 대표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인권단체가 전통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별다른 비용 부담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 시민보다는 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문: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자체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아닌지

답: A규약위원회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기 첫날 일반토론시간에 민간단체의 공개적 발언을 허용하고 민간단체의 요약문을 유엔공식문서에 포함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가진 국제민간단체만 반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자격이 없는 각 나라의 민간단체 누구나 반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간단체의 참여가 가장 저조하다. 역설적으로 위원회는 가장 진보적이고 민간단체는 가장 보수적이

다. 아동의 권리위원회처럼

각 나라의 민간단체와 사회권위원회를 연결시켜주는 국제민간단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한국 인권단체가 이번을 계기로 주도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문: 민간단체가 A규약에 관해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답: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 특히 반박보고서 없이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보고서만으로는 해당나라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A규약에 규정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박보고서의 내용은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확(precise)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다음 보고서(보통 5년후)의 실시여부를 분명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불충분할 경우 사회권위원회는 추가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정부에게 법적인 요구이외에도 도덕적, 정치적 압력으로 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 민간 인권단체가 이러한 권고안을 국내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문: 만약 정부 보고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 일단 의문이 들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추가로 정부의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을 현지로 파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면에 계속-->)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그의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곤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반성문 작성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불 것 '권유'하기도

동일여고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감초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송경진(동일여고 3)씨가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씨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18일자로 '학생선동 및 유인물 배포'등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10월말경 퇴학각처분 신청을 위해 제직확인요청서를 요구하는 권규대변호사에게는 퇴학시킨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요청이 있기에 퇴학통보를 받은 송씨가 학교등교를 하려했으나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받아 퇴학대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무기정학을 시키겠다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 무단결석으로 처리했다. 내신을 위해서도 검정고시를 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자퇴를 종용했다고 송씨는 전했다. 특히 "지난 조사과정에서 선생에게 구타를 당했고, 심지어 형사 송씨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18일자로 '학생선동 및 유인물 배포'등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10월말경 퇴학각처분 신청을 위해 제직확인요청서를 요구하는 권규대변호사에게는 퇴학시킨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요청이 있기에 퇴학통보를 받은 송씨가 학교등교를 하려했으나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받아 퇴학대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무기정학을 시키겠다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이 터지자 학교측에서 「생」과 관련 동일여상 학생들을 조사하던중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감초들의 ~」를 집중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등 3명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생과 연관이 있을 것보다 학생회 직선제요구, 학교비리등을 실어 오래전부터 문제삼아 왔던 「감초들의 이야기」, 주동자를 색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93년11월3일 이후 송씨는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퇴학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학교를 나오라는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한다. 현재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 노씨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등 혐의 손배소송

경찰의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노씨를 발견,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임의동행했으며 노씨는 자유의사로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했다"

고 밝혔다. 또한 "수감은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대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있었으며 조사는 본인이 하지않아서 시간이 초과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씨는 경찰이 93년 7월 13일 새벽 6시경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불법 체포하고 서울 남영동 보안국에 같은 달 15일 새벽 6시까지 불법감금한 혐의로 94년 2월 소송을 냈었다.

검찰 법안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7일 검찰이 조계사 경찰력 투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불교단체에서는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안'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울시장경찰청장, 최기문 전 중로경찰서장등을 검찰에 3천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8일 각기 성명을 내고 "상무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권과 구총무원 집행부가 결탁하여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종단개혁을 이루겠다는 대중들의 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있었으며 조사는 본인이 하지않아서 시간이 초과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늘 1면 발행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상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 인권
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난

학교의 비리를 다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청소년 단체 '생'의 회원인 고영국, 문영기, 김용우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0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8개 학교 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유기 무기징학에서 자퇴중용, 퇴학까지 당했다.
 이아무개(○ 고등학교 3학년)씨는 "우리들이 사회문제에 관심 갖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곧바로 학사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홍아무개(○ 고등학교 2학년)씨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멸공, 반공을 주입시키고 통일에 대해 일방적 정보만을 주어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E여고의 김아무개 교사는 학사징계의 근거,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자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학교의 기준에 의한 자치활동만이 보장될 뿐이다. 이를 위반하면 학생들은 곧바로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고등학생들의 권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들의 자치 동아리 활동의 경우 성아무개(○ 여상)씨는 "학교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동아리는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과 학교의 반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그밖에 학생의 날이나 학교이외의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징계감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학교에서 강요되는 학교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학생 의사도 묻지않은 채 비밀비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동아리, 학생회 활동등도 학교 운영의 편의성에 기초해서 움직인다고 한다.

이에 성씨는 "학생들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권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90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조약' 12,13조에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4,15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위의 친지들에게 <인권하루소식> 1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은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독자배가운동을 전개합니다.
 자동이체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동이체는 봉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갖고 해당 은행에 찾아가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대번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구독료 구좌안내>

- | | |
|------------------------|-----------------------|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준식 |
| 제일은행 128-10-131017 | 상업은행 431-07-056582 |
| 농협 011-01-404581 | 조흥은행 438-06-016840 |
| 외환은행 057-18-33811-7 | 우체국 013292-0011731 |
| 한일은행 112-182999-12-001 | 하나은행 105-106617-00107 |
| 신한은행 355-02-035530 | 국민은행 015-21-0723-021 |

○ 행사안내 ○
미군범죄 근절 및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결의대회
 · 일시 : 오늘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
 · 주관 : 다비타의 집, 두레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등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6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강사 :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 일시 : 2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서울역과 숙대전철역 중간 라사라복합학원 건물 3층)

국제인권소식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95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제3차 준비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1백58개국 정부 대표들과 6백47개 민간단체 대표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등 16개 특별기관이 참가하였다.

코펜하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사회개발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등 문안의 95%에 대해 합의하였다.

합의가 안된 4대 쟁점사항은 외채청산, ODA(공식개발지원금) 증액, 노동자 권리확보, 과도경제국(동유럽등) 지원문제등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개도국의 일국 국가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사회발전 문제를 놓고도 각국은 77그룹과 유럽 및 G-7간의 전형적인 남북 불리갈등을 재현했다. 냉전 시기 동서갈등이 남북갈등으로 부활한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부국 진영은 사회개발의 요건으

로 각 나라별 사회개발 전략의 수립, 각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사회권, 개발권등 인권조항을 강조해서 개도국 당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안으로는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경제적 해결을 강조했다.

77그룹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쪽은 나라별 책임이나 각국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이 뚜렷한 문안으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라별 전략보다 국제적 지원과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대책이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쪽 진영은 무역과 노동자권리의 연계 등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를 주권간섭으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으로 시장안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외채탕감 및 산업구조 조정계획의 변화를 요구했다.

세계 경제는 발전하지만, 실업은 1억2천만명,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 7억, 빈곤에 처한 10억의 인구가운데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중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보적 민간단체들은 미국의 브레튼우즈체제가 미국의입장에 의해 좌우되고 그런 증거로 아프리카에서 파탄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한다. 민간단체들은 공식개발지원금(ODA)의 50%를 기본적 인권에 쓰라고 요구하였다.

한국민간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무국장 이대훈, 경실련 정책실 연구위원 과창규씨 2명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였고, 정부 대표로는 서대원(외무부 인권사회과)씨등 10명이 참가하였다.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1월, 필리핀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의 케손시에서 필리핀 인권단체연합(PAHR) 주최로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가 아시아 지역 23개국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인권 교육을 통해 진정한 개발을 향한 민중의 권한 부여'였다. 사회사업가(social workers)가 인권에 대해 배워 현장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인권과 사회사업가'의 응용, '유엔기구와 제도의 적용'등의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또, 회의 세계날에는 현장방문의 기회를 가졌는데, 정치범들이 수용된 필리핀의 감옥을 방문한 이들은 민간단체의 감옥 안 방문이 자유로운 점, 신문과 텔레비전을 자유로이 볼 수 있고 외부의 의사그룹이 매일처럼 들어와 진찰을 해준다는 점, 정치범들이 체중 체크를 받으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던 점 등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 인권 협을 대표하여 김은영, 문헬레나씨가 참석했다.

재일한국인등 정치범 석방 요구 일본 서명부 전달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구성단체 회원인 도시미즈 시요리씨와 스미다니 아키라씨는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재일한국인 정치범 손유형·이현치씨등의 석방 및 한국인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일본인 8천7백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10년이상 재일한국인정치범 석방운동을 벌여온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는 '민권협·한국정치범구원위원회', '손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 '구미유학생사건 관련자위원회', '장의균씨를 구원하는 모임', '이현치씨를 구원하는 모임'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서명작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말까지 1·2차에 걸쳐 받은 것이다.

또한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는 한국방문에 앞서 일본 외무성 장관에 동 같은 내용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계속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면회를 요구해 왔으나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법무부측은 거부의 입장을 나타냈다.

도시미즈씨는 "최근 들어 한국정부가 정치범과의 편지왕래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면회금지 등 교도소내 처우측면에서 볼 때 과거군사정부와 문민정부와의 실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인권협 95년 활동방향 논의 위한 토론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 대표 고영국, 인권협)는 10일(금) 오후 7시부터 11일 오전까지 종로성당에서 협을 대표하여 김은영, 문헬레나씨가 참석했다.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족으로 <인권하루소식> 제작, 기타 업무를 보는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286, 386, 486, 흑백이나 컬러 모두 좋습니다. 노트북은 더욱 좋습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아동의 권리 조약 제1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운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이 9일 오후 6시30분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어린이도서관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는 해당국 민간단체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반박보고서 준비를 위한 공동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조약 및 모임의 취지설명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뒤따랐다.

이날 검토된 내용으로는 ▲반박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제 구성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에 대한 명칭 문제 ▲반박보고서 작성의 활동이다.

아동권리조약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르지만 조약이 협약보다 강제력을 가지며, ‘아동’의 용어는 18세 미만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이라 불러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반박보고서 모임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로 의견을 모았다. 반박보고서 외에도 연대회의 사업으로는 조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시킬 것을 세웠다. 또한 정부에 아동의 권리조약 이행추구서를 보내며, 민간보고서 작성된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낼 것을 결정했다.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제 구성문제 논의에서 이날 참석자는 단체대표 자격 참석자 외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내 공식적인 참가여부(옵저버, 공식참가)를 전화로 알리기로 합의했다. 그뒤 13-15일 내 참가단체 확대를 위해 다른 단체들에게 참가권유공문을 띄우는데, 연락은 임시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91년 12월 유엔 아동의 권리조약

이 국회 비준을 거쳐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했다. 94년 9월1일 현재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백66개이다.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2년안에 조약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데, 한국 정부는 94년 11월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95년 10월16-20일까지 제네바에서 비공개로 사전(Pre-sessional)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한국, 예멘, 아일랜드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반박보고서를 낸 민간단체가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반박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는 반박보고서를 7월1일까지 보내야 한다.

그뒤 한국정부보고서는 내년 1월16-20일까지 열리는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된다.

○ 행사안내 ○

- 민족시인 김남주선생 1주기 출판기념회 및 추모 문학의 밤
 일시: 95년 2월11일(토) 오후4시
 장소: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강당
 주최: 민족시인 김남주선생 추모사업회 준비위·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광주추모식- 12일 오전10시 망월동 제3묘역 광주 망월동묘소 참배 대절 버스가 전일 준비됩니다.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토론회)
 -외국인변호사 보수제도와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95년 2월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793-8364)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6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강사: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 일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서울역과 숙대전철역 중간 라사라북장학원 건물 3층)
- 수강료: 4천원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지난해 11월4일부터 용산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가해미군 소환촉구 집회를 벌여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월10일까지 미당국측이 가해미군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18일 대국민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서울역광장 집회뒤 용산미군기지를 인간사슬로 포위, 항의할 계획이며, 설은주씨등 세모너 폭행사건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세모너 폭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에 가해 미군의 소

환을 요구해왔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문제의 근원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한미행정협정 개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9항에는 주한미군은 한국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10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제7차 규탄기도회에는 두레방송단체와 단국대, 중앙대생 등 1백50여명이 참가, 서울역까지 행진을 했다.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헌법 제20조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이들 규정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화 되어 있었다.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80년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이택승씨는 9일 대검찰청에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 이희성 80년 당시 기업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 4명을 삼청교육 관련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인 권 간 행 물(단체)---

- AI Documents and Publications December 1994-국제 엠네스티 본부, 런던, 1995.1.
 · 주요내용: 국제 엠네스티가 1994년도에 발간한 자료집과 간행물 등 색인집
- 함께걸음 95년 1/2월 합본호-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 해외보고서-유니세프에 비친 제3세계 장애아들/교육-장애우교육교사 설문조사· ‘선생님들이 심각하다’/지상중계-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과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헌법 제20조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의 대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노동법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노동조합의 설립신고/판례 1-조직대상 중복 안되던 지역노조 설립 가능/행정심판례-극소수의 지역노조 설립, 타근로자 결성권 침해/판례 2-지역노조 설립, 경제권 단위 아니어도 가능/판례해설-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의 적법성/노동법 5문5답(64쪽)
- 법률 제82호-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 주요내용: 인권활동-여성의 전화 94년 사업일지/이순심씨 항소심에서 3년 선고(16쪽)
- 함께 가는 여성 통권89호(95.1)-한국여성민우회(☎269-5763*5)
 · 주요내용: 특집-94년을 빛낸 한국여성민우회 10대 사업/긴급진단·세계화 바람-국민이 소외된 세계화, 국민이 주체가 된 세계화(20쪽)
- 구속노동자후원회소식 특별호(95.1.13)-구속노동자후원회(☎709-2307)
 · 주요내용: 성명서-경찰프락치 임윤선을 전국에 고발한다!/임윤선, 돈을 위해 동지를 팔아먹다(4쪽)
-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해결방안(비상근 연구위원 논문집)-법무연수원(☎0331-281-3140)
 ·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환경정서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278쪽)
- 노사 쟁점사례 분석(근로기준법 질의 회신집)-노동부(☎500-5566*8)
 ·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와 함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

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했다. 비디오테이프를 촬영한 대구 경일여상 교사 이상춘(38)씨는 증인으로 나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해 찍은 비디오테이프에 원씨의 모습이 담겨 있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비디오테이프에는 10월 9일 1시 32분이 나와 있고 학부모 줄다리기 게임을 시작하기 바로 전 원씨와

여자친구 이씨, 이씨의 조카들 3명이 운동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3초 정도 담겨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날 유치원 전속 사진사가 운동회날 오후 1시 15분께 찍은 사진가운데서 원씨의 모습이 들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운동회 참석 사진에 대한 조작주장에 대해 "피고인 쪽이 증거로 제출한 필름을 경찰과 변호인단 입회 아래 외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정된 부분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이 예상되었으나 이정빈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출두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오며 따라 증인 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20일 13차 공판으로 사실심리를 끝내고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등 추진

지난 11일 광화문 성공회 수녀원에서 「서울평화교육센터」(원장 이운구)가 주관한 평화교육네트워크 2차 모임이 있었다.

평화교육네트워크는 앞으로 평화·인권교육 홍보, 단체와 개인간의 이해와 정보교환등을 위해 비정기적인 모임을 계속할 계획이다. 2차 모임에는 조계종 원심회, 전교조, 크리스찬아카데미, 인권운동사랑방, 유네스코등 5개 단체와 교육학 교수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 공판안내 ○

- 2월 14일(화) 정윤희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용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봉(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목) 문국진, 10시, 서울민사 559호, 고문후유증 국가손배
- 2월 17일(금) 노영근 2시 서울형사 422호 업무방해 한규한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김용우(생사건)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선고) 김기현 2시 서울형사 422호 국보법 위반
- 2월 18일(토) 홍순호 10시 서울형사 422호 직무유기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전면폐지 주장하는 의견도 36%이상 차지하였다.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법원에서 가진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에서 "변호사수임료 인상에 대한 대한변호사회회의 입장이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문결과

에 따르면 50%의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데, 현행 수임료 상한 기준인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수임료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개 성공보수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회 협회에서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외 4인)는 지난 1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조작간첩 '부산 신씨일가 사건'을 재편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신씨일가 사건은 외항선으로 근무했던 사촌 오촌간인 신귀영, 신춘석, 서성철씨가 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씨와 참고인 한정도씨의 진실을 향한 생생한 육성 인터뷰가 실려있다.

박씨는 66년 수사기록에서 신춘석씨와 함께 051탄약창고부대, 수영국제공항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사실없고 당시 고문에 의해 거짓증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측 참고인이었던 한씨도 "신귀영씨에게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출력관계나 경비실태에 대해 말한적 없었고 나

는 자재과에 근무하기 때 문에 그런 사실은 몰랐다. 당시 나는 맞지 않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록에 서성철씨가 72년 4월 근학서점에서 항만시설지도를 구입하여 조총련에게 전했다는 사실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산 광복동에 소재한 근학서점 주인 정종환씨는 "75년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자리에 이발소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인들을 종합해보면 부산신씨일가 사건은 80년 신군부치하 비상계엄상태에서 대공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뒤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

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귀영씨는 천주교 도소에서 남은 행량을 살고 있고 서성철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0년 감옥에서 옥사했다. 91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서 살고 있는 신춘석씨는 "나는 결코 간첩이 아니다. 물고문, 전기 고문 때문에 거짓진술을 해야했다. 죽기전에 힘 다했는데까지 누명을 벗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재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비디오 구입 문의는 전화 777-0643으로 하면 된다.

주간 인권 흐름

(95년2월6일부터 12일까지)

- 6일, 대한변협, 김재옥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신원확인없이 단 순변사처리했음이 드러나
- 6일, 창원지법,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9명 연대해서 30억 배상할 것을 판결
- 6일, 서울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 6일, 광주지법,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 7일, 서울지법,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등 무혐의 처리
-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상습적 성폭행 사건 조속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7일, 프랑스 연합노동조합연맹, 교사 감축등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반대하여 하루동안 전면 파업
- 8일, 고문방지조약 우리나라에 발효되다

- 8일, 지문날인철책 최창화 목사, 폐암으로 사망
- 8일, 노동부, 임신노동자 월1회 태아검진제, 출산휴가 84일로 늘리는 방안 확정
- 8일, 중국동포 김순희씨, 8개월 법정투쟁 끝에 도둑누명 벗어
- 8일, 서울지법, 연극 「미란다」 연출자 최명효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씨, 현재 판결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연대회의' 구성키로
- 10일, 2차대전 시절, 일본 731부대소속 6명, 생체실험책 발간
- 10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살제도 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것 확인했다고 발표
- 10일, 미국 에너지부, 과거 냉전시대에 어린이, 신생아, 외국인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 10일, 정부, 노조 전임자임금 노조에서 충당하는 방안 추진키로 결정
- 10일, 일본인 작가의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 인공기 이유로 전시관에서 철거돼
- 10일, 프랑스 정부, 교육개편안 철회
-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두밀학부모, 법적 근거없는 통지 저의에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은 "94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학교에 등교치 않아 94학년도가 종료되는 95년 2월28일이 되면 당해 학년과정을 이수치 않음으로써 상급학년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평군교육청 서효준관리계장은 "유급이 아니라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통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청은 21일 열리는 재판의 최종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통지문을 받은 두밀학교 학부모들은 당일 회의를 갖고 21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종실(학부모 대표)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공문을 띄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이들은 1년

가까이 마을회관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며칠 다닌다고 달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유급을 당하게 되면 자퇴서를 내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학부모들은 지난주 두밀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3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6차 공판이 14일 오후4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박종호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우조교측 증인으로 최영준(서울대 85학번, 93년 당시 화학과 재학중)씨가 나와 지난 4차공판(94.12.6)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강준건(전주대 화학과)교수의 진술내용과 엇갈리는 증언을 했다. 이날 강씨는 "사건발생 당시 우조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물었으나 우조교가 부인했다"고 증언했다. 다음공판은 3월 21일.

한편 다음주 21일 '성희롱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최영애성폭

력상담소장등)이 여전도회관에서 조찬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AI, 정부에 석달운세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석달운(64, 무기)씨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제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에게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 전부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고문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석달운씨는 한국전쟁때 실종됐던 친척 박양민씨를

만나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무기선고를 받은 이후 현재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

노동부, 외국인산업연 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어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보다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재율이 높은 3D 업종에 취업하게 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매일 아침 팩스로 받아보는 인권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주위에 한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 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회의 6주째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민족자결권(9)에 대한 토론이 별다른 쟁점 없이 끝났으며 남아공(5,6,15)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둘째주에는 인종주의(1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7), 발전권(8), 외국인노동자(13), 소수집단(20), 종교적 불 khoan용과 차별(22)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장 밖에서는 세계주 후반부터 이루어지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둘러싼 협상과 로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주에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레네 펠베(Rene Felber)씨의 보고서 결론이 파문을 일으켰고 기대했던 남아공 민주화 및 불처벌(Impunity)에 대한 토론은 제외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주에는 유럽의 인종주의와 외국인배척(Xenophobia)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미국내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목을 받았으며 작년에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유대교 민간단체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한편, 3월초 열리는 코펜하겐 사회발전 정상회의(WSSD)의 영향으로 발전권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겁게 이루어졌으며 발언자 수 또한 가장 많았다.

1. 특별보고관 제도는 '면 죄부' 구실에 불과한가

-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레네 펠베씨 '폭탄' 선언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펠베씨의 보고서가 특별보고관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위스 전 외무부장관이었던 펠베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는 인권위가 나름대로 일하고 있다는 면죄부 구실을 제공할 뿐 실질적인 인권침해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평화협상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다소 '충격적'인 결론은 성급한 것이라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펠베씨는 나중에 보고서의 결론에서 "인권위의 지나친 정치화 경향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2. 남아공 인권문제 의제에서 제외

-불처벌(Impunity) 문제 거론 가능성 사라져

10년이 넘게 인권위에서 다루어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작년 4월 만델라 정부의 등장과 함께 공식의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위의 각 지역대표는 첫주에 협의를 거쳐 '남아공의 인권침해'(의제항목 5)와 '남아공 민주화 이행과정 모니터와 지원'(6), '아파르트헤이트 조약 이행'(15)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차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와 차별성을 지니는데 제도적 인종차별문제는 앞으로 인종차별철폐조약(CERD)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봉사회(IS) 아드레안 졸라(Adrien Claude Zoller)씨는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남아공 내부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에 책임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정권을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들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는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승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3. 유엔인권위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사무총장 아다마 디엥(Adama Dieng)경고

지난 2월3일 주제네바 미국대표부의 주선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법률가협회 사무총장 아다마 디엥씨는 "대다수 정부가 인권위에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인권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서 인권위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난 48년 대다수 정부가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 또는 실천하다 희생당한 전세계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 뒤 그는 "민간단체(NGO)는 국제인권기준의 제정 이외에도 구체적 적용과 실시를 감시하는 감시자(Watch Dog)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보여졌듯이 민간인권단체의 공헌이 너무나 '성공적'인 나머지 그 댓가로 오히려 인권위에서 작년에 60개 좌석이 12석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독선과 횡포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장점을 이용해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민간단체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세계의회(World Parliament)"의 구성을 앞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는 인권고등판무관 호세 아얄라 라소씨와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미셸 한센씨도 참석했으며 전세계에 텔레비전으로 30분동안 생중계되었다.

4. 인종주의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전국적 캠페인 나서

(3면에 계속-->)

(2면에서 계속)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수호자로 자처해온 미국이 인종주의 문제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 집중적인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표단은 2월7일 오후 회의장 21호에서 작년 10월 미국 전역을 돌며 가진 인종주의 추방 캠페인 설명회를 가졌다. 미국감리교회의 대표인 앤 마샬(Anne Marshall)씨는 "그동안 미국인들 사이에 인종주의를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권은 남아공등 제3세계 고유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를 국내법 차원의 민권(Civil Rights)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국제인권법 차원의 인권(Human Rights) 문제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캠페인의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2일부터 시작된 인종주의(의제 항목 16)에 관한 토론에서 멕시코 등 일부국가의 많은 민간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187호 법안(일명 SOS법안)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내의 인종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베닌(Benin) 출신의 인종주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마우리스 글레레-안한조(Maurice Glele-Ahanhanzo)씨는 지난 94년 10월 가진 미국방문보고서(E/CN/4/1995/78/Add. 1)에서 "지난 30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사회에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종주의 단체의 설립이나 인종주의 선전금지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80년대 건강, 주택, 교육 및 고용분야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대표는 발언을 통해 미국정부가 지난 94년 인종차별철폐조약(CERD)을 비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보고관의 일부 권고안은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해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반박했다.

5. 발전권 둘러싸고 남북간 뜨거운 '공방전' 벌여
 -보편적 권리에는 합의, 해석은 제각각
 코펜하겐 사회발전을 위한 정상회

의(WSSD)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인권위에서도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의 해석을 둘러싼 남북간의 공방전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항목 7)과 함께 진행된 발전권(항목 8)에 대한 토론에는 과거와 달리 대다수 국가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위 둘째주 내내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언이 문제점을 나열하거나 과거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등 내용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측을 대표하는 중국은 "발전권이 개인과 집단의 권리 양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기본적 경제적 권리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 책임을 지닌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영국 외무장관 더글러스 허그(Douglas Hogg)씨는 '민주주의-발전-인권' 삼자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발전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의 일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인정이 동등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므로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경제개발이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여 다른 권리를 제한 또는 부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SAP)의 무차별 적용에 의해 제3세계 곳곳에서 대량 실업 등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유엔의 통제하에 둘것 그리고 개도국의 발전권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채를 탕감하고 원조를 증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의적 구금, 고문, 언론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에서와 달리 경제권과 발전권에서는 민간단체와 남측 정부가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남북한 정부대표 나란히 인권위 참석
 -남한 대표 2회 발언, 북한대표는 '아직' 침묵

이번 51차 유엔인권위에 처음부터 남북한 정부 모두가 참석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 정회원국으로 지금까지 2번 발언을 했으나 참가자 자격의 북한대표는 아직까지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인권위 내제날인 2월 2일 허승대사가 의제항목(item) 4번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와 9번 민족자결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지난 93년 9월 서명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둘째주 첫날인 2월 6일 이준희 참사관은 의제항목 16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 제 3연대(年代)행동계획 실시'에서 인종주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마우리스 글레레-안한조(Maurice Glele-Ahanhanzo)씨의 임명을 환영하면서 "한국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시대에 관용과 상호존중을 증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주에 개막식과 발언이 예정된 날을 제외하고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주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서울 외무부 인권사회의 임재홍 과장 두명만이 참석하였다. 둘째주에는 줄곧 이준희 참사관이 혼자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참관자(observer)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민간단체(NGO)인 북한인권연구소의 대표가 첫날부터 회의를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남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낯뜨거운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하루소식 119호, 93년 3월 10일 참조) 남북한 정부대표는 조문과동의 후유증 탓인지 별다른 공식 및 비공식 접촉없이 지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0일부터 북한의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박성욱 부서기장은 이번주에 본격적으로 거론될 정신대 문제 사전로비와 준비를 위해 다른 동포 한명과 함께 인권위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민군 소속 전쟁포로(POW)출신의 비전향장기수인 김인수(68), 함세환(62), 김용태(63) 3인의 북한송환을 위한 제일조선동포회의 사무국장장 서준영씨가 인권위 회의장 외부에서 관련 팸플릿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네바=이성훈]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발표

부산대 전 학생회 간부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무기징역4년), 김수옥(92년 부총학생회장, 경영, 군복무중)씨 등 15명이 12일 오후 6시경부터 14일까지 부산경찰청과 서울보안수사대, 군 기무사 소속 사법경찰들에게 불법연행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약속장소, 군부대 등에서 강제 연행되었으며 1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었다. 연행 이후 이들은 모두 가택수사를 받았고 책과 자료들은 압수당했다. 현재 군복무중인 황진수(경제 26), 조창래(사회 24)씨는 연행장소가 15일 오후 9시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수사 보도에서 93년 총학생회장 정씨 등이 주사파 계열의 학생조직 '자주대오'를 결성하여 불법유인물을 제작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새로운 조작사건으로 부산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총학생회는 15일 오후 3시 규탄집회를 갖고 △구속학우 석방 △국가보법 철폐 △불법연행, 조작사수주범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했다. 또한 한충련(의정정태홍)도 1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며 10여분동안 시위를 하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부산대 연행자 명단>
 김수옥(27 경영), 정재호(25 무기), 이재호(25 한문), 이충범(26 중문), 이정민(25 법학), 장성복(24 국문), 김용석(26 법학), 박재우(27 산공), 변하정(25 일문), 강은미(22 식영), 황진수(26 경제), 조창래(24 사회), 정희중(24 기계), 변상천(25 사회)

민족단체, 일제잔재 청산 연대투쟁 결의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바른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민족회의)가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창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정이)도 "이번 사건은 작년 여름 신공안 정국

통일회의' 등 91개 단체와 운영위원으로 1백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이강훈(전 광복회장)·지익표(변호사)·이효재(정대협공동대표)씨 등 7명이 선출되었다.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 간부 구속 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노동탄압 연대투쟁 결의

16일로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대흥기계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장 이 전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13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회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협상의 진전이 없자 지난달 정의발생사고를 하였고, 1월27일에는 파업찬반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통해 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11일의 13차 교섭에서 13일부터 파업을 결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부천중부경찰서는 노조위원장 김명춘, 수석부위원장 홍상철, 부위원장 조경현씨를 각각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집에서 연행, 구속하였고, 이어 노조 사무실에 경찰 30명을 동원하여 컴퓨터와 디스켓등을 압수해갔다. 대흥기계 노조원 400여명은 13일부터 회사에 나와 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천지역의 노동조합 간부와 민주노총준비위는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결의하였다.'

●행사안내●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요일집회(74회)

일시:2월16일 오후2시/장소:종로3가 탑골공원
 내용:사례발표-김은주씨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안기부의 조작과정에 대해/조사보고-이기욱변호사 '베를린 현지 조사보고, 이후 활동계획'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편지자 주】 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실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해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해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인한 긴장 고조와 과학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 안재우기를 통해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다.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효력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

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 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 받는다.

<인권의 존엄>

1.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엄

c.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

정부는 수사 당국에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국에 의하면 인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피의자에게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르면, 사건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밤샘 신문이라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체포된 지 며칠 동안은 변호사의 접견권까지 거부 당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고문까지도 당한 예가 있다. 정부는 경찰이 부산의 한 특별 사건에서 신문 도중 살인 피의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고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93년 9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김삼석과 김은주 남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남매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 중에 신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전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과거 자기들이 당한 고문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 침해에 따르는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신체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를 학대 또는 고문으로 공격자를 기소한 적은 거의 없다.

d.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추방

남한의 법률 중에서 구금에 관한 규정은 모호하여, 검찰이 법률 해석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중 간첩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사람도 남한에 위협을 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보안법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구비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보고 있다. 94년 정부는 1993년의 2배인 200여명 이상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남한인들이 구속되었다.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근거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등 특수 상황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간은 최고 50일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이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면에 계속-->)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신문과정에는 변호사의 면담이 제한되고 있어 많은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

e.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의 거부

헌법에는 피고에게 많은 형사상의 권리를 주고 있다. 즉 무죄추정, 불리한 진술 거부권(묵비권), 형벌 불소급과 일사부재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이 포함된다.

인권 단체는 복역자 중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조각된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로 오랜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감금되어 있는 6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흉악한 고문도 참아야 했고,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규정한 국제 기준에도 저촉되는 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인권 단체는 이들 정치범 중에는 그들이 실제로 현재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 가석방이 거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경찰에게 그들의 행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과거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도청을 포함한 다양한 사찰 활동을 했다. 도청금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찰을 금지하였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도청금지법에 따르면 감청 기관원이 도청을 하기 이전 또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도청 직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몇몇 인권 단체는 많은 불법 도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 도청의 주범인지

를 조사하는 독립 단체가 없기 때문에 도청금지법은 계구실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 출판물을 읽거나 자기 집에서 북한 라디오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판단에 속한다. 학생 단체의 확고한 주장은, 정부 정보원이 대학 캠퍼스 내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직, 방송보도직 및 교육직의 취업과 승진을 일정한 정도에서 거부당한다.

2. 시민적 자유권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거의 모든 정치적 토론은 제한받지 않지만, 정부가 공산주의적 친북 사상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뉴스 미디어의 직접 통제에서 손을 뗀 대신에 매체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다. 과거의 많은 언론인들이 정부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인과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검찰은 계속해서 친북 또는 친공산책자를 출간, 판매, 배포할 때, 정부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 판례로는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 한 한국민은 순수한 학문적응도, 부의 축적 또는 지적 호기심을 목적으로 한 이런 류의 출판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자유 재량권으로 그런 자료를 출간, 소유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집회에 대해 외부의 방해도 금지된다. 이 법에 의해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집회가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집회 조직자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현 정부의 판단으로 그 집회 목적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집회도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1994년에는 대체로 시위가 격화되어 경찰은 이에 상당한 자금을 받아서 제한과 처벌을 내세웠다. 상반기에 정부는 시위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과격한 세력이 급증하자 즉 1994년 1/4분기 동안에만 4배 이상이 증대함에 따라 당국은 더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건국대나 서강대에서는 캠퍼스 내 집회를 금지시켰다. 과거 한국내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형태의 정치 집회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다. 93년과는 달리 정부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가 주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띠 잇기 집회 범위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또한 집회가 폭력을 발생시킬 것을 감안해, 학생단체와 반정부 단체 연합체가 주도하는 8:15에 있었던 "범민족 대회"를 금지하였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d. 국내 이동, 해외 여행, 이민 및 본국 귀국의 자유

국내 이동은 자유롭다. 그러나 출옥한 정치범의 이동은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제한 받지 않지만 북한 여행은 정부가 승인할 때만 허용된다.

1989년 8월에서 1992년 8월 사이에 정부 승인 하에 18개 그룹의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또 다른 2천 2백 47명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

과거에는 정치범으로 기소된 한국인들의 한국 귀국을 금지했다. 안기부는 9월 반정부 활동가로 수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해온 작곡가 윤이상 씨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해 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는 어떠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씨는 이 조건을 거절했고, 정부는 윤씨의 귀국을 금지시켰다).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7회)

아동의 권리조약

강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일시: 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인권하루소식> 14일자(341호)에 실린 천주교조직간첩진상규명대책위 관련 기사중, 비디오 테이프는 '판대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남북 공동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오는 27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열려 북한 정신대 할머니들 3명 참가 예정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가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문제되어온 일본당국이 중군위안부문제를 민간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피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측과 정신대 할머니들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간사는 "북한의 참석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일본에 정신대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아시아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정대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대만·필리핀·남북한을 포함해 5개국 이 참석한 가운데 중

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열린다. 첫날 27일에는 '왜 민간위로금에 반대하는가'는 주제로 열리며, 일본군 정신대 당사자의 증언과 각국의 발표가 따른다. 둘째날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와 결의문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강덕경 정신대할머니를 비롯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전과 화가 한혜송씨의 그림전 및 사진전이 열리고, 놀이패 「한두레」 및 김정란씨의 살풀이 등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아시아연대회의는 해마다 열리는 연례회의의 성격을 띠는데, 그 첫모임은 92년 8월 서울에서 가졌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각국 상황과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소개되어 필리핀으로 확산되는 등 그간 사업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1차 회의는 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뒤 아시아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7회)

아동의 권리조약

강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일시: 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 전화 715-9185

발장치 대책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씨가 나와 김삼석씨가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삼석씨는 편지에서 남매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공개와 국민사과, 관련자처벌을 요구하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프락치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일집회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제7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16일 오후 2시 탐골공원에서 열렸다. 집회에서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인 김은주씨가 나와 93년 9월 안기부 직원에 의해 끌려가 17일간 남산 대공분실 지하밀실에 갇힌 채 잠안개 우기등 고문 당한 사실을 증언했다. 뒤이어 베를린 현지에서 양심선언한 백홍용씨를 조사하고은 이기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는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람도 안기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백홍용씨가 프락치 활동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베를린 활동에 대해 말했다. 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와 국회에 김성훈, 윤동한씨등 안기부 수사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무고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

부산대 「자주대오」 공대위 구성키로 부경총련, 규탄집회 가져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300여명 15일 2시 부산대에서 '부산대간부용공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부경총련 결의대회'를 갖고 구속학우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치고 부산 서면에서 선전전과 규탄집회를 갖다가 부산경찰청 경찰에게 송영옥(부산대 2년)씨등 14명이 연행되었다. 한편, 부산민가협은 16일 12시 이번 사건의 구속 가족들을 중심으로 「부산대 구속학생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 부경총련,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남총련'과 광주 지역 노린다

남총련 자체 집계-2월 현재 구속 52명, 수배 11명

93년 11월 전남도경 지속기구조 설치된 보안수사대가 광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야 및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몽석, 남총련)이 16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내는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93년 11월2일 발생한 남총련의 '광주미문화원 타격투쟁' 직후 전남도경 산하에 전국 배태량급 수사관들을 차출하여 구성된 약 50여명의 경찰 수사관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광주지역에서 공간,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전담을 하고 있으며, 각 경

찰서는 보안수사대에 적극 협조토록 되어 있다고 한다. 보안수사대는 94년도에도 전남대 해오름 사건, 평화실현학생연맹 사건, 한총련 제2기 출범식 사건, 남총련 투신국 사건, 전남대 '분향소'사건 등을 적발하여 개가를 올렸고, 광주지역의 재야단체의 간부들을 수사하는 것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남총련에 의하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 지역에서는 단순 시위나 유인물 배포에도 경찰은 보안수사대를 앞세워 강력한 진압 작전과 연행을 되풀이하여 피해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남총련 자체집계에 의하

면 남총련 소속 학생중 93년 11월부터 2월 95년 1월까지 231명 구속, 현재 52명 수감중이며 공식 수배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94년한해동안만 3명이 실명했고, 10명이 뇌수술을 받았다.

남총련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탄압의 특징'으로 △김영삼 정권의 광주 고립화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간첩단 사건등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청년학생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연합등 지역 민족민주운동세력으로 탄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한다.

강규형(남총련 사무국, 26,여)씨는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이들

을 조직사건으로 구속하거나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등의 재야 단체와 남총련을 연계하여 사건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서는 지역단체장 선거 전에 보안수사대가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고, 이런 소문만으로도 재야,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남총련은 수배자 보호를 위해 수배자와 학생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속자가 있는 대학의 학과별로 후원회를 구성하는는 구속자와 수배자에 대해 지원활동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남총련 주요 대학별 구속자 수- 2월 현재>
전남대 57명, 조선대 49명, 호남대 10명, 광주대 13명, 동신대 9명, 조선공전 9명, 서강전문대 6명, 목포대 8명, 순천대 13명

유엔 인권관련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

(1995년 1월-9월)

- 아동의 권리위원회 제 8차 회의
1월 9일-27일 / 유엔 제네바
- 인권운동가지원 실무분과(인권위원회)
1월 16일-27일 / 유엔 제네바
- 아파르헤이트방지조약 3인그룹
1월 23일-27일 / 유엔 제네바
- 아동의 권리위원회 준비실무분과
1월 30일-2월 3일 / 유엔 제네바
- 민간단체협의자격 실무분과(경제사회이사회)
2월 21일-24일 / 유엔 뉴욕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6차 회의
2월 27일-3월 17일 / 유엔 제네바
-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 민간단체 포럼
3월 3일-12일 / 벨라센터, 덴마크 코펜하겐
-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 벨라 센터
3월 6일-12일 / 덴마크 코펜하겐
- 여성의 지위위원회 39차 회의
3월 15일-4월 5일 / 유엔 뉴욕
- 범죄예방과 형사정의 위원회
4월 3일-14일 / 튜닉, 튀니지
- 발전권 실무분과(인권이사회) 4차 회의
4월 17일-26일 / 유엔 제네바
- 고문방지위원회 14차 회의
4월 24일-5월 5일 / 유엔 제네바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12차 회의
5월 1일-19일 / 유엔 제네바
- 현대판 노예제 실무분과(인권소위원회) 20차회의
5월 19일-28일 / 유엔 제네바
- 경제사회이사회 정례회의
6월 26일-28일 / 유엔 제네바
- 원주민 실무분과(인권소위원회) 13차 회의
7월 13일-28일 / 유엔 제네바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7차 회의
7월 13일-8월 18일 / 유엔 제네바
- 인권소위원회 47차 회의
7월 31일-8월 25일 / 유엔 제네바
- 세계여성대회 민간단체 포럼
8월 30일-9월 8일 / 중국 베이징
- 제4차 세계여성대회
9월 4일-15일 / 중국 베이징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엠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학생, 재야 운동단체 대책 마련에 분주

국제엠네스티(AI)는 17일자로 전 세계의 회원들에게 「자주대오」 구속자에 대한 긴급행동을 요구했다.

AI는 "전 학생운동가들이 2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구속되었고,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다"고 지적했다. AI는 그들이 구속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비폭력적인 이들은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편지에서 말했다.

AI는 회원들에게 한국의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이들의 구속에 항의 편지를 즉각적으로 보낼 것과 <한겨레신문>과 <인권하루소식>에 이 편지들을 복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17일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로는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씨등 4명은 부산동부경찰서, 장석복(94년 인문대 학생회장)씨등 2명은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

며, 김수욱(92년 총학생회 부회장)씨등 9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기무사령부에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면회한 가족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무슨 사건으로 구속되었는지 몰라 하고 있으며, 군생활중 갑자기 끌려왔다고 전했다. 또 가족들은 그들이 잠을 못 잔 탓인지 매우 침울해하고 눈에 초점을 잃고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대 비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관우(29)씨는 "구국전위 부산경남책 박화국(29, 구속중)씨가 89년에 구국전위보다 먼저 자주대오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조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탄생되었던 과거의 조작간첩사건이나 조직사건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부산 서면 집

회에서 연행되었던 15명중 김봉준(동아대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임시의장)씨는 불구속기소되었고, 3명의 학생들은 10만원씩 벌금을 물었고, 이외의 연행자들은 혼방으로 풀려났다.

한총련과 부경총련, 그리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국군기무사가 「구국전위」의 결사체로 「자주대오」를 규정한 것은 이 사건이 조작사건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국전위와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사건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시기는 3월이나 6월 지방자치선거 직전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부산 민가협과 부산연합 등 재야단체는 다음 주초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추가구속자 : 방상훈(93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군부대에 연행 일주일 가족에게 전화로만 알려

17일 <인권하루소식>에 의명의 제보자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진주(22, 여)씨가 11일(토) 오후 직장을 마치고 자취하는 정릉의 집으로 귀가하다가 알 수 없는 연유로 군부대에 가서 일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제보자에 의하면 "14일 진주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회사에 이틀 연속 결근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황씨의 집안 친척중 고위급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통해 16일 확인된 바로는 황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현리 군부대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황씨가 연행된 이유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군부대에서 가족에게 19일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한다.

○ 오늘의 행사 ○

□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 오늘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전화: 744-1211)
- 순서: 시민대회/행진(남영동 미군사령부까지)/미군기지 인간띠잇기 시위(남영동 미군사령부 주변)
- 참가인원: 1천명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7회)

아동의 권리조약

강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일시: 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 전화 715-9185

---인 권 간 행 물(자료)---

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특집기획>

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반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 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만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7 여고 1학년)씨는 "어느날 강당에서 1 2 3학년 합동종례가 진행되고 있는동안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다. 교실에 와보니 책, 노트, 필기 도구 등이 흐트러져 있었고 가방지퍼가 열려 있어 심한 모욕감이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아무개(사 공고 1학년)씨는 "수학시험 성적을 공개한 후 바지를 벗겨서 틀린 숫자만큼 때리는데 허벅지 맨살에 철이 들어있는 텐트용 폴트로 맞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들간에 학칙위반 사항에 대한 밀고를 강요하여 친구간에 우정, 인간적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차별 또한 맛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공감감을 조성하여 복종과

훈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직교사였던 김 아무개씨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량학생들을 잡아서 다수의 학생들을 울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보다는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입장에 대해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이 지도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괴리감이 존재하고 유교적인 문화 풍토 때문에 대부분 훈육 위주의 관점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아들도 인간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며 현장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는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체감도'란 설문에서 당신이 만약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개선하고 싶다는 질문에 29.4%가 입시 취업위주의 교육을 선택했고 12.6%가 폭력, 폭언, 구타근절 등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을 들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방법으로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

◎ 사회발전을 위한 유엔 조사연구소 (UNRISD)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WSSD) 관련 간행물

□ Briefing Paper Series

- 마약 : 사회적 충격과 정책방향(Illlicit Drugs : Social Impacts and Policy Options)/영문/19쪽
- 환경파괴와 사회통합(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ocial Integration)/영문/29쪽

□ Occasional paper no. 6

- 초국적 기업/사회발전의 장애물인가 촉매제인가?(Transnational Corporations: Impediments or Catalysts of Social Development?) by Eric Kolodner/영문/51쪽
- 정체성 탐구: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The Search for Identity: Ethnicity, Religion and Political Voice) by Yusuf Bangura/영문/42쪽
- 황금기 이후:신지구질서하의 복지국가의 미래(After The Golden Age: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Global Order) by Gosta Esping-Andersen/영문/36쪽
- 인종의 다양성과 공공정책: 개관(Ethnic Diversity and Public Policy: an Overview) by Crawford Young/영문/43쪽

□ World Campaign for Human Rights

인권의 현장에서의 유엔의 행동(United Nations Ac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유엔, 1994 /영문/417쪽

□ 유엔 인권위원회 50차 회의의 보고서 부록 4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n The Fiftieth Session 1994 1월31일-3월11일, Supplement No.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994/영문/478쪽

□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 리스트(Lis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al and Social Council), 유엔, 1994/영문/220쪽

시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아동도 사생활에 대해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시되어 있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갖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16조에는 "어떠한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않으며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일 아침 팩스로 받아보는 인권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주위에 한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1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세모녀 폭행 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는 "미국과 외교 마찰을 고려하여 집회허가를 불허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로 원천봉쇄되었다. 이날 서울역 주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백여명 경찰과 전경이 배치되어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대회를 봉쇄했다. 전경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일보 사진기자 왕대석씨는 전치 2주 부상과 카메라 렌즈가 깨지는 피해를 당했으며 한총련 학생 25명은 연행되어 8시간동안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미군범죄가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라며 경찰의 처사를 비난했다. 또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마다 항의 시위를 조직하여 ▲한국인 감금 주한미군 사과 ▲미군범죄 규탄 ▲한미행정협정 개정 ▲한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시민, 학생 3백여명이 모여 경찰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후 동국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끝나고 시민, 학생들은 5시 50분경 미용산기지 미공보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앞으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시간전 급작스런 집회불허 방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2일 미

34단 지원단 마이클 펜더 게스트 미육군사령관은 김금순, 설은주, 설은하씨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의표명과 함께 "피의자에게 수감을 채우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교육을 통해 시정하고, 검거된 피의자의 이송 등 한국경찰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구속중, 전국연합)은 19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중앙당에서 대의원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 등 95년 전국연합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

국연합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운동,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은 서준식씨의 뒤를 이어 윤기원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서를 채택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의 중단 △모든 양심주의의 즉각적인 석방, 수배조치 해제 △장기수감에 대한 비인도적인 장기구금 중단,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약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배자 연행돼

서준연(24, 안산 현대합심, 고려대)씨가 16일 회사에서 야간근무중 서울경찰청 옥인동 보안분실에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민가협에 의하면 서씨는 지난 92년 9월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관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행사 안내 ●

- 외국인 노동자 신고, 체포 현상금 제도에 대한 규탄집회
 - 일시 : 21일(화) 1시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관 앞(여의도 순복음교회 옆)
 - 주최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화: 859-0430)
- 북경여성대회 한국 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준비위 제1차 워크샵
 - 주제 :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동향
 - 일시 :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 환경과 여성분과 준비위원회
 - 후원 : 한국 NGO위원회

● 공판안내 ●

- 2월 21일(화)
 - 두말분교, 10시, 서울민사 413호, 두말분교폐교철폐소송 이문옥, 11시, 서울형사 418호, 공무상비밀누설 김형욱, 11시, 서울형사 418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 2월 22일(수)
 - 문영기,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위반 신정길,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김병삼, 10시 30분,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위반
- 2월 23일(목)
 - 정재중, 10시, 서울고법 404호, 보건범죄특조법위반
- 2월 24일(금)
 - 이창복, 10시, 서울형사 418호, 국보법위반 온보현, 11시, 서울고등 302호, 강도살인등 서준식, 11시, 서울형사 418호, 보호관찰법위반

검열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입법에

고 기관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년 3월5일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법시행령 개정안등이 발효될 경우, PC통신에 대한 심의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반대파>
 - 오- 청와대 자유게시판까지 폐지하더니 이제는 통신을 검열하더니, 이려고선 세계화?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항의합시다
 - 홍- 통신약법을 만들려는 정부의 쓰레기 같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더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더니
 -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통신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통신 영역을 검열하기 위해서 일일 고용원식으로 15명이 만들어 놓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글을 검열할 것입니다.
 - 김- 통신검열시 통신을 그만 두겠다. 그리고 통신검열이 되지 않는 지하에서만 활동하겠다

<찬성파>
 최- 짧은 통신문화속에 욕설, 시비, 지적소유권 침해 등 범죄아닌 범죄가 난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따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주간 인권 흐름

(95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 <13일>
 - 부천 대흥기계, 파업결의만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부상
 - <14일>
 - 경기도 가평군청, 두말분교생 15명에 유급방침 통보 / 부산대 '자주대오'결성등 혐의로 전 학생회 간부 15명 긴급구속
 - <15일>
 - 대법, 수술후 숨진이유 입증책임 물어 의사사고 의사 책임범위 넓혀, '의사사고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 중군위안부 연대회의(2.27-3.1 서울)참석 북한 대표단 5명 판문점통과 허용 /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 제정등 추진
 - <16일>
 -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최영광 서울지검장 교체 촉구, '국보위 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악법 기획한 장본인' / 남아공, 백인학교시설 이용 요구 흑인 학생 1만여명 시위
 - <17일>
 -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 <18일>
 - 천주교사제단, 3월부터 북녘동포에 편지쓰기운동 전개 / '세모녀폭행 미군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참가 시민·학생 연행
- 지난주에는 '지자체 선거 연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여러 핵심부에 의해서 제기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자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천 대흥기계 노조의 파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30억 연대배상책임'을 판결한 최근의 판례와 더불어 올해 노동탄압이 민주노총 건설 움직임과 맞물려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해서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면이고, 일시적인 호도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고 앞두고 있다. 고문에 의한 범행의 조작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인권위 제51차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한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등 3개의 보고서에서 문제국가로 지적되어 지난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개선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의장 루이 주아네) 보고서에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씨 등 3명의 이름이 올랐다. 특히 한국은 92년부터 3년째 계속해서 자의적 구금 대상국가 명단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여 인권침해로 오랫동안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페루,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여전히 '인권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고서(E/CN.4/1995/31, Add. 1-3)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29개 국가 관련 모두 293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중국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3건으로 스리랑카(37건), 페루(25건), 모로코(18건), 알제리(16건)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93년의 경우 모두 181건이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에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60%의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실무분과가 채택한 결정은 모두 48건인데 이 가운데 이근희씨와 최진섭씨(29/1994)와 황석영(30/1994)씨는 모두 '범주 2'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월6일자 318호 참조).

결정은 3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범주 2'는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국제조약(B규약)의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와 관련되어 구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로써 홍근수 목사(47/1992),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28/1993)에 이어 지금까지 모두 4번 자의적 구금실무분과의 지적 대상에 올랐고 94년에 통보된 13개의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그 숫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한국정부는 모든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안건 10의 발언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국내 인권문제의 개선의지를 밝혔다. (2,3면에 관련기사)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 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리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틀째 외국인노동자들의 사면과 중기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박상규 그대 몸값은 얼마-5만원', '한달 일하면 15만원, 밖에 나가면 5만원 이것이 세계 화입니까?'란 피켓을 들고 약 2시간동안 시위를 전개했다.

'사회노동자의 집', 계은숙 간사는 "이번 중기협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의

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우현, 김재오씨 등 5명의 공대위 대표와 중기협 기획조정실장 이효차씨는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불법취업 노동자들을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공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의 관할 문제가 아니므로 정책적 차원의 일은 노동부나 통상사업부에 가서 문의하라"고 말해 정부 부처간에도 단일한 입장이 없음을 드러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력 현황과 대책'에 의하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94년 12월까지 1만8천8백16명이 입국했고 그중 16%인 3천18명이 사업장을 이탈했다.

두밀분교 소송 연기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중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제네바 소식 ④-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예정보다 일정이 늦게 진행되어 둘째주 주제가었던 외국인노동자(의제안건 13), 소수집단(Minorities, 20), 종교적불관용(22)에 대한 토론이 14일(화)까지 계속되었고 15일부터는 작년 8월에 열린 제46차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의 보고(19)와 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권리문제는 항목 19에서 다루어졌다.

16일 오전 늦게부터 많은 인권단체의 관심이 몰려 있는 의제안건 10 '모든 형태의 구금과 구속을 신청하여 지금까지 단일 의제안건 가운데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덕분에' 목요일은 이번 회기에서 처음으로 밤 10시까지 회의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발언자 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여 내셔널 위클리에도 의제항목 10이 일부 계속되었다. 의제안건 10에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동 티모르, 중국, 터키, 수단, 이라크, 쿠바, 터키 등의 국가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서방선진국도 포함되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에는 이번 회기에서 처음으로 결의안(Resolution)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첫 2주동안 다루어졌던 주제인 4,9,5,6,15,16 모두 5개 항목에 대해 모두 10개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이번주 14일 처음으로 전일본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모두 3개의 보고서에 한국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되었다.

1. 일본군에 강제 징집 재일동포 보상문제 첫 제기

-'반차별국제운동(IMADR)' 일본의 시민정치적국제규약(ICCP) 선

택의정서 가입 촉구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반차별국제운동(IMADR)은 지난 14일(화) 소수집단 권리문제(20)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했던 한국과 대만 출신의 재일본 거주민의 보상문제를 제기하였다. IMADR의 주 제네바 대표부의 레베카 마텐센(Rebeka Martensen)씨는 "45만명에 달하는 한국과 대만출신 전 일본군 가운데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상당수가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일본군처럼 연합군의 전선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전쟁범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대만인의 보상을 포함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IMADR에 따르면 지난 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국에 지불된 3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일본 거주 한국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4년 1월 26일 외무공보에서 '65년 한일협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한국인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2년 일본 대법원은 한 대만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 인권이사회가 세대갈 출신의 전 프랑스 군인의 통보사례(196/1985)에 대해 "국적변경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결정을 예로 들면서 재일한국인과 대만인의 문제가 인권이사회에 제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속히 시민적·정치적권리국제조약(B규약)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전쟁사망자의 가족과 부상자의 보상문제는 원호법(Aid Law)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전후 일본으로부터 분리 또는 독립된 지역 사이의 문제는 양자간의 특별조치의 규정을 받는 문제"라고 밝혀 한일협정으로 이미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일본이 지난 79년 B규약에 가입하고도 아직 이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소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에 이어 다시 도덕적, 정치적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신대'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일간 미묘한 신경전

-한국 인권소위 특별보고관 활동 지지 발언, 일본정부는 부정적

지난 15일 인권소위의 보고서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과 일본정주 대표가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이의 해석과 배경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 간에 의견이 분분. 한국정부를 대표한 이준희 참사관은 '정치적 대량학살(Political Genocide)과 인종청소(Ethnic Cleaning)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를 다루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참사관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민간단체가 기여한 역할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어서 발언을 하게 된 일본정부 대표 쇼헤이 나이토씨는 "92년 인권소위에서 채택되어 인권위가 동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주제가 13개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지난 회기에서 15개의 연구주제가 제안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강한

<인권하루소식>을 한부씩만 권해주세요. 홍보물과 구독엽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어조로 인권소위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소위원회가 특별보고관의 연구를 돕기 위해 개최한 세미나가 과연 효과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인권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인권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92년부터 인권소위를 통해 유엔인권기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중권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지난해 8월 46차 인권소위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린다 차베스(Linda Chavez, 미국)씨를 '전시중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나 이와 유사한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였고,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프랑스)씨와 레스르스 기세(Messrs Guisse)의 첫 중간보고서와 테오 반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교수의 '인권침해자의 보상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룬 바 있다. 정신대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즈카 변호사(47, 일본)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발언은 간접적으로 정신대 문제를 돕는 효과를 지니므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신대 문제가 인권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도즈카 변호사는 이어서 "최근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이번 인권위에서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패배를 자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번주 화요일 의제안건 11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3. 국제인권단체 '장기수 송환과 국보법 폐지' 주장

모든 형태의 구금과 연관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안건 10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발언이 등장해 국제인권단체가 '여전히' 한국을 인권침해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고문 반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Against Torture, IAAT, 본부 뉴욕)는 16일(목) 야간회의에서 미국의 인

권침해 상황을 비판하기 전에 칠레와 함께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정치범을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40년이 넘게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IAAT는 "북한과의 통일에 관심을 지닌 시민들을 구시대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IAAT는 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지구상의 유일하게 남은 초강대국(미국)과의 역사적인 관계 즉 좁은 국익의 틀에 따라 움직이며, 암묵적으로 억압적인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후원자 초강대국의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한편 전세계 9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 본부 런던)의 사라 와트(Sara Whyatt)씨는 17일 오후 발언에서 테러리즘의 방지와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표현의자유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 이디오피아와 터키의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400명 이상의 정치범 가운데 적어도 13명 이상이 출판과 언론인 등이다"고 지적하면서 "남북한의 통일과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단체의 회원인 이들 대부분은 허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허용하는 광의의 해석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지난 92년 7월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 심의에서 인권이 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결론으로 '국가보안법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라씨는 지난 84년부터 90년까지 약 7년동안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 등 동아시아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 대표는 이상의 발언에 대해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4. 이주 노동자 인권조약 가입 촉구 발언 잇달아

-94년 11월 현재 모로코와 이집트 2개국만 가입

이른바 '서방선진국'의 무관심과 의도적인 경시 가운데 이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계속되었다. 칠레, 필리핀, 모로코 등 자국의 노동자를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와 국제자유노동연맹(ICFTU)과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일부 민간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인권탄압 사례와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약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MWC)'을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자유노동연맹은 독립적인 '국제이주자권리 감시위원회'(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97과 143을 모든 국가가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보고서에서 '작년에 모든 국가에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인권조약의 조속한 비준, 가입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으며 94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모로코와 이집트 두 나라만이 가입하고, 칠레, 멕시코 및 필리핀만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인권조약(MWC)은 10년이 넘는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0년 12월18일 유엔 총회의 결의안(45/158)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20개 국가가 가입을 해야 발효되는데(87조) 한국정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아직 서명조차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이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제네바=이성훈)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씨가 92년 "제3자가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시인,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위반"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소한 건에 대한 '답변'(Reply)에서 정부는 "손씨는 시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참가했다. 또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시위대에 거리로 나가라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올 2월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내온 문서(Ref. N° : G/SO 215/51 KOREA REP(2))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답변'에서 "손씨가 파업지원을 결의한 대기업노조연맹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의견서에서 손씨가 제소하게 되었던 91년 2월의 대우조선노조 파

업지원을 대기업노조연맹회의와는 무관한 사건들을 들어서 "손씨는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에 참가했다"며 "(손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가 94년 5월 손씨에게 '통보'를 허용한 후 지난해 11월 25일 당사국 정부가 내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가입 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폭력시위 가담(90년 11월) 운운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제기한 91년 2월의 연대회의 성명서(대우조선 파업관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손씨가)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언급의 가치가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대우조선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회의 성명서가 그 배포행위를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대우조선노조 파업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도 아니었고 공공의 사항에 대해 평화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을 인용, 이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오히려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공익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연대회의 성명서가 국가안보를 침해했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대우조선의 기업이익과 같다는 말인가"고 하면서 "이런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보가 얼마나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관련기사 2면).

서준식씨 공판 무기연기

24일(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서준식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무기연기되었다.

많이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씨도 전민련 창립선언문과 관련,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다.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사형제도 자료집』을 오는 25일 발행할 예정이다. 20쪽 분량의 책자에는 ▲한국사형수 명단, ▲전세계 사형집행국가와 사형폐지국가의 통계치, ▲사형폐지관련 논문, ▲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등이 실려있다.

오완호 사무국장은 "사형집행을 지연시키고, 사형폐지 움직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천부를 발행할 예정이며 법조인, 정치인, 학계등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을 한부씩만 권해주세요. 홍보물, 구독엽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

1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두밀학교폐교철회 소송이 선고직전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3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두밀분교생 15명의 긴급여부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두밀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재판은 무한정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학부모 장호순씨는 밝혔다. 장씨는 "그러나 재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루겠다는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15명 학생들이 졸업식을 갖고 학부모들로부터 학용품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온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마을주민들이 선물을 전달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지난 21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이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관단체로는 NCC 인권위원회, 공동육아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단체와 참관단체로는 또 하나의 문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이다. 2월말까지 참가단체를 추가로 받고 있다(문의 715-9185).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단체의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씨 인터뷰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가보안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동아일보에게 정정보도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 '샘' 사건이 터진 직후 언론사에서 특히 동아일보는 경쟁적으로 '샘' 활동을 왜곡 보도하고 판결이 나지도 않은 공소사실을 신문에 실었다. 지난 해 여름의 주사파 파동은 '언론의 몹'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재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요구는 높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표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자치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국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샘' 사건

22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청소년 단체 '샘' 사건의 기소자 문영기씨를 끝으로 1심 재판은 막을 내렸다. 김용우, 고영국씨는 항소를 준비하며 국보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개월에 이르는 재판 진행동안 '샘' 회원 30여명은 줄곧 조직적인 재판방청을 해와 유호근검사로부터 "항의이상을 넘어서는 행동", "어린이이치곤 가슴스럽고 끔찍한 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또한 유 검사가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고등학생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의 표현, 사상, 결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샘'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수배중인 최은철씨, 내부수배중인 김영미, 나기석씨는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정민아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가슴은 아프기만하다. '샘' 회원인 주교준씨는 "가능한 빨리 '샘'의 제자리를 찾고 자퇴강요, 퇴학, 사퇴중용등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모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개월동안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웠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분담금과 일정, 후속활동, 보고서 집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 행사 안내 ◆

- 제3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한국형 경제발전, 제3세계의 모범인가?
·발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희선(경실련 정책연구원)/ 이시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 김유선(민주노동 준비위 집행위원), 김숙임(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 부위원장), 김승욱(기윤실 기획위원), 이목희(국민회의 정책위원장),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사회: 박상중(기사연 원장)
·일시: 1995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 정광훈, 오종렬의장 석방과 광주전남연합 재정 마련을 위한 3일 호프
·일시: 95년 2월 24일~26일(평일 오후4시부터, 토, 일요일 12시까지)
·장소: 고구려 호프(광주 충정로 1가, 조선대 동창회관 3층)
·문의: 062-225-8117
·박종화씨와 광주지역 노래패의 노래공연이 이어진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제네바=이성훈】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는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 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

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개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를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거나 폭력혁명과 직접 관계있는 사람이 없으며 '국가안보'라는 말이 너무 애

매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많다"며 한국정부의 반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인수, 함세환, 김용태 3명의 인도주의적 송환을 주장한 일본인 일본인권정보센터의 아키라 마에다 교수(39)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특별보안관의 권고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다"며 자신의 인도주의적 호소가 무시당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 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2월은 달이 짧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밀린 것까지 챙겨주십시오.

계좌번호
제일은행 128-10-131017
농협 011-01-404581
의환은행 057-18-33811-7
한일은행 112-182999-12-001
신한은행 355-02-035530

예금주: 서준식
상업은행 431-07-056582
조흥은행 438-06-016840
우체국 013292-001173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국민은행 015-21-0723-021

<IBA 세미나 보고서>

일본의 대응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응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응(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응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응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응감옥의 실태를 국내의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했다. 박 변호사의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나마 지난 14일 동경 시야부 국제연합대학에서 열린 '기소전 및 공판절차에 관한 IBA 국제세미나'의 내용을 전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제법조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연)가 연대하여 일본의 대응감옥문제를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이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세미나 발표자로는 박 변호사의 외에도 로즈하퍼(Ross Harper, IBA 회장), 다토 파람 구마라스와미(Dato Param Cumaraswamy, 현 UN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에 관한 특별보고자) 등이 참가했다.

일본의 대응감옥과 IBA 보고서 내용

일본은 검찰송치 이후에도 피의자를 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 1천2백67개소의 유치장이 대응감옥으로 사

용되고 있다. 대응감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대응감옥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일본 연 등에서 대응감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지만 일본정부는 수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BA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응감옥은 수사와 구금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 수준에서 지적했다. 또한 대응감옥의 존재에 관계없이 △기소전 보석제도 인정 △변비권의 완전한 보장 △변호인의뢰권에 완전한 보장 등과 피의자의 신문은 사실대로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이 고문금지조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

박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법관에 의한 신문제도의 결여 △구금과 수사의 미분리 △수사방법의 문제 △변호권 수준의 문제 등 네가지로 나누어 지적했다.

(2) 구금과 수사의 미분리 10일간 경찰서유치장에 피의자를 구속한 채 조사도 국제적으로 예를 찾기가 어렵다. 17개소의 대응감옥은 시설상태나 운용실태를 고려하면 일본의 대응감옥보다 훨씬 비인권적 실태인 것이 드러났다. 안기부의 20일간 밀실수사는 국제적으로는 발표하기조차 창피한 인권침해의 극한 상황이다.

(3) 수사방법의 문제 고문과 자백강요의 수사

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증거능력의 제한으로 막는 것과 수사관의 수사형태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의 조사실무규범에 의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중 8시간의 연속된 휴식, 식사시간에의 조사중단, 2시간 간격으로 다과제공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의 심야철야조사를 생각할 때 영국의 사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 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 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 전에야 집회금지통고를 보내왔다. 서울시지방경찰청은 “한총련의 참여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면서 ‘세모너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했다.

운동본부는 이의신청서에서 “한총련등은 회원단체로 94년 12월부터 모두 7차례 집회에 참여해왔으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벌여왔다”면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재결에서 당시 통고는 한총련의 시위전력을 들어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했다며, “이의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행사 안내 ◆

- 95' 정책토론회 및 제4회 평의회
 - <주제토론 1> 고난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주제토론 2> 회년의 빛에서 본 인권과 통일 등
 - 일시: 2월 27일(월) 오후 5시~28일(화)(1박2일간)
 - 장소: 크리스찬 아카데미 다습관(전화: 907-9594)
 - 주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393-4662)
- 3.1절 기념 토론회
 - <제1부> 분단극복, 일제잔재 청산 그리고 민족정통성 확립을 위한 「3.1절 민족자주선언」 발표
 - <제2부> 3.1절 기념 민족 토론회

분단 50년을 맞는 민족자주운동의 좌표와 진로-임현영(문학평론가) /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강창일(베제대 교수)

- 일시: 2월 27일(월) 늦은 7시-9시
-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종묘주차장 옆)
-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화: 745-5872)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게는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씨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50여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여 원종성, 옥영민, 남해경피고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아무개 피고인에게는 “사촌동생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과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또, 재판부는 원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강주영양의 머리카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정빈 교수의 유전자검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취재진을 비롯한 약 6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이로써 검찰의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확신’은 재판부에 의해 전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재판부는 속속 증언과 물증을 제시한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모두 수용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고문경찰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지존파 사건의 모방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 고 하여 지난해 경찰의 날에서 표창을 받고 진급한 관련 경찰관의 문제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아울러 강주영양 살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포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적 정치억압 등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행사안내 ●

- 문제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1심 재판을 끝낸 소감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나 그러한 것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가혹행위는 최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신 하에 가해 경찰을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고문경찰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여야 한다.

□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주제 :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장소:종로5가 여진도회관 / 일시:2월27일-3월1일
주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65-4016)
27일 오전9시~후8시 민간위로금 반대 각국 각국 발표
28일 오전10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대책발표
오후2시 문화행사(놀이패 '한두레', 김경란)
오후4시 종합토론 및 결의문 채택
오후5시30분 기자회견
3월1일 오전12시 제155차 수요시위 및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집회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편집자 주】 미국무부 『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여성은 보수적 유교적 전통때문에 사회·경제·법률적으로 남성에 비해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가 한정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88년 남녀 고용평등법을 제정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 회사중역과 정부 간부관리로 일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행이 만연되어 있으나 법은 적절한 보호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학대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동안 더 악화된 것으로 여성인권 단체들은 보고 있다. 91년부터 발표된 개정 가족법으로 여성의 호주권 부여, 재산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등 학대받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으며 이혼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거의 없다. 더불어 이혼녀는 고용기회를 제한당하고 재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 주며, 학대받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어린이 탁아시설의 수를 늘렸으나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여성의 강간 경험율은 상당히 높다. 92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여성 1천명중 8-9명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이후 보도된 사례는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범죄뿐만 아니라 강간까지도 고소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올 봄 서울대 교수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여교수는 거의 4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매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이례

적인 일로 취급할 뿐이었다.

<아동>

아동 인권과 복지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한 사회적 지출 예산액을 점차 늘리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보고된 사례는 최근 50건 이하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가출 아동의 수가 작년 7천명에서 거의 1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아동학대보고를 조사하고, 가족상담을 하며 가출아동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특별법이 없는 관계로 아동학대자들이 독립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자들을 기소,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다.

<소수민족, 인종, 종교의 소수>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존재한다. 호남지방출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영남출신 인사가 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호남지방의 경제발전을 고의로 저해했다고 믿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다 공정한 운영자금 지출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80년 5월 광주사태의 폭력 탄압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은 70년대 이후 사회적 차별뿐 아니라 법적 차별로 인해 이민을 갔다.

<장애인>

지역사회나 사회단체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처우와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용품이나 시설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들이 대하는 사

회적 차별 역시 일반화되어 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안과 학교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허용에 대해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정한 고용 할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6 노동권

a.결사권

헌법은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은 결성과 해체에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체 한국 노동자의 약 16.4%는 노조 조합원이다.

과거 정부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한국 노총 및 사무금융 노동조합과 연계하지 않는 노조를 인정치 않았지만, 몇 년뒤 노동부에서는 병원노련, 언론노련, 정부출연 노조 연합, 건설노련 등 4개를 공식 인정했다. 92년 한국의 법원은 합법적인 노조 연맹으로 등록하려면 한국 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노조가 존재하고 정부의 간섭과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정부는 노동쟁의를 선동하고 지연시키려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해 노조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노동관련 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93년의 11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6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중 약 30여명은 연말까지 교도소에 있었다. 94년 여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법외 노조인 전기협의 조합원 20명 이상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 6월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수 일간 운송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교조를 원래 급진적 목표를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립 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시켰다.

(3면에 계속 --->)

정부는 해고된 1천5백여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그리고 방위산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대중 교통, 공공부문,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결사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 기준까지 끌어 올릴 것을 권고했다.

94년 정부는 철도 및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연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전투경찰은 (주)금호타이어를 점거하고 있던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94년에는 고용주가 고용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탄압한 보고는 없었다.

91년 7월 이후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기타 노동권을 침해 때문에 미국 해외의 개인 투자 회사보장 계획이 정지된 상태이다.

b.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법적으로 정부에 승인되지 않은 노조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단체 협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권을 넓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공익 기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두개의 한국 가공 무역 지대(EPS, Export Proce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는 별도의 노동 재판소 제도가 없다.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법에 따라 노동부에 가서 반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전노협과 사무금융노조의 쟁의 개입을 제3자 개입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양 법률은 승인 노조 연맹 특히 한국 노총과 그 산하 노조와 일부 소속하지 않은 사무직 연합이 소속 노조를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 개입 금지는 비한국노총계 노동 지도자들이 거세게 비난하는 정책인데 변호사, 전문가 그리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제3자

가 하는 중재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임금법을 실행했다. 최저 임금 수준은 매년 재점검된다. 94년 9월 현재, 일인당 12달러(9,360원)로 올랐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이 면제된다. 그러나 한국은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상태로 두기 위해 최저 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 한국 노총과 다른 노조들은 최근 최저 임금제가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등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임금과 법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가지고 불법 노동자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고 모색했다. 그러나 6만 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주는 기준 이하의 생활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 노동자들은 항상 추방될 위험에 있으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과 노동조건이나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규 근무시간을 주 최고 44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무에는 통상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매주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 단체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높은 산업재해율로 고통받고 있다. 산업 재해율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주장하는 대중과 노조의 압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국제 수준으로 볼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시켰으나, 법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관이 부족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산업 환경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끝>

<광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발송이 한국통신의 가입팩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전송불능보고서'를 제외하고는 하루소식의 수신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입팩스의 기계적 장애 때문에 재발송 또는 삭제, 신규가입을 처리하는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그간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루소식이 지령 400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발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독자카드 정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 독자의 연락처(팩스번호외의)와 수신상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팩스번호외에 독자분의 성함이나 주소, 연락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발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파악된 독자분께는 정기적으로 수신상태를 확인, 개선하고, 기타 자료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불만이나 희망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에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한번의 자동이체 신청으로 덜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독자께서는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사회단체 등록과 함께 빠른시일내에 지로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간 구독료 납부가 미진하거나 전혀 없는 곳은 발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이후 발송이 중단되오니 계속 구독을 희망하시는 독자께서는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구독료는 더 풍부한 소식을 만드는 데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독자분들의 많은 체적질을 부탁드립니다.

1995. 2. 25.

<인권하루소식> 드림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북한 대표 불참한 채로 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막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 연대회의)가 2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종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일본·대만·필리핀 참석자 58명을 포함해 4개국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의 주제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 첫날에는 “왜 민간위탁금을 반대하는가?”는 주제로 이시가와 이치코(일본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회원), 넬리아 산초(필리핀 전 일본군 ‘위안부’ 대책위원회 대표)씨등 각국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시가와 이치코씨는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처럼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에 대해 그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지(우리여성네트웍, 재일교포)씨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역사인식의 변혁에 연결되는 문제이며 보상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받아야 한다”고 재일교포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만일 보상이 민간위탁금 차원으로 된다면 △위안부문제의 국가책임이 불명확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며 △일본 국민 총자선 사업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김정희(정대협 총무)씨는 “사죄는 일본 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 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가해자를 방치해온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국대표들은 아시아 여성들이 협력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간모금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된 해결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피해자 김순적(남한 전 일본군 위안부), 줄리아 포라스(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이 나와 일본군 위안부로 당한 고등에 대해 직접 배상할 것

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지낸 노명선씨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행사장인 2층 로비에서는 위안부 관련 사진전 등이, 식당에서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 30여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북한측은 “민간단체회의에 정부가 간섭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26일 오전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협은 26일 북한측의 갑작스런 불참 소식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우나 당초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이젤랑 돌러다오*

어디서 찾을 수 없는 / 잊혀진 이름이여 / 빛바랜 거리의 들녘은 / 서걱이었다.

무서운 비바람 속에 / 묻혀버린 처녀의 비명은 / 하늘 치솟았고 / 맑은 점점 어두워졌다.

땅 밑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 개처럼 끌려 간 아세아의 딸들 / 먹장구름 슬렁이는 슬픈 야경은 / 야수들의 세상이었다.

정신대는 이미 인간은 아니었다 / 여성의 상징은 개새끼의 하수고 / 밤마다 흥건히 흘러버린 배설물은 / 토약질

두려운 과거를 생각하기엔 / 애처로운 지난 날의 악몽은 / 세계 여인의 / 아픔 아닌가

고운 입술 찰랑였던 머리터럭 / 이젤랑 돌러다오 / 먼 훗날 영혼에 / 꽃불 하나 켜보리라

성대가 찢어질 때까지 / 세계 만방에 화낼 것이다. / 내 기어이 찾아가 말리라 / 잃었던 두 날개를.

* <편집자 주> 아시아 연대회의에 소개된 한국 정선대 할머니의 시 전문

● 행사 안내 ●

□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장소: 종로5가 여전도회관
 28일 오후4시 종합토론 및 결의문 채택/5시 기자회견
 3월1일 오전 12시 제155차 수요시위 및 제3차아시아 연대회의 결의집회

□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에 대한 경찰청 항의시위
 일시: 오늘 오후2시 / 장소: 경찰청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전화: 744-1211)

주간 인권 흐름

(95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업식장에서 박홍 총장 퇴진 요구하며 침묵시위 / 유엔, 올해를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현상금 5만원 방침’에 대한 항의

<22일>
 두밀학부모회,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생 3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에 맞대응하여 4백여명이 피고보조참가 신청 / 국제노동기구(ILO), 94년 세계의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수가 8억2천만명(전 세계 인구의 30%)이라고 발표 / 알제리 보안군, 보안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최수 1백여명 사살 / 손준규씨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3차가입금지 등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론서 제출

<23일>
 주미 마셜군도 대사, 미국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인체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측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선고, 이씨에게는 사형 선고 /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 위암으로 투병 중 사망

<25일>
 변협 대의원 총회, 변호사 수입로 인상 철회, 새회장에 김선씨 선출 / 인의협,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및 의료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행정쇄신위원회, 교정행정 쇠퇴기 마련-미결수 재판시 평상복 착용, 교정행정 교화기능 강화, 직업훈련 강화 / 국방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26일>
 북한, 제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대표단 불참 통보 / 동아일보, ‘생’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반론문 게재

<해설>
 지난 주의 인권 상황에서 압권은 역시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된지 4개월여동안 고문에 의한 조작이나 피고인 모두 공범이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는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행사장인 2층 로비에서는 위안부 관련 사진전 등이, 식당에서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 30여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회에서 미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미군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미군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경찰에 미군범죄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경찰이 미군측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28일 오후2시 경찰청 앞에서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또, 공문에서는 △미군등의 이름, 계급, 부대명, 나이, 인종, 몸무게등 개인정보 △사건, 사고 당시의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요원의 임무나 활동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 명시하는 것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지시는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처장 짐 클스씨가 24일 경찰청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로 다음날 미군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의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군당국은 최근 우리 사

팔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28년간 비전향장기수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89년 석방되었던 윤기남(70)씨가 24일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윤씨는 한국전쟁 때에 전남 보성지구 유격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다 53년 체포되어 15년간 복역하였다. 68년 1차 출옥 후 70년대에도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두차례 복역하였고,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뒤 청주보안감호소에서 89년 석방 때까지 복역하였다.

윤씨의 유해는 26일 오후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밀린 것까지 챙겨주십시오.

계좌번호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하루소식

95년 3월

(제352호 - 제373호)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여성차별철폐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한국정부 미온적, 일본정부 종래의 입장 되풀이, 북한정부 강력히 비판

아시아연대회의도 강력히 비난

<편집자주>일본의 중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제가 국내외 유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51차 유엔인권위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나타난 일본, 한국, 북한 정부의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반응을 소개한다.

【제네바=이성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1차 유엔인권위에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가 가장 관심있는 주제로 떠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이철 대표단장은 21일 야간에 있는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에서 국제적 차원의 대표적인 여성폭력으로써 '정신대' 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정신대 문제가 '그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이 크고 가장 잔인한 반인도주의(반인류), 반여성 범죄이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권과 군권이 동원되어 정연한 범죄행위로 진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현재까지도 이 범죄들을 실제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그 범죄사실을 역사에서 지워 버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 나려 하고 있다"고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

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정부가 <아시아평화친선기금>을 수립하여 중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와 인권소위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직도' 진상조사 촉구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국제인권단체의 거듭되는 비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이라고 불리는 "평화, 우호 및 교류 계획"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시아여성평화친선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집권당에 의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문제에서 23일 정신대 관련발언이 모두 6번이나 쏟아져 나와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발언 기록을 세웠다. 민간단체들은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무라야마 총리의 민간기금 조성 제안의 철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과 배상을 주장하였다.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시아여성평화친선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집권당에 의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문제에서 23일 정신대 관련발언이 모두 6번이나 쏟아져 나와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발언 기록을 세웠다. 민간단체들은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무라야마 총리의 민간기금 조성 제안의 철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과 배상을 주장하였다.

"민간위로금은 우리를 지지해주는 꼴"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31운동 76주년이자 3월의 첫 수요일인 1일, 정대협 제155차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아시아연대회의 회원등 200여 명이 참가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5개국의 공동집회였다. 배운 바람 맞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코끝이 빨개진 할머니들은 굳게 닫힌 일본대사관 철문을 노려보며 50여년간의 쓰린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군위안부였던 필리핀 태생 줄리 아코라스(66)씨는 "최근 일본은 개전 50주년을 맞아 과거에 대한 속죄는 거녕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외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줄리씨는 "민간 위로금으로 보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는 일본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할머니들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진정한 지존심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며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치를 수 밖에 없었던 전쟁'이라고 미화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산대 할머니와 아시아연대회의가 넘어야 할 산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일었다.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지난달 27일부터 3월1일까지 열린 아시아연대회의는 28일 참석자 모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일의 수요시위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민간위로기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다.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335호-351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2/4	335	1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 문제 논의 예정 / 청소년단체 「생」 회장에 3년 구형
		2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317-334호)
		3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317-334호)
2/7	336	1	조작간첩 사건 제심청구 어려움 직면-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 문국진씨 재입원 / 푸른영상, 출옥 장기수 다큐멘터리 제작 / 장기수가족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전개기로
		2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2/8	337	1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2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140여 국내의 인권단체 소개 책자 발간-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단체편람」 1판 발간 /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채택 못하고 3개 항목만 합의-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3	제네바 소식②-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2/9	338	1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 강요-동일이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 3명 중징계...검정고시 불 것 '권유'하기도 /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등 혐의손 배소송 /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 성명
2/10	339	1	특집기획-깃발하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2	<국제인권소식>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1월, 필리핀 제일한국인등 정치범 석방 요구 일본 서명부 전달 /인권협 95년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2/11	340	1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구성기로-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2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서울지검, 특별지시 / 전두환 최규하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인권간행물(단체)
2/14	341	1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 현행 변호사 수입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등 추진
		2	'부산 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주간인권호름(95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2/15	342	1	두밀분교생 15명 유급위기-가평군 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두밀학부모, 법적 근거 없는 통지 저지에 대해 의심 / 신고수축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 AI, 정부에 석달유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2,3	제네바 소식③-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 받아-51차 유엔 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2/16	343	1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경찰,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발표 / 민족단체, 일제강점기 청산 연대투쟁 결의-「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 간부 구속-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노동탄압 연대투쟁 결의
		2,3	미 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335호-351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2/17	344	1	남북 공동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오는 27일, 서울에서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 북한 정신대 할머니등 3명 참가 예정 /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일 집회 / 부산대 「자주대오」 공동위 구성기로, 부경총련, 규탄집회 가져 / 「생」 회장 집행유예
		2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남총련'과 광주지역을 노린다-남총련 자체 집계-2월 현재 구속 52명, 수배 11명 / 유엔 인권관련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1995년 1월-9월)
2/18	345	1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국제엠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학생, 재야운동단체 대책 마련에 분주 / 민간인 군부대에 연행 일주일, 가족에게 전화로만 알려 특집기획-깃발하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인권간행물(자료)
		2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떼잇기' 무산-'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배자 연행돼
2/21	346	1	검열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효 /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주간인권호름(95년 2월13일부터 19일까지)
		2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당해, 정부대표 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외국인산업연수생공대위」 항위시위 / 두밀분교 소송 연기
2/22	347	1	제네바 소식④-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2,3	파업지시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정부, 손준규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 / 「생」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 / 서준식씨 공판 무기연기
2/23	348	1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폐교철폐소송 끝까지 하겠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생」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씨 인터뷰 / 「생」 사건 지금
		2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민변, 의견 밝혀
2/24	349	1	<IBA 세미나 보고서>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집회금지 두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서울시 주한미군법외근로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2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판다-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1심 선고,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게 사형 선고 /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 문재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인터뷰-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2/25	350	1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②-각종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2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②-각종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광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북한 대표 불참한 채로 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막 / 시-이젤랑 둘러다오
2/28	351	1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 주간 인권호름(95년 2월20일부터 26일까지)
		2	

3월3일부터 구독료를 납부치 않는 독자에게는 <인권하루소식>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독자의 연락처(팩스번호외의)와 수신상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팩스번호외에 독자분의 성함이나 주소, 연락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발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파악된 독자분께는 정기적으로 수신상태를 확인, 개선하고, 기타 자료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불만이나 희망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그간 구독료 납부가 미진하거나 전혀 없는 곳은 발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이후 발송이 중단되오니 계속 구독을 희망하시는 독자께서는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구독료는 더 풍부한 소식을 만드는 데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독자분들의 많은 채택질을 부탁드립니다.

1995. 3. 2. <인권하루소식> 드림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여성차별철폐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지난 1월5일 개정 행형법이 공포되었으나 행형 현장인 교도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76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교도소내 인권실태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다.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삼석(30)씨는 2월 22일부터 교도소측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2월28일 면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씨는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건(91년도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

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이내'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이 인원점검과 이동시간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목욕시간은 5분 전후라고 말했다.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밀분교 포기 못한다 학부모, 교육감에 입장 전달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부모 일동은 2일 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색국교로 임시등교했으나 결코 두밀분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무기한 연장으로 자녀들의 회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색국교로 등교했다고 밝혔다.

고난모임, 올해 인권과 통일선교를 중심사업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모임)은 2월27일부터 28일까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제4회 정기 평의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고난모임은 국가보안법등 악법폐지, 감옥의 인권개선, 반고문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로 군사정권 시절인 60년대부터 줄곧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한 패리스 하비(Phris J. Harvey)목사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인권하루소식>은 2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한 하비 목사를 만났다.

-인권문제에서 노동문제로 관심을 돌린 이유는?
원래 난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인권문제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해서 보장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주로 경제 때문에 일어난다. 인권법을 바꾸기 위한 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김정권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미국에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한 때문에 민간대통령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이후 인권상황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계속 구속되고 있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구속, 수배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판하는 국내의 노동법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것은?
91년도였다. 그때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로 걸었던 현수막을 보곤 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공산주의자다. 하비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적어 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현재 하는 일은?
국제노동권교육조사센터에서 소장으로 활동한다. 제3세계의 노동권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교육과 조사활동을 한다. 한국기업도 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악랄한 노동착취가 행해진다. 한국 국민들도 이런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제네바 소식 ⑤-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내제주 회의 주요 쟁점들-

김선명, 안학섭씨등 장기수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제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불법구금과 고문등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명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공감을 표하는 행동이 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로 범죄화되어 자의적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한의 법집행 관리자들이 국보법을 적용하여 여전히 국제법에 보장된 활동과 비폭력적인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전 양심수이자 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홍보물 관심 불러 일으켜

민가협에서 제작한 김선명씨 석방 영문 홍보물이 인권위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호소엽서가 첫날인 20일 모두 등이 난 것은 물론 인권위 회의장에 들어가 진열된 홍보물들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명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공감을 표하는 행동이 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로 범죄화되어 자의적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한의 법집행 관리자들이 국보법을 적용하여 여전히 국제법에 보장된 활동과 비폭력적인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전 양심수이자 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

안을 소개한 인도네시아 대표는 "발전권에 관한 선언의 실현을 항구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설립을 향해 실무분과가 노력해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실무분과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투표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전 의사표명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등 10여개 서방국가들은 사전 약속을 한 듯 연이어 투표보다는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여 한때 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과 영국등은 "결의안의 자구가 매우 편향적이며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결의안이 다수결에 의해 통과 되면 결의안의 효력발생에 많은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유럽과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 모두가 반대를 한 반면 아프리카의 말라위(불참)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찬성하여 남북간의 입장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기권을 한 호주와 찬성을 한 한국의 투표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다. 유엔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은 결의안의 내용

발전권 결의안 논란 속에 다수결 통과

-서방국가 대다수 반대 한국은 '고심'끝에 찬성

지난 24일 오후, 표결없이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결의안 채택이 발전권(Rights to Development)에 이르러 약 1시간동안 논란 끝에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나라마다 찬반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지명투표에 들어갔는데 투표결과 찬성 36, 반대 15, 기권1, 불참1. 제3세계 대륙을 대변하여 결의

에 찬성하지만 '과연 서방 국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앞으로 실무분과의 운영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제네바=이성훈]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 -변호사들 직접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3월부터 피해여성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매주 토요일 변호사들과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상담소 산하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2인 1조가 되어 토요일 오전10-12시 성폭력상담소에서 법적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내담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하게 된다. 문의 ☎ 529-4271/2

'국경선없는 기자들' 최진섭씨 석방 촉구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경선 없는 기자들'(Reporters Sans Frontieres)에서는 최진섭(33, 92년 당시 「말」지 기자)씨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구금중 최씨가 겪었던 고문을 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는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94년 9월 유엔 인권위 '자외적 구금 실무분과'는 최씨가 "자외적으로 구금"되었다고 결정을 내리바 있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화 고문방지조약

강사: 박래군(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일시: 3월 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이달의 주제-여성>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여성차별철폐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지난 1월 네팔인 13명의 농성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 중기협) 주선으로 부산 서림산업사에 배치되어 근무했던 나라바이 씨(26)씨는 여전히 계속되는 여권압류와 구타, 임금 간접 지급에 항의하며 2월 24일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소장 김재오)로 도피했다.

13명의 네팔인은 농성을 풀면서 중기협으로부터 여권반환, 임금 직접 지급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나라바이씨는 "농성해제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받는 동안 여권을 압수당했고 이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이상 거짓말로 일관하는 한국을 떠나고 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부산에서 일하는 동안 전혀 쉬지 못했고 하루에 보통 오후 10시 30분까지 일을 해야하는 등 회사는 잔업에 대한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나라

바이씨는 회사측에게 항의했으나 "너는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며 묵살했다고 한다. 나라바이씨는 함께 일했던 네팔인 라메시 파라시(22)씨도 2월 6일 사업장을 탈출하여 현재 도피중이라고 말했다.

농성이 끝난후 지난 1월 21일경 나라바이씨는 목동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끌려가 농성주도 인물에 대한 밀고를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는 협박에 못이겨 "외국인노동자피난처의 김재오 전도사가 시켜서 농성을 강행했다"고 거짓진술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후 나라바이씨를 포함한 8인의 네팔 외국인취업연수생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서림산업사에서 일해왔다.

그는 현재 코피가 나오고 가슴이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료와 여권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 김재오씨는 "외국인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돌려주지 않은 채 볼모로 붙잡고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임금 직접 지급, 여권소지 등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는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정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AI, 김대통령 유럽순방에서 인권문제 논의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3월2일 김영삼대통령이 유럽 6개국 정상과의 회담시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김영삼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94년 한 해 동안은 93년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되는 5백여명

의 정치범들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안재구씨, 김선명·안학섭씨, 김삼석씨등을 거론하는 한편 15명이 사형집행되었고, 50명이 대기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긴급>

대전교도소철야농성 경찰 강제연행 위협

김삼석씨의 면회를 요구하며 김삼석씨의 가족과 민간회의 회원, 대전지역의 청년, 시민등 30여명이 3일 대전교도소 정문에서 밤을 새웠으나,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하러 하고 있다. 경찰은 농성중인 이들에게 연행 이유도 밝히지 않고, 특히 김씨의 여동생인 김은주(26)씨를 중점적으로 연행하려 하고 있다.

김삼석씨등 3인은 전향제 도철폐등을 요구하며 오늘로 10일째 단식농성중이다.

● 행사안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지방)

- 마산- 3.8 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제7회 노동자 한마당 3월8일(수) 오후 6시30분/마산 카톨릭여성회 관
- 광주- 3.8 여성대회 3월8일(수) 오후 6시 30분 / 광주 YMCA1층 대강당
- 인천-87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한마당 3월 11일(토) 오후 2시/여성문화회관(부평 안평원 건너편)
- 부산-여성! 하늘의 절반 땅의 절반 -제6회 부산 여성 큰 잔치 3월 19일(일) 오후 2시/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한국기독교컴퓨터센터 개소기념예배 일시:3월7일(화) 오후6시 장소:한국기독교연회관4층 중강당(☎7084-084)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고문방지조약

강사: 박래군(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일시: 3월 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특집기획-짚뚫이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특집기획>

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교와 취업반

"1년동안 산업체에서 현장교육을 이겨내지 못하면 퇴학당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꼭 참고 다녔습니다" 지난 2월 모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아무개(19)씨의 2+1제도에 대한 소감이다.

94년 10월 발간한 국회교육위원회 김원웅의원의 「사회정책연구소」에서 펴낸 『교육백서2』에는 "현장훈련은 명목뿐이고 학생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2+1제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교육백서2』에 따르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받는 월 평균수당은 20만원에서 70만원대이고 3개월의 집체훈련기간에 학생들은 최저임금의 50%인 13만원을 받는다. 또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74.8% 가량이 월 평균 최저 5시간에서 60시간의 연장노동을 한다.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1백82개 사업체의 2백38개 사업장중 10개 사업장만이 훈련원이 설치돼 있어 훈련

생 3천1백69명중 50.6%인 1천6백55명만이 실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훈련과정없이 생산과정에 필요한 며칠간의 교육만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 기업체에서 현장근무를 했던 진 아무개(19) 공고)씨는 "단순반복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다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동안 이곳저곳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말했다.

임 아무개 교사(사공고)도 "현재 대기업은 3-6개월정도 단기양성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이 필요한 2+1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반면 훈련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1제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2+1제도는 산학연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교육의 포기"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2+1제도의 실무사령탑을 맡고 있는 교육부 과학교육 과장 김정호(52)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1제도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2+1제도는 12학년 동안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3학년 동안 공장에서

---인 권 간 행 물--- (단체간행물)

□ 95 대학 YMCA 전국연맹 회지-새 하늘 새 땅 제2호(95년 2월)/대학 YMCA 전국연맹
주요내용: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의 방향/21세기 지역 사회만들기 시민운동의 과제/김영삼정부의 통일방안 및 정책에 관한 검토/ 세계인권대회/인구와 개발에 관한 유엔세계회의/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의/ 세계여성대회(129쪽)

□ 자료집2-신귀영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자료집(95.2.)/ 천주교조각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777-0643)
주요내용:재심청구서/신수영 진술서/신귀영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서(남승택 신부의)/간첩으로 조작되기까지 내가 받은 온갖 고문(신춘석)/증거자료(42쪽)

□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2.9)/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주요내용 : 지은희씨 경과보고/문필기 할머니 증언/박원순 변호사 발계문등(44쪽)

□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053-426-2533)
주요내용: 국가의 살인행위, 사형제도/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장애물과 희망/사형폐지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엠네스티의 답변/사형폐지의 국제법적 근거등(15쪽)

□ 제2기 거래사랑청년회 출범식 자료집/거래사랑청년회(☎ 062-234-3971) (58쪽)

현장기술교육을 하여 공업 고등학교 학생의 자질향상과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높여준다는 목표로 94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2+1제도를 94년부터 9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8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4년 한해 동안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개 학교 1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조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위험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를 시행하기위해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으로 구독료를 냈음에도 3월3일부터 <인권하루소식>을 받아보지 못하시는 독자께서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다시 보내 드립니다.
메일 아침 팩스로 받아보는 인권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주위에 한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이달의 주제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조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제엠네스티」 전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옥씨들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국제엠네스티」(AI) 전세계 회원들이 지난 2월 연행된 부산대 김수옥씨등 15명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계속 안우만 법무부 장관, 군기무사령관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존스 배티씨는 "김씨등은 군복무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 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변호인 면회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합당하는 대우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리 로비선씨는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양심수"이라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프랑스에 있는 국제펜클럽도 김수옥씨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법무부장관과 군기무사령관에게 2월 23일 보냈다.

지난 2월 17일 국제엠네스티는 전세계 회원들에게 법무부 장관과 군기무사령관 앞으로 항의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들을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신문>에 복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6일 부산대 비상대책위 이관우(29)씨는 "김수옥씨등 9명이 군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는동안 잠안

재우기와 폭력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변하정, 장석복씨는 에인을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경총련과 부산대총학생회는 2월 28일 부산구치소로 찾아가 구속자들의 집단면회 투쟁을 전개했고 부산대비상대책위는 앞으로 부산대 학생들에게 구속자 석방 탄원을 위한 서명과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3일 시작된 사회발전 민간대회(NGO 포럼)를 시작으로 사회발전정상회담이 6일부터 12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주노동총연비위」등 12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한국포럼)에서 단체대표자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포럼은 출국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의 20% 증액과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노동법 개정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

에 대한 법률적 개혁 △남여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국사회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빈곤실태 △경제개발정책과 노동상황 및 노동권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 △사회복지와 국민생활최저선등 10개 주제를 이 실었다. 한국포럼은 코펜하겐 민간단체 대회에 참여해 워크샵, 전시회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한국사회발전 영문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포럼 관련자들은 유럽의 사회복지관련 및 평화환경운동단체를 방문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공판 안내

- 3월 7일(화)
 - 양윤도, 2시, 서울형사 418호,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 3월 8일(수)
 - 정원형, 3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위반
 - 광병관(한겨레신문기자), 3시, 서울형사 317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국경하, 2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 이상우, 2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위반
- 3월 9일(목)
 - 안윤정, 2시,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위반
- 3월 10일(금)
 - 김영옥(선고), 10시, 서울형사 318호, 국보법위반
 - 김기현, 2시, 서울형사 422호, 국보법위반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려

지난 2월22일부터 법무부 청원서 제출 보장과 양심수에 대한 전향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대전교도소(소장 김희탁)에서 단식중이던 김삼석, 최호경씨가 5일 점심 때부터 단식을 풀었다. 또, 3일부터 2박3일 동안 김삼석씨의 면회를 요구하던 민가협 회원들은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을 면회하고 자진해산했다. 그러나, 조덕원씨는 계속 단식중이다.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31)씨에 의하면 민가협 회원들의 농성중에 전경 3대와 대전서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형사 30여명이 민가협과 농성 지원나온 대전지역의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 이 과정에서 윤미향씨는 등에 머리를 맞아 크게 부상당했고, 다른 이들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또, 교도소 측은 김은주씨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다채롭게 짜여 여성후보들 지방선거 적극적으로 참여 지방선거를 여성의 참정권 확대의 기회로

올해로 87번째 맞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한명숙 공동대표, 여연)에서는 12일(일) 오후2-5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남녀 유권자 한마당'을 펼친다.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문화제 형식으로 꾸민 이날 행사에는 문화공연과 그림 전시회등이 마련된다. 특히 여연이 발굴한 지방의회 여성후보 발표와 선언문 채택이 있다(문의: 여연 274-2883).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3·8 세계여성대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8일에는 마산지역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제7회 노동자 한마당'이 오후 6시 30분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광주지역에서도 오후 6시 30분 YMCA 대강당에서 여성대회가 치워진다. 11일에는 인천지역에서 3·8 여성대회 기념식과 연

극공연이 오후2시 여성문화관에서 있고, 19일에는 부산지역에서 '여성! 하늘의 절반 땅의 절반-제6회 부산여성 큰잔치'가 오후2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한국여노 869-1347).

<3·8 세계여성의 날 유래>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섬유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 평등권 실현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트라이앵글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백46명이 화재로 불타 죽은 비극이 있는데 8일에는 마산지역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제7회 노동자 한마당'이 오후 6시 30분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광주지역에서도 오후 6시 30분 YMCA 대강당에서 여성대회가 치워진다. 11일에는 인천지역에서 3·8 여성대회 기념식과 연

행사 안내

- 회장단 이·취임식 및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식
일시: 3월9일 오후3시/장소: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주최: 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 민족민주열사법국민민주사업회준비위 집행위원회 소집
일시: 3월17일 오후7시/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주최: 민족민주열사법국민민주집행위원회(☎764-1684)
- 최성묵씨 1주기 추모제
일시: 3월 11일 오후3시/장소: 평택고속버스터미널
주최: 유가협, 평택버스노동조합, 평택노동상담소
- 민가협 10차 정기총회
일시: 3월 10일 오후3시/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진행: 1부 총회/2부 기념행사(슬라이드극, 정대춘·박은옥 축하공연)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 의사고시 부정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3월 8일 오전10시 장소: 산중다원
주최: 불교인권위원회(☎745-1853)

주간 인권 흐름

(95년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2월27일>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개막/경찰청, 주한미군 주한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 밝혀져/사북·고한지역 주민 5천여명, 대정부 투쟁 선언/일본정부,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방문 허용

<2월28일>

미국 24개 한인단체, 뉴욕에 정신대자료연구관 개관/사북·고한 주민 3천여명 탄광지역 주민 생존권 확보 쟁기대회/일본정부, 오는 6월부터 종군위안부 민간모금을 강행키로/부산고법 형사제1부, 경찰 폭행으로 성폭행범 날조된 피고인에 무죄선고

<3월1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위안부 민간기금 반대 결의/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군 전범 규탄대회/사북·고한 주민들, 생존권 보장 요구 햇불시위/미대사관, 외무부에 미대사관 부지 특혜 요구

<3월2일>

일본 변호사들, 위안부 정부기금 보상 골자 '외국인 전후 보상법 시안' 발표/영등포구치소, 재소자 이범식씨 당뇨병 치료를 목살하다가 중대에 빠지게 해/전국연합,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AI, 김대통령에게 유럽 6개국 정상들이 한국 인권문제 거론할 것 촉구/두밀분교 학부모들, 경기도 교육감에 공문 발송

<3월3일>

정부,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등 밝혀/덕적도 주민 각서 공개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 40명 다쳐/2월부터 교도소내 재소자 저녁식사 오후6시에 실시하는 것 확인돼/대전지법 제3민사부, 공격성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두밀분교생 상색·가평교로 등교/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공해공장반대 주민농성장 증장비 동원 난입, 주민 5명 부상/대전교도소, 전향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씨 면회 거부, 민가협등 철야농성

<3월4일>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99년까지 전원추방 결정/8개 민족단체, 이승만 전시회 항의 시위/서울대 총학생회등, 조선일보의 이승만 전시회 규탄 대자보 게재/덕적도 주민 1백여명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 밤샘농성/민주노동총연비위, 한국노총에 선거, 임투 공동투쟁 공동투쟁 제안

<3월5일>

김삼석씨 12일만에 단식 풀고, 민가협 농성 해체

<해설>

제3차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을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촉구등의 행동방향을 결의하고 폐막되었다. 이로써 일본정부의 기간적인 전후보상책은 국제적인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는 사북·고한지역의 탄광촌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정부는 다급하게 특별법 제정등의 대책을 제시하여 일단 불은 꺼졌다. 하지만, 탄광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6일 개막된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은 인권중에서 사회권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각종 다양한 주제들은 인권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이달의 주제-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조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은호, 투쟁위원회) 회원 20여명은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지난 3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전면 백지화 △덕적면 핵 연구단지 건설 지정 고시 철회 △안전도 재검사 △TV공개 토론회등 4개 사항을 요구하며 농성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언론조작에 분개

정창준(39 조적부장)씨는 "정부는 지난 1월 13일 TV보도에서 '굴업도 주민의 70%가 핵폐기장 건설을 찬성한다'는 엉터리 발표를 해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정씨는 "정부는 굴업도가 단지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를 들어 핵폐기장으로 선정했지만, 안전성·수송성·경제성에서 굴업도는 최악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씨는 핵폐기장의 설치로 굴업도 근해의 관광자원 훼손, 수산천연자원 파괴, 해상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했다.

이번 농성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 투쟁위원회는 "기자들로부터 핵폐기장 관련기사는 편집과정에서 정부 발표만을 기사화하도록 지시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만석(38 기획부장)씨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영장없이 가택수사, 연행
한편, 송은호 투쟁위원장은(72) 임의동행 형식으로 5일 연행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조사중이고 김경민(33 홍보위원장)씨도 6일 영장없이 인천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 7일부터 굴업도 주민 15여명은 인천중부경찰서 앞에서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굴업도에는 형사기동대 1개중대와 핵폐기물처리장관리경비대 2개중대 4백여명이 상주, 허상규(사무국장)씨를 연행하기 위해 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굴업도 사태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부가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한다는 발표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주민 김계영(62)씨가 1월 13일 사망하였고, 주민, 전경 4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 한국지부)는 7일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2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한국지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고문, 양심수의 구금, 실종, 동티모르 학생들의 체포 등 인권 침해를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여성의 날인 8일부터 북경여성대회가 끝나는 9월까지 여성을 주제로 하여 세계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

최근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중 아내구타가 31%(2,12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19.2%, 외도가 17.1%를 차지했다. 외형별 내용을 보면 구타의 경우 남편의 구타가 98.36%, 외도의 경우 남편의 외도가 92.5%, 자신의 외도가 6.89%를 차지해 배우자에 의한 여성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담자의 나이로는 26-30

세가 23.73%(1,198명), 31-35세가 27.85%(1,406명)였다. 또한 내담자 학력은 고졸이 45.85%, 대졸이 29.01%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화는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 심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특징으로는 한달이상의 장기 이용자가 33%로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심터 이용 후 진로를 보던 귀가하는 내담자가 매년 50%를 넘었는데 94년에는 39%로 줄어든 대신 취업을 하는 경우가 31%, 이혼하는 경우가 20.3%로

독립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원 7년을 맞은 심터의 또하나의 특징은 전 이용자의 재입소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상담인권국)부장은 "심터 이용자가 귀가한 뒤 1-3년이 지나 다시 남편의 구타로 도망쳐 나온다. 가해자 교정·교화·처벌 등 남편에 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래 통계중 전화상담은 1,654, 면접 704이고, 지방상담 통계는 포함하지 않음.

사례 유형	아내 구타	외도	시집 갈등	부부 갈등	강간	미혼 여성	법률	주부 자신	기타	계
누계	2,126	1,174	373	1,319	155	560	728	325	98	6,858
백분율	31	17.1	5.4	19.2	2.3	8.1	10.6	4.7	1.4	100%

제네바 소식 ⑥-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세계인권 심판관' 미국, 20여개국 인권상황 비판 -중국, 쿠바 반박권 행사

지난 3월2일, 일정이 밀려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의제안건 12에 대한 야간회의에서 미국정부는 중국과 쿠바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인권문제를 무차별적으로 언급, 비판하여 많은 정부 대표들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미국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미 국무부의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발언 서두에서 페라로(Feraro) 대사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수단, 미얀마, 자이레와 함께 국제인권기준에 매우 미달되며 국제인권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국가에 포함하였다. 미국은 이 밖에도 중국, 쿠바, 인도네시아, 체첸, 르완다, 카시미르, 키프러스 등 약 20개국의 인권문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날 언급된 나라 가운데 중국과 쿠바는 반박권을 행사하여 "미국은 마치 세계인권의 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아직도 패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여 주목하였다.

한편 매 의제항목마다 미국의 각종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온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의제항목 12에서도 미국내의 각종 인권침해가 인종차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통계를 제시하며 비판하여 민간단체 가운데 미국인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반미단체'로 부각되었다.

라소 인권고등판무관 올해중 동티모르 방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장 성명서 채택

지난 2월28일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안으로 동티모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유엔 인

권위원회 의장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의장 성명서에서는 이 이외에도 지난 1월 동티모르인 6명의 살해사건 등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의 동티모르 방문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동티모르 대표단은 의장 성명서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도)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서를 주도한 서방국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92, 94년 그리고 올해의 의장 성명서에 포함된 내용을 실천하게 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의장 성명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세 라모스-호르타 동티모르 저항평의회 특별대표는 "라소 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차장급으로 동티모르를 방문하는 유엔의 최고위층 관리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군대의 사주를 받은 민간폭력단에 의해 여러명의 동티모르인이 살해되는 등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의 압력과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호'해온 동남아 국가들조차도 아세안(ASEAN)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의장 성명서는 결의안에 비해 그 정치적 의미가 낮지만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어 마찬가지로의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정례화 결의안 채택 -3년만에 한국정부주도 첫 성과

지난 3일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작성, 51차 인권위에 제출한 '아태지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인권기구'(Regional Arrangements)에 대한 결의안(E/CN4/1995/L65)이 투표들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유엔인권위에 회원국으로 참석하기 시작한지 3년만에 처음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킨 결의안으로 한국정부 '인권의교'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안 내용 가운데 민간단체의 참여와 워크숍의 연례화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의안의 내용을 초안하고 후원국가를 교섭하는 실질적 일을 수행한 이준희 참사관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국가가 민간단체(NGO)의 참여와 기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내의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상황이 나은 한국 문명정부의 '인권의교'가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결의안 최종안에는 "아태지역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해마다 열릴 예정인 아태지역 워크숍에 아태지역 인권단체가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와 인도네시아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유엔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른바 독립적인 국민인권기구(National Institution)를 설립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인권워크숍의 정례화를 계기로 한국정부도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춘 국민인권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네바-이성훈]

○ 행사 안내 ○

- 방송사 단일노조 건설 관련 세미나-산별 노조의 쟁점과 전망
- 발제: 박석은 노동정책연구소장
-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 일시: 3월 10일(금) 오후3시
- 장소: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언론노조/방송노조건설준비위
-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일시: 3월 11일(토) 오후2시
- 장소: 동인천 카톨릭회관지하강당
- 주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이달의 주제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조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재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물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이상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윤정(31)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안씨는 "독일 유학 기간 중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씨를 만났고, 이씨가 귀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입원하고 신학대에 입학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은 '통일사업'을 포기한 행위로 간주하였고, 그 후 이씨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이씨를 포섭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 김용무씨를 91년 재출국시 독일에서 만났으며 "(김씨가) 비엔나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을 만나 그쪽 음악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북한의 윤이상 음악연구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안씨의 증언 이후 독일 유학중 북한의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을 4차례 드나들면서 간첩활동을 하다 자수한 것으로 보도된 한병훈(31)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지난해 안기부에 자수하여 이씨와 안씨등의 독일에서의 행적에 대해 말한 것으로 밝혀 이씨등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측은 "한씨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질타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고, 검찰측이 증인의 신변보호와 증언내용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후 한씨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재판부의 비공개 신문 결정에 대해서 이상희(57)씨 등 방청은 가족들은 "문명정부에서 비공개 증인이 말이 되나, 군사법정에서도 증인신문에 비공개가 없었다"며 법정 밖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변씨는 주로 북한 방문에 대해 진술했다고 전해졌

박홍 총장등 증인 채택

한편, 변호인은 증인으로 안계춘(이상우씨 후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씨와 박홍 총장을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박홍 서강대 총장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측이 "한씨가 독일에서 박홍 총장을 만났다고 진술했고, 주사파 파동으로 이씨가 구속된 것이라며 박홍 총장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2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이상우(42)씨는 연세대 정의과 재학중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간 복역하였고, 88년 5월-89년 5월 독일 쾰른대 유학하면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지도원 김용무(57)에게 포섭돼 입북, 남한내 비밀결사조직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해 운동권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작년 10월7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함께 연행되었던 정현백(성균관대), 김진홍(숭실대) 교수들은 안기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어 풀려났으나, 이, 안씨는 구속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씨등이 접촉한 재독 교포 김용무씨가 북한의 공작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한씨의 진술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는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오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여성평화의 집 강당에서 한다. 여성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담원 양성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총32개 강좌로 교육시간은 64시간이며 수강료는 8만원,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문의 269-2962-4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위한부문제 해결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여연)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서에서 △할당제등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것 △국민학교 급식의 전면실시 △산전후 건강관리와 분만시 개인분담금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국제엠네스티(AI)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부터 북경 여성대회가 끝나는 9월까지 '여성'을 주제로 하여 전 세계 회원들이 캠페인을 벌인다. 이기간 동안 AI는 책자의 발간,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여성인권 침해 국가의 대사관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북경여성대회에 임박해서는 이 대회의 의의를 홍보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제87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나 무장단체

집단(NGE)에 의해 실종과 정치적 살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여성 양심수들에 대해 주목하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강간, 성적모독 행위, 고문, 가혹행위의 근절 △전쟁 및 내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장 △모든 정부의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들에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였다.

선거법 개악음모중단, 5.18 책임자 처벌 요구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과 12·12군사반란자 및 5·18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8일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오종렬·정광훈(이상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씨가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뒤이어 김낙관에 의한 강간, 성적모독 행위, 고문, 가혹행위의 근절 △전쟁 및 내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장 △모든 정부의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들에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였다.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8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등 광주지역 민주단체 소속 회원 1백50여명은 오전 9시30분 광주교도소 앞에서 양심수의 전원 석방추구와 단식농성지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의 철폐,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균광주(남한조선노동당 사건)씨를 비롯한 광주교도소에 부역중인 양심수 50여명도

인터뷰-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 퇴직연부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 이번 농성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 우리는 굴업도 핵폐기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TV공개토론회를 거쳐 굴업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핵정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굴업도가 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가?
- 굴업도 주변은 수심이 얇고 암초도 많으며 파도도 높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서울대 오임상 교수는 "서해는 조수면화가 심해 방사능 물질 유출시 며칠내로 반경 20Km 지역 오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서해안 특유의 회유성 조류로 22시간내 제주도까지 서해안 일대가 완전 오염되고 만다. 성수대교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위험한 도박을 벌려서야 되겠는가?

□ 굴업도가 선정된 정치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처음에 경남 고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최형우씨의 지역구라는 점이 감안되어 제외된 것 같다. 굴업도는 95년 3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변경되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즉 행정적 공백기를 이용하여 경기도측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말하고 인천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퇴직도와 굴업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 수석대표 송은호씨와 홍보부장 김경민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탄원서도 8일 올렸다.

□ 앞으로 계획은?
-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 늙은 노인들 꼬서 이간질하러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농성 7일째-

분을 맞아 더욱 변화하기만 한 명동에는 빌딩숲 사이로 하루에 여섯번 우렁찬 고함소리가 울려 퍼진다.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농성을 벌였던 그 자리에 생업을 포기하고 이 터와 그 위를 받들고 사는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퇴직도 주민들은 핵폐기장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핵 아래 생명없다"라는 구호는 농성장 주민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문득 발을 멈추고 핵문제의 실상을 느끼며 폐기장 반대 서명에 동참하거나 우유나 빵등 간식거리를 사들고 격려하러 오곤한다. 7명 남짓한 비닐천막에서 만난 퇴직도 한 아주머니는 "도깨비같은 문명정부는 힘없고 늙은 노인들을 꼬서서 찬성하면 1억을 준다고 했다. 또한 각서를 만들어 주민들을 이간시키려했다"며 각서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주민 백여명은 퇴직도 민사무소 민원실로 들어갔다. 각서는 민원실에 수북한 높이로 쌓여 있었다. 각서에는 "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강권에 못이겨 반대시위에 참여했으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한다"와 "본인은 금번 굴업도의 핵폐기장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사람으로 이후 정부에서 핵폐기장 설치를 미끼로 지급되는 아무런 보상금도 거부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각서를 제출한다"가 써여있고 수신인은 국무총리 앞으로 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각서는 수거되었고 민사무소 직원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아침 팩스로, 1주에 두번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구독신청은 전화 715-9185입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이달의 주제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조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장례위원장등 재야인사 소환 수사후 구속방침

지난달 26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된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김사 문성호)는 8일 윤씨의 장례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등 재야단체들이 '애국투사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 윤씨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검

찰의 지휘하에 전남도경보안수사대는 7일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기세문씨를 소환, 조사하였고, 기씨 외에도 당시 장례위원장을 맡은 강신석 목사와 박동환 민자통 광주의장, 오병윤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김양무 자통위원장 등을 연속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한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의 재야인사들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 시청에 근무하는 안아무개씨(37)는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고인을 욕보이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상

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문제로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월28일 이례적으로 윤씨의 장례식 기사와 함께 사실을 실어 윤씨의 장례식을 비난한 바 있다.
윤씨는 28년간 복역후 89년 비전향 장기수로 출옥, 위암을 앓아오다가 지난 2월24일 사망하였다. <인권하루소식 2월 28일자>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 공판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씨등 2명에게 증인 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계완 변호사는 "1심에서도 수사를 주도했던 안기부 직원이 출두하지 않아 사실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수사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안기부 직원들이 출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화려씨는 "안기부는 지난 93년 6월에 어떤 사람(제보인)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의

반국가단체성원과 만나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안기부는 그때 나와 제보인을 잡지않고 1년동안 그냥 두었다.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것은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계완 변호사는 "정화려씨의 접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가 아닌가 밝혀야 하고 안기부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동안 이들을 왜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3시 서울고등법원 404호실에서이다.

행사와 동정

- 월레강좌 노년과 여성
일시: 15일(수) 오후2시/장소: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
주최: 한국여성학자협의회(전화: 278-5260)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1회 한국여성대회 '남녀유권자 한마당'
일시: 12일(일) 오후2시/장소:이화여대 대강당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전화: 274-2883)
- 분단 50주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어가는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
일시: 3월 18일-19일 오후 6시/장소: 경희대 노천극장
주최: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 공연사업단 (전화: 336-7895)
- 장애인 복지 토론회
일시: 3월17일 오후2시-7시/장소: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주최: 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실현방안
발제: 감정기 교수(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 521-5364)
-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국제법률가협회(ICJ)는 11일 일본 동경에서 정신대 문제 조사 보고대회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가 참석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기욱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주립대로 인권유학을 떠난다. 유학기간은 1년 예정이며, 출국은 11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단이·취임식 및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식이 9일 오후3시 기독교연합회 관 중강당에서 치뤄졌다. 신임 회장에는 신혜수(전임 부대표)씨가, 부회장에는 이상덕(NGO한국위원회 총무)씨가 각각 임명되었다. 신혜수신임회장은 "여성의 전화는 83년 초창기부터 가정폭력과 성추행등 여성인권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선도성이 퇴색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2의 창립정신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인권을 세우는데 앞서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여성상담 단체로서 전문화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정책적 활동을 진행하고 ▲여성인권 신장과 대안적 인간관계 제시등을 위한 가족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전화와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등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이문우 전임회장은 이문우를 통해 "여성상담에 더 관심을 갖고 뒤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여성의 전화 회장직을 역임해온 이문우 전임회장을 여성의 전화 명예회장직과 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호사모임'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박인제(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운영위원장은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여성차별의식과 제도개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는 서울·광주·울산등 8개 도시에 37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 매 주 월요일 오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서울 269-2962 / 인천 032-529-2546/성남0342-730-1370/ 수원 0331-32-7780 / 부산051-817-4321/전주0652-87-7324/광주 062-363-7739/울산 0522-45-6713
<신혜수 신임회장 약력>
50년 6월23일 출생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대학원 사회학 Ph.D 취득 / 9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93 한국여성의 전화 부대표 / 현 전주 한일신학대학 교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김홍신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 탄압 민족작가회의 성명

민족문학작가회의(대표: 송기숙)는 9일자로 성명을 발표하고, 작가 김홍신씨가 회장단 이·취임식에 뒤이어 '여성평화를 위한 변

호의 진행역을 사퇴한 것을 언론통제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국제신문에 김영삼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지면도 빼앗기고 급기야 8일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항변성 사퇴를 하게 된 것

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짓고, 특히 "정보요원의 뒷조사라는 가장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작가의 삶에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여성의 전화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조계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 판결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정신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모임의 준비단계부터 일해온 이종걸변호사를 만났다. 이종걸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성희롱 사건 담당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모임이 출범식을 갖는데 이 모임의 취지는?
-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폭력상담을 해오면서 아내 구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간 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얘기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 92년 11월부터 몇명의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이 매주 때로는 격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그리고 93년 말에는 5명의 변호사들이 조를 편성해 상담을 진행했다. 실시 결과 92년 62건이었던 법률면접상담이 94년에는 1백60건으로 증가했다. 상담건수의 증가와 함께 좀더 구체적인 상담요구가 따랐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법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런 요구 속에서 변호사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 구체적인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가?
- 94년말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 3일 내부운영규칙을 마련해 지역변호사까지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꾸리게 되었다. 그리고 3월3일 기자간담회를 가져 박인제변호사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알렸다.
- 이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해달라.
- 현재 3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운영위원장 1명이 있다.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이고 상담위원이기 때문에 매달 1번씩은 만나왔다. 이제부터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 이 모임의 활동방향은?
- 무료상담과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등 법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제10회)

(특강) 세계경제체제와 한국

강사: 채만수(경제사회연구회 소장)
일시: 3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 전화: 715-9185

<이달의 주제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조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민가협이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94년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신공안정국 속에서 '주사파' 혐의로 구속된 '구국전위', '한누리노동청년회' 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는 7명에게만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 김진국씨를 통해 반미청년회 총책 조희씨를 포섭, 93년 12월 전대협 등

우회를 결성케하고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의 활동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던 조희씨의 경우 구국전위 사건과는 전혀 다른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으로 9월 27일 구속된 연성수씨등 7명은 보석과 구속적부심, 공소보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전에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로는 "이들이 노동현장에 침투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선동했으며 북한의 원전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지만 공소장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구속된 4명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누리노동청년회'도 "북한동조, 이적단체 노동계 주체사상 학습 혐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국

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주장을 실었다면서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간사 송소현(29)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이 기소단계에서 크게 축소된 것은 해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끼워넣는 식의 발표와 당시 사건을 과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씨는 "결국 이러한 뻔뻔기식의 수사발표는 실제적인 진실을 기본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며 공안당국이 과장보도를 통해 공안분위기를 조성, 민족민주세력을 위축시키는데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자는 3백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4년 총구속자 7백74명의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8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총구속자의 18%, 90년 32%, 91년 40%였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94년 신공안정국하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결과>
 (제공: 민가협)

사건명	구속일	구속인원	1심 재판 결과
구국전위	94.7.28	23명	실형 12명 집행유예 11명
김청동사건	94.8.4	12명	집행유예 9명 구속취소 1명 실형 2명
노민문연	94.9.27	6명	보석 2명 구속적부심 2명 공소보류 1명
성남노동자회	94.9.3	5명	집행유예 3명 실형 2명
한누리노동청년회	94.9.7	4명	집행유예 4명
샘	94.9.2	3명	집행유예 3명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민중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 의장으로 안옥희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3백여명의 양심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등 사회악법 폐지운동에 노력하며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 민주단체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95년 사업계획으로 민가협은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적인 인권침해인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피폐화 조사활동도 확대, 공청회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투쟁 △장기수 석방, 조각간첩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감옥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반고문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제10회) (특강) 세계경제체제와 한국

강사: 재민수(경제사회연구회 소장)
 일시: 3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 전화: 715-9185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치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리오해가 전체의 45.2%(92년 57.1%, 93년 53.3%)로 여전히 높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치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치(증거 수집·채택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넘어 많은 사건들이 시간적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30-40%가 변호인없이 진행되었다. 사실심에서 공정한 재판, 실제로 접근하는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변호사는 파기율의 증가의 긍정적 면으로 대법원의 심판 기능이 좀더 철저해진 점을 들었다.

형사사건 파기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박홍규(영남대 법대)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위주이다. 3심인 대법원의 파기율이 증가한다는 점은 대법원이 신중을 기해 사건을 취급하려는 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박홍규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이상우(42)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홍규(영남대 총장)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홍규 총장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려졌다.

박홍규 총장은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으로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씨(31)는 증언에서 박홍규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9일자 참조).

지난해 박홍규 총장이 연속적으로 주사파 발언을 거듭하자 여론은 박홍규 총장의 발언의 진실성 여부 대한 수사와 함께 사실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이씨의 재판에서 박홍규 총장의 증언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아침 팩스로, 1주에 두번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구독신청은 전화: 715-9185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

---인권간행물---

(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한국 민간단체 영문 홍보물-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n Society; Joint Report of Korean NGOs-NGO's View of Social Situation-/KNFSD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40쪽)
- 시민과 변호사 제14호(95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522-9413)
 주요내용: 사법체계의 졸속개혁을 반대한다/아파트 선분양제도 이래도 좋은가/장직변호무죄투쟁기/경찰권에 내재된 고유의 수사권(323쪽)
- 우리네 아이들(95. 1.2월호)/지역탁아소연합회(전화:275-8505)
 주요내용:지상강연1:어린이와 그림책-선생님이 할 일/지상강연2: '지역자치' 학습노트/건강하게 삽시다;소양에 방점종과 관련되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53쪽)
- 사월혁명희보(제37호, 95년2월)/사월혁명연구소(전화:888-3682)
 주요내용:제37회 월례발표회;94년 민문운동 평가와 95년 전망/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도와 북-미 관계 전망(31쪽)
- NGO보고서 작성 준비 심포지움 자료집/한국여성NGO위원회(전화:423-5355)
 주요내용:아·태지역 여성개발 행동강령21세기를 위한 세부실천강령/행동강령초안(영문, 한글 대조)(215쪽)
- 한국여성 NGO 위원회 소식(2호, 95년3월)/한국여성NGO위원회(전화:423-5355)
 주요내용: 한국여성NGO위원회 어떻게 움직이나/강연-여성의 문으로 세계를 보자(8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42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화: 747-4364)
 주요내용: 지자체와 전국연합의 역할/국가보안법철폐운동을 위한 기획초안/새모녀폭행사건 이후 계속되는 주한미군 폭행/미군기지 반환운동의 기수! 부산연합(53쪽)
- 여성정책연구(통권 5호, 95년2월)/여성정책연구소(전화:441-0112)
 주요내용: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제언-여성과 해방반세기/여성유권자가 바라는 여성정치지도자의 요건 설문조사 결과/지방자치시대 영유아보육법의개정방향 공청회 지상중계(15쪽)
- 일하는 여성 (23호, 95년 2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전화: 869-1347)
 주요내용:여성평론-제발 강간하지 마세요/2월의 기획-민주노동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알아들시다-성폭력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39쪽)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
 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한국전 관련단체 협박 행동

기세문씨, 보안관찰 대상자로는 두번째 구속
 비전향 장기수 고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11일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씨(60)를 구속한데 이어 12일에는 한청협 부의장이정를씨를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기씨는 2월26일 열린 윤씨의 장례식에서 장례의 명칭을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불러 비전향 활동을 미화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쪽준비위원회 전남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이씨는 윤씨의 장례위원회의 홍보위원장으로 참여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광주지역 집행위원장을 맡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로써 기씨는 보안관찰 대상자로는 91년 서준식씨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되었다.

상이군경회등에선 협박성 집의서 발송

한편,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 지부는 11일자로 장례위원들에게 "미전향 공산당 윤기남을 애국투사로 치장한 데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 질의서에서 "장례위원들은 윤기남에게 진정한

애국자로 부르겠다고 하였는데 애국자라고 부른 공산당(빨치산)과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우리 국가유공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등의 자극적인 어구를 사용한 9개항의 질의사항을 보내왔다. 이 단체들은 질의서에서 "95년 3월20일한 회신과 함께 관내 일간지에 해명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회신이 없거나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이해할 만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전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이름으로 이에 상응한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협박적인 언사를 구사하였다. 또, 고 윤기남씨의 집에는 10일 이후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당장 망월동에서 이장하지 않으면 묘를 파버리겠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등 협박성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재야, 정치적 보복 규정

또,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강신석 목사를 소환조사하였고, 장례위원회에 참가한 재야인사도 곧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을 비롯한 재야단체들은 "김영삼정권이 대통령의 망월동묘역 참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지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선거 국면을 위축시키고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파상적인 공세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정를 부의장의 연행과 광주전남연합 간부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는 갈수록 거세어지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에 대한 전국민적 사법처리 요구와 다가오는 6월27일 지방자치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정를씨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

는 오는 3월20일부터 서울 신세계동방플라자 갤러리에서 '세계인권사진전'을 갖는다.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진전에는 남북한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난민, 양심수, 정치적 살해, 대량학살, 고문, 사형제도에 관한 사진을 80여 점 전시하게 된다. 이 사진들은 국제엠네스티가 자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비롯하여 AP, AFP통신등 세계의 유수한 통신사들이 국제사면위원회에 기증한 작품들이다. 이와 함께 매일 12시 30분과 오후5시30분, 2회에 걸쳐서 유엔인권선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한 슬라이드를 1시간 30분씩 상영하며, 티셔츠도 판매한다.

개막식은 3월20일 오전 11시 신세계동방플라자 갤러리에서 갖는다. 문의 전화: 053-426-2533.

공판 안내

- 3월14일(화)
 - 두밀분교폐교철폐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선진)
 - 이병석, 2시, 서울지법 형사423호, 국보법위반(속행)
- 3월15일(수)
 - 이승우, 10시, 서울지법 형사311호, 국보법위반(속행)
 - 최일봉, 4시, 서울지법 형사425호, 국보법 위반(속행)
 - 김정식, 2시, 서울지법 형사425호, 국보법 위반(속행)
- 3월16일(목)
 - 문국진, 10시, 서울지법 민사559호, 고문후유증손배
- 3월17일(금)
 - 김준오, 10시, 서울지법 형사311호, 국보법위반(속행)
 - 박치관, 2시, 서울지법 형사319호, 국보법 위반(속행)

<현장스캐치> -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지난 8일 서초구청 로비에서 노점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한 최정환(37)씨가 현재 강남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그는 전신에 3도의 화상(88%)을 입었고 기도절제 후 산소 호흡기를 통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꺼운 붕대로 감은 가슴의 가파른 고동뿐이다. 눈과 귀, 코와 입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해 녹았으므로 예전의 최씨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

애등급 1급 1호의 중증장애인이다. 현재 나이 37세로 아직 미혼이며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다방 점장사, 수세미장사 등으로 생계유지를 했다. 10년전 광고를 통해 친부를 찾았으나 부친 쪽에서 친자부인을 요구해 최씨는 지금껏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삭월세로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부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오토바이 카로 음

반(테이프)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최씨는 94년 6월경 서초구청이 고용한 용역단속반과의 몸싸움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8일에도 서초구청 용역단속반과의 실랑이 끝에 스피커와 전구, 배터리를 빼앗겼다. 최씨는 당일 오후 9시45분경 구청 당직실로 배터리를 찾으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구청 로비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직원은 신나를 뿌리는 것을 보고서도 방관했다고 한다.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

회, 전국노점상연합회등은 즉각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분신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10일 구성하고 11일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분신사건에 관한 폭력단속반 해체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노점상 연합회 서울사무국장 최규상(35)씨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므로 불법을 감수하면서 노점상 일을 해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강제집단을 용역으로 고용해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점상 대책을 규탄했다.

주간 인권 흐름

(95년 3월6일부터 12일까지)

- <6일>
 원진래이온 직업병 판정 받은 홍석봉씨 사망/부산 '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주한미군 범피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미군헌병 한국인모터 폭행감금등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검사, 이문옥 전감사관에 무죄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 <7일>
 인천중부경찰서 굴업도 해폐기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수석대표 송은호씨등 2명 구속영장 신청/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도네시아대사관 방문 인도네시아 인권침해 반대 2만여명 서명전달/
-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국보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우씨 사건 증인으로 박홍총장 채택/김홍신씨 방송도중 외압이유로 방송 그만둔다고 발표/광주지검 검찰청 공안부,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씨 장례식 치른 것과 관련 수사착수/굴업도 해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소속 20여명 명동성당 앞 천막농성 6일째/유엔 인권위원회서 중국인권상황 비판하는 결의안 부결/서초구 서초구청 노점상 최정환(최수, 절단장애)씨 단속에 항의 분신
- <9일>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단 이·취임식,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

- <10일>
 일본 시민단체 「침략전쟁 잔미에 반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한국 시민단체와 언론에 동참 호소/민가협 10차 총회 상임의장에 안옥희씨
- <11일>
 경실련,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민족작가문학회의 김홍신씨 사건과 관련 정부규탄 성명 잇따라 발표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폭력단속반 해체, 관련자 처벌요구하며 서초구청앞 시위/이주완 한국노총사무총장 일본방문중 "ILO에 올해안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조약 위반으로 재소예정"이라고 밝혀/'인천앞바다 해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인천앞바다 해폐기장 철퇴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12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고 윤기남씨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하고 폐막/한국여성단체연합주최로 '남녀유권자 한마당' 개최

<해설>-----
 우리나라 언론이 해외에서 열리는 유엔의 회의를 가장 상세하게 보도한 사회개발정상회의가 12일 폐막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세계에 대해 약속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권에게까지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비전향장기수의 장례문제로 구속이 일어났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노점상이 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주에 세계는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보장없는 개발'의 공허함을 확인했다. 개발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관심가져야 할 때다.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
 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기대 학생회 간부들 또 대거연행 서울경찰청, 경기대 학생회간부들 대거 연행

지난달 부산대 전 학생회 간부들이 연행되어 「자주대오」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만에 경기대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연행되었다.

14일 오전5시경 수원 경기대 근처의 자취방과 집에서 잠자고 있던 경기대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들과 함께 자취방에서 잠자던 목격자들에 의하면 "14일 새벽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자를 정확히 가려내서 끌고 갔다. 연행자 한 사람에 6-7명씩의 형사들이 붙었고, 방안을 살살이 뒤져 책과 문건을 가져갔다"고 한다.

14일밤까지 확인된 연행자들은 박상준(현 총학생

회 부회장)씨등 9명이며, 이중 방위병 근무중인 노창식씨는 국군기무사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연행된 이들 외에도 홍성이(현 총학생회장)씨등 5명을 찾았다.

형사들은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수원 경기대 학생 150여명은 14일 오후 5시 경기대 서울 캠퍼스에 집결, 규탄대회를 갖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전경들이 교문에서부터 강력히 저지하는 바람에 서울역과 신도림역 등지로 흩어져 홍보전을 벌였다. 또, 홍제동 대공분실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한 연행자 가족들은 홍제동측의 거부로 면회를 하

지 못했다. 경기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종선(26)씨는 "부산대 사건에 이어 서울경기지역에서 다시 조직사건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분위기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

고 부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에는 경찰측에서 보도금지 요청해 일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 연행자 명단
 박상준, 송경재, 성명규, 장세민, 조상현, 신경숙, 진성미, 노창식, 백성렬
△ 확인된 수배자 명단
 홍성이, 류용용, 류찬영, 구자필

<인권어록 ①>

△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

"이승만을 재평가한다고 할 경우 우선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되어야겠지요.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잡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정통성을 확립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인물을 말년의 실정을 꼬투리 삼아 '독재자', '친일파의 비호자', '부정부패의 원흉' 등으로 매도하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 의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은 한 인물에 대한 탐구일뿐만 아니라 현대사 다시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7 '인물탐구 넘어 현대사재평가 계기로...'

"이승만 살려대기는 역사에 대한 우등이요 폭력이다. 주체자는 중고생, 군장병등을 동원, 단체관람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극우이데올로기 교육사업을 우형차게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박정희와 나라 살찌우기', '진두환 새 로 보기를 그 다음 적당한 때에는 '이완용과 나라 건지기도 나타날 것이다, 두고 보라!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빛두레』 제190호(3월12일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실린 박기호 신부의 '이완용과 나라 건지기'

△ 한국 언론의 두 얼굴

"참가국들은 대규모 한국 기자단에 놀라고 있다. 회의 주최국 덴마크 기자단이 1백35명, 세계언론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미국기자들도 40명에 불과한데 우리는 대통령 수행기자까지 포함 1백 40여명이 벨라헨다 회의장에 출입신청을 냈다. 주최측 보다 많다. 박수길 유엔대사는 "이것도 한국이 세계화된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3.8 기자수첩 교편하겐 김광일 특파원

"이곳 스위스 유엔인권위센터에 한국 특파원 기자는 한사람도 없다. 정신대 문제의 경우도 국내 신문사에서 전혀 취재를 안해 올래도 일본 통신사 소식을 받는 치욕을 벗어나기는 틀려먹었다." -재네바에서 유엔인권위를 모니터링한 미성훈씨가 2월22일 보낸 팩스 전문에서

● 행사 안내 ●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일시: 오늘 오후3시/장소: 흥사단강당(대학로)
 문의: 인권운동사랑방(문의전화: 715-9185)
- '95 전국 철거민 대회
 일시: 3월 15일(수) 12시
 장소: 종로공원(종로 세운사가 맞은편)
 주최: 전국철거민연합(전화: 766-5564)
- 살인단속 분쇄 및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보고대회
 일시: 3월16일(목) 오전 11시/장소: 종로공원(종로4가)
 주최: 전국노점상연합회(전화: 725-5025)
- 외국인노동자 관련 제1차 국내 워크샵
 일시: 3월17일(금)-18일(토)/장소: 서강대산업문제연구소
 주최: 노동정책연구소/참가신청 마감: 3월15일(수)
 문의 전화: 795-5504

고 윤기남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윤영규(전국연합 공동의장), 강신석 목사 등 12명에게 13일 출두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두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의 상층간부들이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3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탄압이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확인하며 즉각적인 탄압중지와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성명은 "전남경찰청이 장례식 명칭과 절차, 그리고 5.18묘역에 안장한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인륜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장례식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5.18문제 처리를 앞두고 높아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보안수사대를 폐지하고 인권탄압의 구실이 되고 있는 회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아침 팩스로,
1주에 두번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구독신청은 전화:
715-9185입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고난모임 장기수들에게 시사지 보낼 후원자 모집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은 수감중인 김선명씨 등 장기수들에게 <한겨레 21>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수미 간사는 "대전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두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의 상층간부들이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0여명의 후원자가 나선 상태이며 각 지방 교도소마다 1명의 장기수들과 결연을 맺어 매주 <한겨레 21>을 보낼 예정이다. 문의 393-4662

두밀폐교철폐소송 속행

두밀분교폐교철폐회 소송 공판이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연기되었다가 14일 오전10시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

인 이석태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다'는 맞선 주장에 대한 부분이였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재판은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중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중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중군위안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포지움이 지난 11일 오후2시 일본동경 전수대학에서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움에는 우스티니아 돌고팔(Ustina Dolgopol, 보고서 작성자)씨와 일본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금자, 장완익변호사, 이주완 노동사무총장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해 11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Jurists, ICJ)가 발표한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와 관련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일본어 번역판을 계기로 보고서 작성자를 초청해, 일본정부측에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본 상태이다

장완익변호사는 "ILO에 제소할 경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LO 제소가 일본정부에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에 초점이 ILO제소문제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 모임이 마련한 외국인 전후 보상법 시안 논의

한편 심포지움에 앞서 오전10시에는 배금자·장완익 변호사, 일본 아이따니 쿠니오, 이소미 스즈키 변호사 그리고 우스티니아 돌고팔씨등이 ICJ 보고서와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외국인전후보상법'은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 내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에서 작성해 2일 발표한 것으로,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는 이후 입법정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의 뜻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당해 행위의 피해자와 그의 기금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회의 뜻으로 지급하는 외국인전후보상지급금은 "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등의 지정 또는 이에 대응한 지급금액을 정하는데 있어 일본정부 행위의 위법성 정도, 피해의 중대성, 구제의 긴급성, 실제지급에 있어 난이(쉽고 어려운 정도)등을 감안해 지정행위의 유형을 순차, 추가할 수 있다"(제3장 3항)고 밝히고 있다. 이점에 대해 장변호사는 "정신대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정신대외에 원폭피해자, 강제징용자 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전후보상법 마련 움직임은 일본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다. 이들은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움직임도 좋지만 한국정부가 나서서 공식 제안하길 원한다"면서 "일본이 협조를 요청한 대한변호사협회등이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성훈씨가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30 Laura)씨를 만나 아동의 권리조약 보고서 심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로라씨는 93년 4월부터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국제인권봉사회」(IS)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우리 단체는 명칭이 나타내듯이 아동권리조약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수십개 국제인권단체의 협의체(coalition)이다. 아동권리조약 초안이 한창 심의되던 지난 83년,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일해오던 수십개의 국제인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조약 작성작업에 참여했다. 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 조약이 채택된 후 조약의 실시를 모니터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민간 인권단체와 아동권리조약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정보흐름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동인신매매, 아동노예제, 전쟁하의 아동권리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지원, 보고서 심의회의의 참가비용 지원 등을 한다.

한국정부보고서가 내년 96년 1월에 심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 정확히 말해서 96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 11차 회기에서 크로시아, 예멘, 아이스랜드, 핀란드, 몽고와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아동권리조약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나라의 인권단체가 이에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아동권리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아동권리조약에 가입한 나라(94년 9월 1일 현재 166개국)는 2년안에 조약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정부의 경우 91년에 가입했는데,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89년 채택 직후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여 보고서 제출 날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가입한지 5년후인 96년 1월에 첫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영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조약위원회는 올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회의(pre-sessional)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 회의에 비공개이므로 한국정부대표는 참석할 수 없지만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의 민간단체의 대표는 약 3시간 동안 위원

들과 대화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날 한국정부에게 보낼 질문서가 작성되고 한국정부는 본회의가 열리는 96년 1월 이전에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9시간, 즉 하루반의 시간이 한국정부보고서 검토에 주어지는데 민간단체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민간단체 보고서작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보고서 작성 작업에 어떤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저희는 나라의 아동권리 인권단체와의 효율적인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각 나라에서 한명의 항공료와 체제비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단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한국의 경우, 위원회가 질문서 작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10월 16-20일에 제네바에서 열게 된다.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반박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보고서 심의가 해당 나라 아동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는가?

- 매우 중요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국가의 민간단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 개선하는 것이 예초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정부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국의 명목상,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한국정부가 보고서 작성시 민간단체와 전혀 상의조차 하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후에도 민간단체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한국정부 보고서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좋은 민간단체 보고서는 해당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볼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대표는 위원들의 온갖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해명해야하고 5년후 진전상황을 다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였는지?

- 다른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가 없다면 한국에서 아동의 인권상황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기대한다.

<광고> 행사와 동정을 알려주세요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행사와 인물 동정을 게재합니다. 매주 수요일까지 소식을 주시면 금요일자로 그 다음주 행사와 동정을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공동육아연구회」, 「ACPR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한승현의 2명, 연대회의)가 15일 결성식을 가졌다. 홍사단 강당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성식에서 연대회의는 사업계획과 일정을 밝히며,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민간단체보고서 집필방향에 대해 밝혔다.

연대회의가 진행할 사업으로는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토론회 제안 △정부-민간보고서 비교, 분석한 자료집 발간 △'아동의 권리위원회' 보고서 심사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연대회의는 5월말까지 민간보고서 작업을 마치고 6월 중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올 10월 유엔 회기전 실무그룹회의에 참석과, 내년 1월 아동의 권리위원회 본회에 참석할 일정을 잡고 있다. 보고서 작성과 함께 어린이달인 5월에는 신문사와 기획시리즈 게재 등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특히 정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서 나타난 폐쇄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가 밝힌 민간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정책방향의 제시하는데 있다. 둘째,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셋째, 국내에 권리조약의 홍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씌여지는 민간보고서는 △일반원칙과 시민

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입양, 시설보호 아동) △복지와 보건(경제적 착취 금지,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등) △교육과 문화(입시위주의 교육 등) △특별보호조치(아동학대)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한편 이윤구(서울평화교육센터 소장)공동대표는 "우리나라처럼 조약을 인준과 국민이 무시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다. 조약은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다"며 이를 위해 언론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노동부는 올해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제385호)이다.

조약비준 계획 발표의 배경에 대해 노동부 국제협력과 김양현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판단하에 '한국이 더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님'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초부터 외국인취업연수생 문제로 떠들석했지만 그것은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일 사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씨는 "정부의 비준 발표 계획은 해외선전용이다"라고 비판하며 "작년 4월부터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비준의사를 전해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내 비준도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코펜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 불루타운드, 유엔비상임이사국 진출, 월드컵 유치등을 의식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 이래 제73호 선원건강진단 조약, 제81호 근로감독 조약, 제122호 고용정책 조약 등 모두 7개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 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

경기대 학생들 100여명은 15일 오후 6시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갖고, 14일 구속된 경기대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시위로 학생 2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곧 이들을 풀어줬다.

한편, 14일 연행되었던 백성열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군에 복무중이던 서태영씨는 15일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재 부산대 '자주대오'사건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조직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내년초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보통 '아동의 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은 그 내용상 청소년의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으로 바꿔 부른다. 이 조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역사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89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조약은 90년 9월2일 비준국이 20개국을 넘어 발효하게 되었다. 이 획기적인 조약의 출발점은 24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제네바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네바선언에 명시된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은 '아동의 권리선언'(59)에 계승되고 결국 '아동의 권리조약'(89)에까지 이어졌다. 제네바선언의 특징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데 있다.

UN이 창설된 이듬해 46년 UN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아동의 권리선언의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이보다 앞서 긴급한 과제인 세계인권선언 기초작업에 착수한다. 48년 12월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뤄지는데, 이 속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생활보장(제25조)과 교육의 권리(제26조)이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의 권리선언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있었다. 각국의 논의과정을 거쳐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59년 UN 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현장의 작성작업은 13년이란 세월이 흐른뒤 아동의 권리선언이 성립함으로써 59년 11월 20일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동을 주체로 인식한 아동의 권리선언

UN은 아동의 권리선언 20주년에 해당하는 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정하여 아동인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10년동안의 기나긴 조약화작업을 거쳐 전세계 인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성시킨 결과물인 아동의 권리조약은 완성되었다.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이후 30년이라는 세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이후 실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구제·보호 받아야 할 아동'에서 '권리의 향유주체로서의 아동', 그리고 다시 '권리의 행사 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아동관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변화해왔다.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이 조

약은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전진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과 아동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성시킨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

전문과 3부 54조로 구성되었다.

1) 일반규정(1-5조)

· 아동의 권리보장은 아동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조자로서 첫째로 부모의 지도권을 존중하고 그뒤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하는 보장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에 원조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 18조).

· 조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전문 마지막항, 4,11,21,23,24,28,34,35조).

2) 실체적 권리의 내용(6-41조)

· 생명권·생존권·발전권(6조)

조약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6조). 이 생명권은 아동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8, 24, 26, 37조) 그러나 생명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중매체에의 접근권,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놀이에의 권리등이 규정되어 있다(17, 28, 29, 31조).

·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권리(7,8,9,10조)

아동을 양육할 일차적 책임자는 당연히 부모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 의견표명권·시민적 권리

조약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이다. 이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 청문을 보장함(12조)은 물론 학교교육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대권등 아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40조). 어른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보장을 시민적 권리로서 확립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에 맞는 조치를 규정한다.

·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22,23,30,32,33,34,35,38조)

3) 국제적 실시 조치

조약상의무가 당사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0명의 개인자격 전문가로 이뤄지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UN에 설치된다(43조).

· 위원회는 UNICEF등 전문기구와 협력한다(45조a).

· 민간단체들은 위원회의 작업에 일정정도 참가할 수 있다(45조ab).

·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하여야 한다(44조).

<이달의 주제-여성>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
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문민정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금호재개발지구 철거민 고공농성중 박근혜씨 16일 분신

16일 새벽 6시 30분경 금호1-6지구(성동구 행당2동)에서 20여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철거민 박근백(33)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새벽 6시경 백골단, 철거 용역반을 앞세운 6백여명의 전경들이 최후탄을 난사하며 들이닥쳐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려 했다. 이에 맞서 주민 20여명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신나를 뿌리고 분신, 15m의 고공에서 추락했다. 현재 박씨는 전신에 3도의 화상과 뇌출혈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철거민 12가구 20여명은 2월21일부터 입주권 보장과 가입주 단지조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다. 철거민투쟁위원회(위원장 이상인, 투쟁위)를 만들고 공원부지에 쇠파이프만으로 5층 15m높이로 가건물을 만들어 고공농성을 전개해왔다.

투쟁위 홍보부장 김강인(37)씨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우리같이 힘없는 빈민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실했다. 또 이번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온 신정동 철거민 주민 윤 아무개씨는 "문민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이번주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쉽니다.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금호 6-1지구는 91년 재개발 사업고시가 떨어진 이후 현재 농성중인 철거민들이 91년 3월 12일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성장에는 서충현 소속 3백여 학생들과 아침부터 소식을 접하고 찾아와 철거민들과 함께 빈민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살인단속 분쇄 및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규명대회'를 16일 오후 12시부터 종로공원에서 가졌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지 이상인, 투쟁위)를 만들고 공원부지에 쇠파이프만으로 5층 15m높이로 가건물을 만들어 고공농성을 전개해왔다.

정부당국에게 항의전화를 하기로 했다.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노동부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검진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을 그 기간중 일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백43명이 3월2일 이화화탄소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뒤, 최근 휴업급여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4개월간의 장기간 검진기간중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득이 취업했던 피해자들이 취업기간을 제외한 휴업급여를 받게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측은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나 노동부장관의 특별조치로 휴업급여지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기수(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부위원장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월 60-70만원가량 지급되지만 이것으로는 기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검진기간이 1년이 상 장기화되는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의 경우 생계유지등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로 직업병 검진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직업병 환자 판정 자체를 줄이자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김완태(57)씨와 안형식(47)씨들은 검진기간중에 사망했고, 홍석봉(57)씨는 직업병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3월4일 사망한 사실에서 심각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직업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는 93년 12월부터 1년간 각 병원에서 검진 희망자 3백64명 가운데 직업병 판정을 받은 박익선(46)씨등 1백43명을 포함해 모두 5백5명이다.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김승훈신부 등 5명은 16일 오후4시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희태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욱 의원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변호사는 국회건설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병 변사체 발견 의혹 증폭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방위병이 사건 10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돼 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호(21, 상병)씨는 지난 4일 저녁에 집을 나간 후 오후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ㄹ 단란주점에서 동료 방위병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남부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이후 박씨를 제외한 3명의 방위병은 7일 지구헌병대로 이첩이 되었으나, 박씨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박씨는 실종 10일만인 14일 아침 속칭 자구리 해변에서 익사체로 떠올랐다.

박씨의 누나 박미혜(31)씨에 의하면 박씨는 발견 당시 "머리 좌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있었고, 가슴 가운데에 손바닥만한 등근 반점이 있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계주연합 인권위원회 장진휘씨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도망친 피의자를 찾은 흔적이 없고, 사고처리과정이 뭔가를 은폐하려는 것 같다"며 연행 조사중인 피의자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사체는 1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서귀의료원 영안실에서 군의사들이 참가한 부검에 들어갔다. 유족들은 박씨의 사체를 16일 새벽 화장했다. 한편, 부검 결과는 통상 부검 실시 이후 15일 이후에 나온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받던 중 도주하였고, 이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이첩하였고, 박씨의 신병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박

씨의 은몸에 난 상처는 바닷물에 의해 생긴 상처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중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담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에 참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문국진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 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제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은 16일 "광주민주인사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야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전향 장기수 장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등 광주지역의 민주인사 탄압 즉각 중지 △구속인사 석방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색출 구속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 행사와 동정 □

△ 오늘-3월 17일(금)
○ 동아투위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오후 3시부터 8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세미나(오후 3시) / 기념식(오후 7시)
주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배달녹색연합 창립 4주년 기념식
오후 6시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문의 전화: 325-5525

△ 3월 19일(일)
노동열사 박영진 제9주기 추모식
12시 / 마석 모란공원
주최: 박영진추모사업회(전화: 868-3097, 512-8832)

△ 3월 20일(월)
세계인권사진전 개막식
오전 11시 /신세계 동방갤러리(316-11845)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3월 22일(수)
'한국 청년의 전화' 창립 심포지엄
오후 2시 / 프레스센터 4층 난초실
문의 전화: 714-7622

△ 3월 25일(토)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연대회의 제3차 정기총회
오후 3시 /종로성당 (종로4가)
문의전화: 유가협(764-1684)

□ 노동가요 공식음반 발매 기념 '한걸음씩' 공연
3월24일부터 4월2일까지/대학로 소극장 오늘
'한국노동운동사 뮤지컬큐엔터티'
우정출연: 안치환, 윤선애, 류금신, 노찾사, 노래마을 노래패 꽃다지(전화: 332-5310)

□ 성폭력위기관리 4기 지킴이 모집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전화 576-7128, 573-1888)는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남자 20명, 여자 50명을 4기 지킴이로 모집한다. 지킴이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력서1통과 재학증명서 1통(이력서에 반드시 전화번호 기입)을 (137-600)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지킴이 담당자앞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마감은 4월10일까지이며, 지킴이로 선발되면 오는 6월부터 96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발기인 모집중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칭) 창립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6명)는 '한국노동운동의 이론과 정책의 산실'을 자임하는 연구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한다.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미래에 희망을 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연락은 한국노동교육협회(전화: 749-8534)로 하면 된다.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국으로 인권유학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인 서준식(47)씨가 18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서씨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서 인권의 다양한 조류와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기간은 1년이다.

□ <광고> 각 단체의 행사와 활동가들의 동정을 매주 수요일까지 연락주시면 금요일에 그 다음주 행사와 동정을 실어드립니다.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여성 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경찰청 보안국(4과)과 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이적단체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을 적발하여 사법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행되어 구속된 사람은 총 13명(홍제동 대공분실 7명, 기무사 6명)이며, 불구속 조치된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90년 3월경 경기대 씨클룸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성명규(26, 93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씨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과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명칭, 강령, 규약이 비슷하다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이적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증거로 책자와 유인물등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조직의 강령과 규약등에 대해서는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구체적인 물증에 의한 수사보다는 예단에 의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다.

17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연행된지 3일이 지나 처음 송경재씨를 면회한 송씨의 가족들은 "(송씨가) 결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은 "아직도 먼저 잡아 놓고 증거를 만든다"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구속자 명단>

(괄호안의 직책은 경찰이 발표한 것임)
성명규(26,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송경재(27, 자주대오 지도책) 조상현(24, 자주대오 구국대장) 박상준(24, 자주대오 조로위원장) 신정숙(여, 23, 자주대오 동아리책) 장세민(여, 24,

자주대오 교육국장) 진성미(여, 23, 자주대오 여학생회 지도책) 노창식(25, 조직원, 방위병) 박병식(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이갑용(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서희성(25, 조직원, 현역복무중) 이기영(22, 조직원, 방위병) 이재관(25, 조직원, 현역복무중)

AI, 기세문, 이경률씨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구속된 기세문, 이경률씨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세문, 이경률씨는 비전

향장기수 고윤기남(70) 장례식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등의 혐의로 11일과 12일 구속되었다. 기세문씨는 출소 장기수로서 15년 감옥생활을 했고 현재 보안관찰 대상자이다 또한 이경률씨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건 94년 집행유예 67.5%

8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광주지법판례 구속재판을 받은 6천2백23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9천8백32건의 구속영장 중 93.4%(9천1백86건)의 높은 영장발부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는 무리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한번의 자동이체로 매달 은행가는 번거로움을 없애십시오.

계좌번호	예금주: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운동을 위한 공개강좌> 이번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쉽니다.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제네바 소식 ⑧-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내년엔 3월 개최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편집자 주> 지난 1월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를 모니터해온 이성훈씨의 보도는 인권위 폐막과 함께 여기서 마친다. 마지막 기사로 다음주중 51차 인권위 종합평가가 실릴 예정이다.

부룬디, 소득분배 및 산업폐기물 특별보고관 새로 임명

회기 초반에 28년동안 최장수 안건이었던 남아공 인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던 제51차 인권위가 부룬디, 소득분배 및 산업폐기물(Toxic Waste)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결의안 93개와 결정 12개를 내리고 지난 10일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일정이 밀려 인권위는 마지막 두 주간에 밤 12시까지 야간회의를 여러번 강행한 끝에 겨우 회기내 모든 안건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인권위는 마지막 날 오후 7월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브라히마 팔 인권사무차장보는 폐막연설에서 "이번 회기에 약2천명이 참여해 약4백50명이 9백번의 발언을 하였고 93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집계된 통계수치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르완다, 부룬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토고등의 나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비롯한 모든 결의안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아알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은 최근 '내년 유엔 예산에 인권관련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고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인권 결의안 투표 최대 '이번'

인권위는 마지막 주에 나라별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 투표에서 쿠바, 남부 레바논, 수단, 이란, 이라크, 부룬디, 르완다, 아프카니스탄, 부간빌과 파푸아 뉴기니아, 적도 기니아, 하이티, 미얀마(버마), 자이레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의 인

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20, 반대21, 기권12, 한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결의안 상정을 저지하게 위해 중국이 제안한 불처리(No-action) 동의안은 찬반동수로 부결되어 이번 51차 인권위의 최대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작년에 기권표를 던졌던 한국은 올해도 중국 관련 두번의 투표에서 '고민'끝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의해 임기가 연장되거나 종료되는 특별보고관의 경우 쿠바, 이란, 이라크, 자이레, 적도 기니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에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종교적 불관용, 고문, 비사법적 처형,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각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인권위 정치성 인권문제 논의, 민간단체 비판

51차 인권위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 대표들은 "지금도 민간인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체첸 사태에 대해 인권위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의장성명서 이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위가 여전히 인권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를 약 10년간 모니터해온 <아티클 19:검열반대국제센터>의 안바우어(52)씨는 이번 인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5년만에 중국인권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진 것이 현상적으로 가장 큰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28년동안 인권위 안건이었던 남아공 이슈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국 인권위 재선 예정

한편 지난 93년부터 3년간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해온 한국은 이번 제51차 인권위원회로 첫3년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선출은 보통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국가의 합의에 의해 올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뤄지는데 아태지역 국가내에서 큰 반대가 없이 재선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1차 인권위 2천명 참석
내년 3월18일 52차 인권위 개막

유엔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인권 위에는 53개 회원국외에도 85개 옵저버 국가대표와 17개의 유엔기구와 전문기구, 12개 정부간 기구 및 1백62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했다. 약2천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라미트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맨추야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52차 인권위원회는 매년 1월이 연초여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일부 정부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에는 실험적으로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6주간 제네바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 인권간행물 -----

□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자료실/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회의(715-9185)

주요내용: 연대회의 구성/사업계획과 일정/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민간보고서 집필방향/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성립에 이르는 역사(20쪽)

□ 제10차 민가협 총회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763-2600)
주요내용: 94년 양심수 현황/현재 양심수 명단/교도소 실태보고서/장기수 실태보고서(140쪽)

□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샵/노동정책연구소(749-6052)
주요내용: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연구/외국인 산업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외국인력 현황과 대책(노동부장관 기자 간담회) 등(52쪽)

□ 함께 가는 여성(통권 91호, 95년 3월)/여성민우회(269-5763)
주요내용: 지방자치와 여성/학내 성희롱-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등(20쪽)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네팔인산업연수생 지반 버자가이(22)씨가 20일 서울 출입국관리소 직원 8명에게 연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오전 9시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조사를 하고 싶다」며 피난처 방문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시간 후 피난처에 도착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연행을 시도, 12시경 15분 정도의 몸싸움 끝에 지반씨를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시진(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 2과) 과장은 "우리는 불법취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했을 뿐이며 사전에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당시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에는 지반씨외에도 다수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있었으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그들을 연행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특정 외국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연행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명동농성 지반씨만 연행

연행직전 김소장은 회의정(법무부 체류심사과) 과장과 전화통화에서 "지반씨는 재배치된 회사에서 농성해산시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소지와 잔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했던 만큼, 정부에게 재취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과장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강제출국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혔

지반씨는 농성직후 부산에 있는 '서진레벨'이라는 회사에 재배치 받아 일을 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한달에 하루밖에 휴일을 주지하지 않았고, 명동성당 농성때 돌려주었던 여권도 압류했다. 지반씨는 지난 3월 16일 회사를 이탈하여 피난처로 도움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농성때 약속 안 지켜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의

국인 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재오 전도사는 "법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여권압류와 임금간접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나와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 피신중이던 나라바즈 푸엘(26)씨는 11일 네팔로 출국당했다.

<현장스케치>-세계인권사진전

참혹한 인권유린현장을 생생하게 고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세계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의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강간당한 여인이 강간으로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 중군사조직에 의해 총상을 입고 반신불구가 되어 휠체어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담은 장면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고발현장은 참혹하다.

이런 인권침해는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곤봉세례로 인해 죽은 어떤 이의 죽음에 항의하는 성난 인도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91년 숨진 고강경대열사의 상황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시위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은 한 베네수엘라 사진작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중했던 어떤 이를 떠올릴 수 있었다.

허창수(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장)신부는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을 알리고, 전세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개최되었다"고 사진전 취지를 말했다. 72년 한국지부가 생겼을 당시 일했던 한승현변호사는 "이제 인권운동의 국제적 품앗이를 할 때가 왔다"면서 과거 여러나라의 도움을 받아오던 우리가 국제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95 세계인권사진전은 25일까지 동방플라자 내 신세계동방갤러리에서 열리는데 매일 2회(12:30, 17:30) 만화로 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비디오(20분)와 고문방지를 위한 슬라이드(20분) 상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권은 지리적, 인종적, 국제적인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명제가 우리에게 불기운을 불듯, 새로운 움직임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 공판 안내 ○

- 3월21일(화)
 - 김태성,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22일(수)
 - 이상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21호(신진)
 - 신용선,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신진)
- 3월23일(목)
 - 안영휘등, 특가법위반등,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 전재순,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18호
- 3월24일(금)
 - 안재구, 국보법위반, 3시, 서울고법 404호
 - 이창복,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418호
 - 안윤경, 국보법위반, 11시, 서울지법 311호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금호 1-6 재개발지구 철거민 20여명은 20일 오전 11시30분경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는 신세계 동방 갤러리 전시장 한 가운데 흰 무명끈으로 인간사슬을 엮은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상인(47, 수배중)위원장은 "세계인권탄압에 대한 사진전을 하는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부의 인권탄압을 알리고자 한다. 사회발전상회의에 참석해 김대통령의 인권옹호 발언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릴려고 주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될 수 있는대로 행사 마지막 날까지 시위를 벌일 작정인데, 한 주민이 든 피켓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거주자의 자유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써여 있었다.

한편 16일 철거민들과 전 투경찰의 강제철거에 16미터 철탑아래로 뛰어내리며 분신한 박균백(33)씨는 뇌수술을 마친 상태이나 두 눈을 실명한 것은 물론 살아난다하더라도 언어장애를 가져오는 등 중대한 상 황이다. 이상인위원장은 "살인철거를 끝내자며 목숨내놓고 싸운 박씨의 사례는 앞으로 더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16일 이후 고공농성장 주위에는 전투경찰 3개중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사복경찰이 3미터 간격으로 그 주변을

에워싸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농성하는 12세대 50여명의 주민들은 불시에 경찰들에게 연행당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회기구 구성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도일훈, 공동협)는 18일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동위에서 협의회로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공동협의의 주요사업은 △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등 관련 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 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공동대표중 대표자회의 의장을 조일훈(한국장애인재활협회)씨, 상임대표를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씨로 선출했다. 공동협 사무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맡기로 했다.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는 23일(목) 오후 6시 기독교연합회관(신관) 4층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후에는 축하문화행사가 진행되며, 다과도 준비된다. 문의전화: 796-836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실무자 1명을 채용한다. 자격은 64년 이후 출생한 자이며 3월24일(금)까지 주민등록등본 2통과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을 제출한 후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문의전화: 522-7284

주/간/인/권/호/름

(95년3월13일-3월19일)

<3월13일>
WS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상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3월14일>
제주도 파출소 연행 방위병 10일만에 변사체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19조 조약등 연내 가입 추진/대한변협, 변호사법 개정추진 의사발표

<3월15일>
카스트로, 국제인권조사단의 쿠바 정치범 투옥실태 조사에 동의/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자 72명 사망, 1백73명 투옥 발표/재경경제원, 근로자파견법 재추진키로 결정/미 미시시피주 하원, 노예제도 뒤늦게 비준, 미국 전역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됨.

<3월16일>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서울성동구 재개발 지구에서 박균백(33)씨 분신, 추락/노점상 1천8백여명 '살인단속 분쇄 규탄대회' 갖고 평화행진/부산경찰청, 형사보호실 개선운용안 경찰청에 건의/노동부, 7월부터 육아 휴직 허용기업에 장려금/일본 오키노자민당 의원, "연합국 쪽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망언

<3월17일>
노동부등, 노동법 개정 추진 양기로/노동부장관, 국회답변에서 내년부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임금결정 보고/경찰청·기무사,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사건' 13명 구속발표/사회복지 전문 1백85명 교수, 정부에 사회복지예산의 5배 이상 증액 요구 기자회견/일본 사회당, 부전결의안 과거사죄 포함/싱가포르, 필리핀 가정부 사형집행.

<3월18일>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 공동추진키로/부경총련 학생 5백명, 동아대에서 '미국문화원방화투쟁계승 결의대회'/미국 <뉴욕타임즈>, 미국정부가 전후 일본군부의 생체실험 자료를 얻고 이들을 사면했다고 비난

<해설>
지난주 일본에서는 부전결의(不戰決意)를 반대하는 극우정치인들의 집회와 망언이 잇따랐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외치는 수준에까지 육박했다. 인간생체실험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고 731부대장들을 사면한 미국정부도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인권문제에서 명확한 과거청산 없이는 인권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교훈을 깨우치게 하였다.

경찰청과 기무사가 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은 부산대에 이어 두번째 터진 사건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다른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행되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항의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한명의 철거민이 분신했다. 계속되는 철거, 단속에 맞선 이들의 투쟁은 생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권의 현실이다.

근 조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과 「인권운동사랑방」 성원 일동은 장애인과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 산화해가신 고 최정환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분신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운명 장례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

지난 8일 노점상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치며 서초구청에서 분신한 최정환(37)씨가 21일 오전 1시 50분께 강남시립병원에서 13일만에 숨졌다. 최씨는 8일 노점상 단속반들의 무차별한 단속에 항의,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사망직전까지 그는 전신(88%)에 3도의 화상을 입고 강남시립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인권하루소식> 3월14일(제360호) 참조).

한편,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밤에 회의를 갖고 「장애인노점상 고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위원장 김도현,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례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최씨의 장례를 25일 갖

기로 하였으며, 시청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다. 가톨릭 신자였던 고인의 장지는 용인 천주교묘지로 결정되었다. 장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강남시립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씨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노점상과 철거민 단체로 구성된 「민중탄압 분쇄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24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방씩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내팔 산업연수생 연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인권탄압 불법침입에 대한 사과 △관련자 처벌 △지반 버자가 이씨의 즉각 석방 △제위업 보장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처를 무자비하게 신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의한 불법 난입

동의대 구속자 석방 기도회 갖기로 30일, 고난모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모임)은 30일 오후7시 고난모임 사무실에서 '윤창호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윤창호씨는 부산 동의대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5년째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번 월례기도회에는 윤창호씨의 어머니가 참석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393-4662

<인권어록 2>

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

□ 일본인들은 패전후 연합국 점령정책과 좌익의 연동에 세뇌돼 "일본이 나쁜데", "침략전쟁과 잔학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는 연합국이 훨씬더 많이 저질렀다. 2차대전은 "자위전쟁"이었다. <아사히 신문> 3월16일자 하타 오키노 인터뷰에서

□ 저를 처음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리상이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주일에 서너번 씩 왔습니다. 8개월동안 제대로 음식, 휴식 그리고 물을 받지도 못한 채 그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45년 전쟁이 끝나자 저에게는 찢겨진 삶만이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오로지 얼어붙은 한이 있을 뿐입니다.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서 열린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주리아 포라스(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씨 증언에서

<알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실무자 1명을 채용한다. 자격은 64년 이후 출생한 자이며 3월 24일(금)까지 주민등록등본 2통과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을 제출한 후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문의전화: 522-7284

□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인권운동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집한다. 자문위원으로 참가하면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회원통신 등을 제공하며, 자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홍보, 인권자료, 인권교육, 인권연대의 각 사업 영역에 자유로이 참가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월회비는 3만원이다. 문의전화: 715-9185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제158차 정대협 수요시위 일시:3월 22일 정오/장소:안국동 일본대사관앞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국제엠네스티(AI)가 지난 2월 17일,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에 대한 긴급구명활동을 호소한 이래 <인권하루소식> 앞으로 전세계 긴급호소한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안우만 법무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미국의 D.H. Wilton씨가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김수욱씨등 8명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이래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등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등의 북미주, 일본, 내팔 등 아시아와 호주등지에서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이런 편지는 3월 21일 현재 117통에 이르는데 전세계의 엠네스티 긴급구명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이 보낸 편지가 모두 도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하루에 팩스와 편지등으로 오는 항의서한이 어떤 날은 1천 통 이상이 쌓일 때도 있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2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부산대 전현직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거연행된 소식을 접하자 곧장 이들에 대해서 전세계의 긴급구명활동 네트워크에 긴급호소하여 비폭력적인 이들이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법무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편지의 사본을 <인권하루소식>과 <한겨레신문>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2월 18일(제345호) 참조

또 국제엠네스티 긴급구명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은 비전향장기수 김선명(70세, 45년 복역), 안학섭(65세,

- 구독료 은행 계좌안내**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44년 복역)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보내오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61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100만의 회원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양심주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모든 정치적 수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의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등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주제별, 나라별 캠페인을 세계에 동시 진행한다. 이들은 또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나라의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가기도 한다.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하나인 긴급구명활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고문, 정치적 살해, 압박한 사형집행, 실종등의 문제에 대해 전세계의 4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을 동원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편지, 팩스, 전보등으로 항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부에는 약 2백명의 긴급구명

활동 참가자들이 있고, 여기에 참가하려면 매년 7천원(편지 우송료)을 내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53-426-2533이다.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된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중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홍보실 담당자에 의하면 ILO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노·사·정으로 된 '3자구성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ILO 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ILO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은 창설이전의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서 왔다.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가) 관계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요근무 및 수행조건에 신체상 적합함을 행정관청에 의해서 임명된 의사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미리 결정할 것
 - (나)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다)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성인남자의 수를 유지할 것
 - (라)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존중할 것
- 제1항 (다)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한번에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는, 상주하는 건장한 성인남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계자가 그 지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참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계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 조
 고최정환씨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총장 이상우씨 재판에서 증언

서강대 총장 박홍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석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 총장실에서 한씨를 세번씩 만났을 때 한씨가 나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를 몇번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 90년 7월경 독일 쾰른에서, 92년 5월과 94년 9월 서강대 총장실에서 총 3번 한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박씨는 한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병훈, 박소형부부가 입북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 부부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주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씨 부부의 안기부 진술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김용무씨가 70년 독일으로 유학을 간 후 서신교환을 해왔고, 지난해 독일 그의 집에서 묵기도 했으나,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김씨도 채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씨가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검찰, 7년 중형 구형
 변호인은 무죄 주장

이러 진행된 결심에서 김철은 이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 인지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한병훈 부부의 진술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이들의 말도 매우 의심스럽고, 박홍총장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한씨 부

부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상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정권의 안보가 아닌 인간의 안보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인간안보의 첫걸음은 인권안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심까지 끝난 이재판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포섭되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단을 남겨 놓게 되었다. 선고 재판은 4월3일(월)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425호에서 열린다.

<박홍총장의 법정증언록 내일자에 게재>

<자수간첩 박소형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편집자주> 이상우씨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박소형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실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박홍신부를 남편 한병훈이 안내하여 독일 쾰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저에게 모시고 와서 박홍신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박홍신부로부터

-한 베드로(남편 한병훈 지칭)로부터 북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나 -북한에서 결혼식도 올렸는가 등의 질문을 받고 그에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자 위 박홍신부는 -인간에게는 실수도 있는 법이니 앞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저와 남편 한병훈에게 세계를 주고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독일 본 주제 한국 대사관에 남편 한병훈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90년 9월 초순 어느날 오후3시경 쾰른 라인강변에서 상부선 김용무를 접촉하고 그에게

-남편(한병훈 지칭)이 얼마전 저희 집을 방문한 박홍 신부에게 자신과 저의 입북사실을 고백했다.

-박홍신부가 저에게도 입북사실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였다라고 보고하자 그는

-네 남편은 그렇다치더라도 왜 너까지 입북사실을 노출하였느냐라는 심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무씨 북한 공작원인지 몰라, 안계춘교수 증언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두한 안계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북한 재독 공작원이라는 김용무씨의 서울대 동문) 증인은 김용무씨

국제엠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의회 서신원씨 석방 촉구

국제엠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 활동을 했다가 구속되었음을 밝혔다.

에서 한국정부는 서씨에게 94년 10월 그의 어머니 장례식 참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씨 손배청구

지난해 6월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시간제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전기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8백명이 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억울한 옥살이끝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순경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이 잡혀 풀려나 94년 4월8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가장 큰 문제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는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17-18일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노동정책연구소가 외국인노동상담소, 병원, 종교단체등의 협조로 외국인노동자 3백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보고'가 발표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느끼는 직장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63.8%)이고 그 다음은 저임금(41.1%)과 체불임금(2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실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부여(76.8%), 의료서비스 제공(57.7%), 지방관서에 상담소나 민원센터 설치(47.1%), 노조가입 허용(33.8%)등을 꼽았다.

외국인노동자가 노조로부터 도움받은 경험에 대해 82.9%가 '받은 적 없다'고 말해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조의 역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8.7%만이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법 인지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57.1%)이 '거의 모른다'라고 말했으며 6%만이 '많이 안다'고 답변했다. 인권상담 경험에 대해 49.9%가 '있다'고 응답했고 50.8%가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상담 도움정도에 대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20.9%,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13.6%, '거의도움이 안되었다'가 5.9%를 차지했다.

서초구청장 구속 촉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장애인노동자 최정환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불교인권위는 장애인노동자를 탄압한 서초구청장을 즉각 구속할 것과 중증 영세 장애인 생활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상특별법 제정 촉구 정대협 158차 수요시위

1백58번째 맞는 정대협 수요시위가 다소 쌀쌀한 봄날씨 속에서 경실련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경실련은 최근 일본의 일부 정치권과 우익세력이 태평양전쟁이 아시아구원전쟁이었다는 억지주장에 분노를 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명백한 인권유린의 범죄문제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부도덕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알림

-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1회)
주제: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WSSD)
강사: 이선태(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일시: 3월2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 문의 전화: 715-9185
*강사 사정으로 여성관련 국제조약 강좌는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 여성복지회관 개관6주년 기념 양희은과 함께 하는 봄맞이 음악회
일시: 오늘 오후3시부터 5시/장소:구로구민회관 대강당
주최: 여성복지회관 / 문의전화: 867-0516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은행 계좌안내

예금주: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근 조
고최정환씨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서강대 총장 박홍씨는 자신을 암살하라고 지령받았다는 유학생 자수간첩 한병훈씨와 함께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씨와 자수간첩 한병훈씨는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 직후인 94년 7월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암살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박홍은 이제 안되겠으니 정리해라'는 말을 듣고 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계된 동기에 대해 한씨는 "22일 박홍총장의 법정 진술이 와장황이었고 판단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나같은 사상의 회생자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박총장을 암살하려는 이유에 대해 △주사파 발언으로 한총련 역량

파괴 △북한의 대남작업의 어려움 △공안정국 조성 △박홍에게 신분노출등을 들었다.

또한 한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한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여러명 있으며 신원을 밝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된다"는 말과 한씨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려하자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손대지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자신과 같이 북한에 포섭된 유학생이 해의는 물론 국내에도 많으나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한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간첩임을 시사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씨는 92년 국민당에 입당하라는 명령을 받아 입당하고자 했으나 군복무중이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부인 박소형씨와 함께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유학중 지난 87년 3월 김용무(57)씨와 만나 북한에 4차례 입국했고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

해 9월 안기부에 자수했고, 현재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의 총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공안정국의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이창호 교수(44, 경상대)는 암살실과 관련한 박씨의 법정발언과 한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제2의 신공안정국을 만들기위한 전주곡"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교수는

"박홍총장의 발언은 그가 안기부의 하수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이며 안기부에서의 자료제공과 사전교감 없이는 나올 수 없다"며 "박총장은 불교지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대변하며 매카시즘을 마치 국민 전체의 정서인양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기(65, 유가협 회장)씨도 "지자체를 앞두고 박홍총장이 야구경기처럼 타자노릇을 자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씨 구속

과거 빨치산활동에 관한 내용의 글을 제작, 배포하고 장기수 전직지를 담사했다는 이유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씨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1일 오후5시 집에서 연행된 이후, 23일 현재 남영동에 소재한 경찰청 보안3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연행후 오후9시부터 12시까지 김씨의 집 수색을 통해 책, 디스켓, 테이프등을 압수해갔다. 김씨와 함께 연행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유용기(34, 회사원)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현대사와 빨치산의 활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연구원으로 일해온 역사학연구소(소장 홍순권, 동아대 사학과)측은

국가보안법상의 학문사상의 자유침해를 들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술단체들과 공동대응해 갈 것임을 밝혔다.

배성준(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는 "이미 빨치산, 남부군 등이 소설로 출판되었는데, 김연구원이 조사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경송 대법관)는 "용공·이적성향의 책 또는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학문적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1회)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WSSD)

강사: 이선태(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일시: 3월2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 전화: 715-9185
*강사 사정으로 여성관련 국제조약 강좌는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서강대 박홍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편집자주> 3월22일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증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했다. 변호사는 '변'으로 박홍총장은 '박'으로 표기했다.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켈른에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해성사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독일 켈른에서 한병훈을 만난 적이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켈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호인이 정리함).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입북사실을 고해성사했다고 진술하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가?
박: 고해성사는 아니고 고민을 털어 놓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얘기했다.

변: 그 자리에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입회한 적은 없나?
박: 둘이만.
변: 공작활동까지 한 것으로 말한 것 같은데 혹시나 북한에 몇번 들어 갔다왔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가?
박: 여러차례
변: 여러차례 그날밤 한병훈의 얘기를 듣고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박: 사실이라고 믿었다.

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범행을 알고서도 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고지죄로 처벌되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는가?
박: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변: 그렇게 지금 한병훈으로부터 그런 간첩 사실을 들은 후 혹시 독일 주재 한국대사 또는 영사 또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수사당국에 고지한 적이 있는가?
변: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변: 한병훈이 서강대 총장실을 찾아와서 전에 만난 후에도 간첩활동을 또 들은 게 92년 4월이라고 했는데 국민당 입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인가?
박: 92년 4월에 와서.
변: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무렵에 다시 한번 총장실을 찾아와서 국민당 입당원서를 갖고 찾아온 것인가? 그때 몇번이나 만났는가?
박: 한번(여러번 진술을 번복한 끝에 이렇게 답변)
변: 그러면 약간은 이상하지요. 군

대에 가기 전에 한번 만났고, 그럼, 다시 한번 서강대 총장실로 찾아왔다는 말인가?
박: (명확한 답변을 회피)
변: 한번인지 두번인지 92년도라 기억이 잘 안나는 걸로.

변: 한병훈을 켈른에서 만났을 때에 한병훈의 처 박소형도 만난 적이 있는가?
박: 잠시 만난 적이 있다.
변: 한병훈과 마찬가지로 한병훈으로부터 박소형도 북한을 왔다갔다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박: 한병훈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꺼내는가?
변: 그 얘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소형이가 한병훈과 함께 북한에 갔다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공소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박소형한테 들은 적은 없고
변: 박소형한테 들은 적은 없다. 박소형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까지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 구체적으로는 없다.
변: 없다.
변: 혼배성사 해준 적은 있는가?
박: 이미 결혼을 해서 해준 적이 없다.

변: 마지막으로 95년 3월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포섭한 학생을 만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박: 사실이다.
변: 그건 사실이다. 그러면 그 학생도 간첩인가요?
박: 나를 암살, 북한 포섭, 문세광과 같이 포섭해서, 날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얘길 들었다.
변: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아까 그 암살하려고 한 학생을 만난 일이 언제인가?
박: 95년.
변: 금년도?
박: 그렇지.(이후 신문과정에서 94년9월 서강대 총장실에서 들었다고

번복)
변: 그럼, 암살하려고 한 학생이 한병훈이라고 증언하는 것인가?
박: 그렇다.
변: 그럼, 그런 얘길 들은 것은 총장실에서였는가?
박: 총장실에서 들었다.
변: 현재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병훈을 고지한 적이 있는가?
박: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변: 그럼, 암살하려고 한 학생이 한병훈이라고 증언하는 것인가?
박: 그렇다.
변: 그럼, 그런 얘길 들은 것은 총장실에서였는가?
박: 총장실에서 들었다.
변: 현재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병훈을 고지한 적이 있는가?
박: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변: 그럼, 암살하려고 한 학생이 한병훈이라고 증언하는 것인가?
박: 그렇다.
변: 그럼, 그런 얘길 들은 것은 총장실에서였는가?
박: 총장실에서 들었다.
변: 현재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병훈을 고지한 적이 있는가?
박: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변: 그럼, 암살하려고 한 학생이 한병훈이라고 증언하는 것인가?
박: 그렇다.
변: 그럼, 그런 얘길 들은 것은 총장실에서였는가?
박: 총장실에서 들었다.
변: 현재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병훈을 고지한 적이 있는가?
박: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행사와 동정

장애노점상 고최정환 열사 빈민장

· 3월 25일(토)
오전 9시 발인-강남병원
오전11시 영결식-연세대학교
오후3시 시창양 노제
오후5시 서초구청 노제
오후7시 하관(용인 천주교묘지)
· 주최: 장애노점상 고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전화: 569-0317)

□ 민중생존권 확보와 고최정환열사본신사망규탄대회
일시: 오늘 오후1시 /성균관대학교
주최: 장애노점상 고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

□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규탄 집회
일시: 3월25일(토) 오후1시
장소: 파고다공원, 명동성당앞
주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전화: 859-0430

□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연대회의 제3차 총회
일시: 25일 오후3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문의전화: 764-1684

□ 전국등시다발 사회대개혁 투쟁 가두선전전
일시: 25일(토) 오후1시
장소: 지역별로 진행
주최: 민주노총준비위(766-4803)

근 조
고최정환씨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

분신 책임자 처벌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노점상 단속과 폭력성 강제 철거에 맞서 분신한 최정환(사망)씨와 박균백씨 사건이후 노점상, 장애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살인철거 박균백 분신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2시 성균관대에서 「분신강요 민생파탄 김영삼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금호 1-6지구 철거민 김명숙(37, 여)씨는 “김영삼 정권의 강제철거는 독재정권보다 무섭다”라고 말하며 “강제 철거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한 “돌아가신 분들께 살아있는 자로서의 죄스러움을 갖고 있다”며 박균백씨가 분신할 당시 7살난 어린 딸이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현재 「금호 1-6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는 한달 넘게 15미터 철담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철거

장폐가 15일 고공철담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연설자로 나온 이수호(서울연합 의장)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을 내세워 장애인과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잇따른 분신 사건에 대한 서울시청 공개사과 및 관련자 처벌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철거금지 임대주택 보장 △철거기준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농 3동, 봉천동, 꽃동네 철거민과 전국연합, 민정연, 서총련 등의 회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가 끝난후 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거리행진을 막는 전경들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학생등 1백8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분신사망한 최정환씨의 장례위원회는 최씨의

장례식을 오늘 9시 연세대학교에서 갖기로 했다. 노제는 3시 시창, 5시 서초구청에서 있다.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씨등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무용(34·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집견한 장주영(해마투합동범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빨치산역사기행」 중 김무용씨가 집필한 부분과 논문 「민중사학의 역사와 과제」등을 찬양·고무로, 가택수사과정 등에서 나온 장기수 한아무개씨가 쓴 「남부군 실록」 3권을 이적표현물 소지로 간주했다. 또한 한씨와의 만남을 통해 <적기가>, <인민항쟁가> 가사를 매모한 부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왔는데, 이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 때 3-4쪽가량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4차례 정도 만들어졌는데 여러

명이 나눠 집필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쓴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는 글이다.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씨 항소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창복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교수)씨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리씨는 감정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경제 일반, 경제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리씨는 감정서에서 각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과도한 표현은 있을 지언정 이적성이 있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을 감안 2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1회)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WSSD)

강사: 이신태(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일시: 3월2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 전화: 715-9185
*강사 사정으로 여성관련 국제조약 강좌는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제네바 소식 ⑨-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국제인권단체들, 한국인권운동의 대유엔 전략 충고

지난 10일 제51차 유엔 인권위가 93개의 결의안과 12개의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다. 보통 인권위원회 기간 중 엄청난 양의 문서가 6개 국어로 제출되고 회람된다. 올해도 공식문서만 1만쪽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의안(Resolution)이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채택 또는 거부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나 나라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경우 결의안에 의해 임기가 연장 또는 종료된다. 따라서 결의안은 8주간 회의의 요약이자 결과보고서의 성격의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 인권센터는 필요한 활동을 조정, 신설했다.

이번 인권위가 결의안을 통해 내린 주요결정은 다음과 같다.

△조세 벵구아(Jose Bengoa)씨를 '소득분배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고, 부룬디와 산업폐기물(Toxio Waste)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한다. △유엔내에 원주민족(Indigenus Peoples)을 위한 항구적인 포럼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을 올해안에 개최한다. △여성인권문제를 유엔체도에 통합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조약 감시기구와 실무분과의 의장, 특별보고관,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유엔 인권센터 내에 반인종주의 연대(年代)와 발전권 선언에 관한 특별반(Foocal Point)을 설치한다. △인종주의에 관한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원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문 초안, 고문방지조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소수집단(Minority) 권리(인권소위 산하),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 사진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모두 4개의 실무분과를 신설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에 따른 제3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실무분과의 설립을 고려한다. △국가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하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non-dergable)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한다. △

출정영장(Habeas Corpus, 구속 적부심사를 위해 피구속자를 법정에서 출두시키는 영장)에 관한 연구를 인권소위에 요청한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나라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쿠바, 이란, 이라크, 자이레, 적도 기니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버마)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다.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종교적 불관용, 고문, 비사법적 처형,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각각 3년씩 연장되었다.

수많은 결정 가운데 대다수의 인권위 관계자는 28년을 지속해온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인권문제가 공식의제에서 사라진 것과 5년만에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중국의 불처리 동인(No-action motion)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진 것을 이번 인권위의 2대 사건으로 지적했다.

한국인권문제의 경우 올해도 인권위의 '자의적 구금' 등 여러 개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인권문제가 언급되어(<인권하루소식> 347호 참조)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많은 국제인권단체의 실망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관심을 모았던 정신대문제를 지적한 라디카 쿠아라수오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특별보고관의 남북안과 일본 연내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정부는 거의 모든 의제안건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인권위 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특별보고관들 여러가지 유엔의 인권제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발언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박권 행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공식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국내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급이 없어 내용이 빈약하고 인권개선의지가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번 인권위에서 3년 임기만에 처음으로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정례화에 관한 결의안을 주도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아태지역의 인권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외교의 구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신안공정국으로 악화된 국내의 인권상황 때문에 인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용 외교의 일환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문민정권하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문민정부 등장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갈수록 인권위에서 한국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그러하듯이 인권위 또한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유엔 인권위 사업에 임해야한다고 충고한다.

즉 국제인권법과 유엔인권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정기적으로 알려 한국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 국제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공동의 인권문제에 대해 주제별 접근 전략을 개발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인권위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사실은 과거처럼 외국의 인권단체가 우리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문제만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성훈】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이유를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는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를 앞세워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황대권씨는 구미유학생간첩사건(85)으로 20년의 형기중 11년제 복역중이다. 황씨는 85년 사건 당시 안기부에 의해 불법체포되어 63일간이나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황씨는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계속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황씨의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7명의 장기

수들의 사건도 동일하게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30여년간의 군사정권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무수한 인권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가협은 이번 사건을 국내의 구제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엔이사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혀 고문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문등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연방법원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2차대

전 이후에 확립된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경찰 시신 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분신, 사망한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의 장례식이 경찰의 시신 탈취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 노점상 최정환 열사 분신 장례위원회」(장례위)는 25일 새벽 2시30분경 최씨의 시신을 장례식장인 남경철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빼앗겼다. 장례위측에 따르면 경찰당국이 24일 이미 장례식 및 노제의 불허 통보해 미리 시신을 옮기려 했다고 한다. 시신을 경찰에 빼앗긴 뒤 병원에 있던 장애인과 노점상,

학생들은 약 4시간 동안 강남경찰서 앞과 병원등지에서 차도를 점거하고 항의하였다. 이에 강남서는 25일 오전 6시30분경 최씨의 시신을 장례위측에 인도하였으나, 병원의 정문과 후문을 청소차로 막아 최씨의 시신이 연세대로 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강남 병원은 장례식장으로 최씨의 시신을 옮기려는 장례위측과 경찰의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12시경 최씨의 시신은 장례식과 노제가 끝장 용인 가톨릭공원묘지로 직행, 오후에 안장되었다.

한편, 장례식이 있기로 한 연세대에는 노점상과 장애인, 학생등 시민 3천여 명이 모여서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최씨의 시신이 없는 채로 영결식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살인단속 자행하는 용역반 해체 △중증장애인에인 생활보호 특별법 제정 △강제절거 중단 영구입대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판 안내

□3월 29일(수)

이창복, 국보법위반, 11시, 서울지법 418호
이진영,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317호
박치관, 국보법위반, 3시, 서울지법 319호
민병재,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최일봉, 국보법위반, 4시, 서울지법 425호

□ 3월 30일(목)

이상봉(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21호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의 처벌, 2시, 서울지법 418호
함평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이명석(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31일(금)

김준오,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11호
김현준,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11호
정원형,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17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등 계속

3월 20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강제연행된 지반 버자가이(22,내팔)씨는 22일 사업장이탈을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그 의사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므로 본인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출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내팔)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했다. 출입국관리소측은 다네쇼르씨가 산재를 당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자 석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간사 조문숙씨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저항을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지반씨의 연행이후 21일부터 법무부 항의방문과 항의집회, 항의전화등 소속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있었던 항의

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 는 단속과 보복으로 일관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권 단속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사과 △법무부 관계자들 처벌 △지반 버자가이씨 즉각 재입국·재취업 보장 △산업기술연수생 농성시 발표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95 사회개혁투쟁 전개 민주노총준비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공동대표 권영길 의 2인, 민주노총준비위)은 복지정책확대, 교육개혁, 세계개혁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95 사회개혁투쟁을 3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5대 사회개혁투쟁은 △의료보험 통합 △GNP대비 5%로 교육재정확보 △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 △근로소득세 인하 △개발의 경제 집중방지등 이다.

합동추모제 6월3일 추사연대회의 총회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연대회의」(의장 진관, 추사연대회의)는 25일 중로성당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태일기념사업회등 전국의 15개 추모사업회에서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6월3일 합동추모제 개최 △현대사인물발굴 사업 △추모사업운동론 정립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사업 등을 전개키로 하였다. 추사연대회의는 지난 91년 전국의 27개 추모사업회가 모여 결성되었다.

주/간/인/권/흐/름

(95년3월20일-3월26일)

<3월20일>

덕적도 주민 30여명, 18일부터 인천 가톨릭회관서 무기 한 밤샘농성/명동성당서 농성벌였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1명,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연행/엠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사진전'개막(25일까지)/금호 재개발지구 철거민 20여명 세계인권사진전서 침묵시위

<3월21일>

경기여성 교사 10명 '입학정원초과 거액착복' 양심선언/이지문중위, 불명예전역 3개월 정직 징계처분/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분신 13일만에 숨져/경제민주도입, 전세값 상한제도 제정요구 시위/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씨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고문살인 희생자명단 정부에 공식요청

<3월22일>

홍천 내촌면 5개국교 화상수업 시작/박홍총장 자신의 암살자 한병훈씨임을 이상우씨 재판서 밝혀/서울지법 무죄공시제도 시행키로

<3월23일>

박홍총장 암살지시받은 한병훈씨 기자회견/김태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용순경 국가상대로 손해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천3백여명 한전본사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시위

<3월24일>

아르헨티나 시민들 고문살해 규명시위

<3월25일>

이흥구 국무총리, 불법폭력시위 엄단 지시/미국하원 복지법 개혁안통과/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빈민장 치위저, 대학생등 2천여명 격렬시위/인천해대협, 시민권기대회 통해 굴업도 해폐기장 건설계획 철회촉구/민주노총준비위원회,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등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키로 /한국정신의료재활협회 창립, 민간 차원의 정신질환자 재활대책 마련등 본격활동/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중국인 강제노역자 10명 일본상대로 제소/천주교도시민민회 10주년

<3월26일>

경기도 안산경찰서 의처증 심한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김아무개씨 구속영장 신청/필리핀 출신 싱가포르 사형 가정부장례식에 필리핀인 5만명 참석, 라모스정부 퇴진요구/가족과 성상담소 개소식/서울시 각 구청·동사무소에 적십자비 할당액 지정해 50억원 강제모금 밝혀져

<해설>

지난 한주는 작년 여름 폭염속에서 민주세력을 떨게 했던 박홍총장의 '주사파색출' 발언의 2탄을 연상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상우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홍총장의 발언은 재판의 결과보다도 여론의 관심거리였다. 더우기 이른날 북한으로부터 암살지시를 받았다는 한병훈씨와 가진 기자회견 역시 각 신문 톱을 장식하면서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은 아닌가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서 탈치산활동과 관련 글을 쓰고, 역사기행을 다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 김무용씨 등이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한주였다.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키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월29부터 31일까지 창립회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차인석)는 유엔이 정한 '세계관용의 해'를 맞아 관용 및 평화의 문화 진작을 위해 아태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설립 창립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94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제44차 세계 교육회의'의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구러시아,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아태지역 8개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네트워크의 설립은 평화교육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행동으로 평화교육 및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으로 는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

및 사례보급과 교과과정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사교육분야의 협력등을 잡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지역내 33개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 ILO 94년 연감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초에 펴낸 '94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9시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지역의 홍콩은 44.9시간, 대만은 46.5시간으로 각각 4시간과 2.4시간이 짧았다. 또, 싱가포르 주당 노동시간이 49.2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0.3시간이 많으나 이는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지불노동시간이어서 실제 노동시간

은 우리나라보다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국의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 진상규명 다짐 김용갑씨 5주기 추모제

90년 총학생회장으로 재직중 의문사한 동우전문대(강원도 속초시 소재) 김용갑 제5대 총학생회장에게 추모식이 오전 11시부터 교내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영동지역의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해 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용갑씨의

사인규명 투쟁 전개, 민주운동의 건설, 추모비의 연내 건립 등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속초경찰서 앞까지 거리행진을 가졌다. 속초경찰서 앞에 집결한 학생들은 "김용갑씨 사인 진상을 은폐하는 속초경찰서를 규탄한다"며 경찰서가 김씨의 사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4시경 김씨의 유해가 뿌려진 속초 앞바다 연금정까지 가서 국화꽃을 헌화했다. 김용갑씨는 학교 비리와 학내 폭력이 난무하던 동우전문대 5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임되어 학내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가 90년 3월28일 밤 학교 근처의 도로에서 사망했다. 학생들은 김씨의 죽음이 학교에 의해 사주되었고, 사인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인권어록 ③

△ 진정한 삶의 질은?

"부국안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돼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3월 23일, 「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김영삼 정권의 강제철거는 독재정권보다 무섭다. 강제철거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김영숙 금호동 철거민, 3월 25일, 「본신강요 민생파탄 김영삼 정권타도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

"남한에서는 간첩신분을 밝혀도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수간첩 한병훈씨 기자회견에서 (95.3.22 가든호텔)

"자수간첩, 남한사람들 간첩신고 안한다고. 같은 간첩한테 신분밝힌 것 아니오?"

-<조선일보> 발언봉에서 (95.3.22)

월말이 가까왔습니다. 구독료 챙겨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자료>-대학강사노조 김무용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김무용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성명서는 김씨의 구속이 왜 부당하며 철회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서를 요약정리한다.

<편집자주>

(전략)

김무용씨는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이면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여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현대사 전공 연구자이다. 김무용씨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특히 해방50주년을 앞두고 2,3년 전부터는 역대 군사정권이 반공이데올로기로 왜곡한 현대사를 바로 잡으려고 당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해 왔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무용씨가 '노동자·대학생·비전향좌익출소자들'을 상대로 과거 빨치산 활동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전파(<중앙일보> 3월24일자, 이하 같음)하였다고 한다. (중략)

먼저 우리는 '사건' 자체가 왜곡되고 과대포장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무용씨가 '비전향좌익출소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우리 현대사를 좀더 객관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차원에서 만나고, 얘기를 들은 기록했을 뿐이다. 김무용씨는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

람들과 함께 그동안 문헌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연구한 역사의 현장을 답사한다는 의미의 '역사기행'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등에 광고를 내어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출소한 장기수 몇분을 안내자로 삼아 역사기행을 다녀왔던 것이다. 그즈음은 이태가 쓴 『남부군』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져 방영되었고 TV에 재방영된 후였기 때문에 '남부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 있던 해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동의 우리 현대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는 역사기행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역사기행에 참가했던 80여명이 모두 빨치산 출신 및 비전향좌익장기수들이 것처럼 발표하고 한국현대사 역사기행으로 전격적 순례답사로 왜곡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현대사와 빨치산활동」도 어디까지나 역사기행에 참고하려는 '역사기행 자료집'일 뿐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선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무용씨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고 말하거나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강연"한 바가 없다. 엄연히 역사의 사실로 존재했던 해방공간의 빨치산활동을 연구·검증하려는 것과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실을 규명하려고 문헌을 조사하고 증언을 채록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자료와 증언의 내용을 확인

하려는 김무용씨의 현대사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일 뿐이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자유주의적 권리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곳곳에서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김무용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전문연구자들의 학문연구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자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우리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통일염원 미사 시작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안중근의사 순국 85주년 추모 민족통일 염원미사"를 27일 7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미사에는 성직자, 수도자,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사제단은 이번 미사의 의미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겨레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제단은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전진적 노력과 운동전개 △남북이산 가족 상호방문 △남북 상호교합적 통일 △제단체 기구와 연대협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북녘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편지할 곳>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북녘동포에게 사랑의 편지들』 담당자 앞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기로 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음으로서 비로소 전문 법조인이 된다"며 갑작스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문화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유린 설명회 개최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외국인노동자 인권 공대책위는 오늘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제도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의 주제-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 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씨의 변호인 이덕우 변호사는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의 내용이 뒤 바뀌어 있고,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측면호가 모두 2쪽씩 앞으로 당겨져 있다고 지적, 감정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착오에 의한 실수"임을 인정하였다. 또, "자료집 원문에는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서에는 '미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의도적이 아닌가"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씨는 "위낙 많은 자료를 감정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 자료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스스로 모순된 답변을 했다. 또, 북한의 혁명노선에 대해 전국연합이 알고 있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진행된 검찰논고에서 1심보다 구

형량을 절반을 줄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덕우 변호사는 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지기 바란다"며 재판부의 현명 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연합의 기동민(28)씨는 "20여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주로 대북심리전동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정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아무개(14)씨는 지난 1월 12일 친구들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이틀 뒤인 1월 14일 당시 참고인 조사를 담당했던 군포경찰서 백아무개 경장이 보강조사를 한다며 집으로 전화해 불러낸 뒤 백경장의 차에 태워 안양유원지 근처로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이 주장을 접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날 밤 군포경찰서에 감찰반을 보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백경장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6일 오후2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열린다.

"경찰관이 성폭행" 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폭력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청 감찰반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아무개(14)씨는 지난 1월 12일 친구들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이틀 뒤인 1월 14일 당시 참고인 조사를 담당했던 군포경찰서 백아무개 경장이 보강조사를 한다며 집으로 전화해 불러낸 뒤 백경장의 차에 태워 안양유원지 근처로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월말이 가까웠습니다. 구독료 챙겨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재소자에 관한 사항,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나 막연한 희망의 표시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정법률의 폐기, 구속자 석방 등 실현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청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식을 거부하고 교도소 당국의 재소자 처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을 통해 사회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청원권이 마치 사문화되어 있다는 등 일부 언론에 내용이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청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씨는 사상선형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김삼석씨

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 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씨는 “법무부 입장은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말했다.

1월 5일 공포된 개정 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청원권이 사문화되어 이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무용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학회」는 29일 공동으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역사학연구소」 등은 성명서에서 “역사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증언을 채록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역사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실을 확인·수정하는 일은 역사연구의 기본방법으로 상식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문의 내용은 학계내부의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지,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는 학계의 정당한 토

론과 대중의 검증은 거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 자료를 마치 김씨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은 김씨 개인의 창작이 아니며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인용, 정리한 것임을 김남식·서중석씨 등이 쓴 글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김씨를 구속하면서 문제삼은 강의안 ‘해방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93.7.27)과 자료집 ‘한국현대사와 전북 빨치산 활동’(93.7)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학문연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29일 향린교회에서 공대위 소속단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명동성당 농성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 소지증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집회와 기도회, 감사단

발족,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 737-0095, 총리부속실 734-0393, 법무부장관실 503-7000-2, 법무부 차관실 5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실 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관실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 653-3514, 소장실 653-3050

□ 행사안내 □

□ 민가협 목요일집회
주제: 국가보안법 제7조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탑골공원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화: 763-2606)

□ 8.15 통일민족대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
일시: 31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일보사 송현클럽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화: 747-4364)

□ 정책공청회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31일 오후2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화: 747-4364)

□ 외국인 노동자 제2차 공개토론회

<발제>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1차 워크샵 결과 발표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조대책’

일시: 4월4일 오전10시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노동정책연구소 (전화: 795-5504)

<이달의 주제-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지난 23일 서강대총장 박홍씨와 기자회견을 가져 자신이 박총장 암살지령을 받았다고 밝힌 자수간첩 한병훈(32)씨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발행된 대표적인 시사저널 <한겨레21>과 <시사저널>에 의하면 한씨의 증언이 앞뒤가 안맞을 뿐더러 그가 밝힌 행적 자체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씨가 밝힌 고신대 학생시절의 활동과 유학을 가게 된 동기, 독일에서의 유학생 생활, 북한에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 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홍씨의 발언내용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심지어는 한씨가 안기부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고 신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것으로도 한씨가 자수간첩이라는 데는 많은 의혹이 따른다. 우선, 부산 고신대 시절, 북한한 83년도 이후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신대 동기나 선배들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동기인 황아무개(33)씨는 “당시 고신대는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인해 거의 운동세력이 초토화된 상태였고, 그 후 공개적인 학생운동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

기인 심아무개(34)씨도 “그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유학을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의 교포 이아무개(40)씨의 말은 더 한층 한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씨는 “한씨가 처음 와서 자신이 안기부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 교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북한의 간첩이라니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든 채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홍씨의 발언내용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심지어는 한씨가 안기부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고 신고 있다.

한씨의 자수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심 계류 중 7년의 구형을 받은 이 상우씨의 누나 이상희(57)씨는 87년 독일에 갔을 때 한씨를 만난 적이 있다며 “한씨가 3월8일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다시 만났는데, 그때 한씨가 ‘김용무씨가 나를 배신했다, 나도 피해자중의 한명’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 한씨의 자수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한씨의 부인 박소형씨가 안기부에서 진술한 ‘남편(한병훈)의 변절등 보안대책 강구’라는 대목과 비교하여 볼 때 자수동기나 경위에 의심을 품게 한다. 한씨는 기자회견에서 작

년 7월 코펜하겐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박홍총장 암살 지령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는 안기부 조사와 법정증언에서는 94년 2월 이후 북한이나 김용무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스스로 모순을 놓고 있다. 그리고 그의 진술등에 의하면 첫번째 방북했다는 88년 이후 6년 동안 한씨가 올린 간첩활동의 실적도 없다. 한씨 부부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검찰측 증거이다시피 한 이상우씨와 안운정씨는 1심 구형에서 각각 7년과 10년형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상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425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다음호에 이상우씨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지난 17일 경찰청 보안국

과 기무사령부가 수사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활동가 조직’(경기대 자주대오사건)사건에 대해 재야인사 100인 서명하고 조작된 사건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상임의장 박우석등, 경기남부연합)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남부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스가명을 자신의 이름자를 앞뒤만 바꿔 사용했다는 점 △사회과학 서적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다 △목검은 시위 목적이 아닌 전통무예 수련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점 △단파라디오는 학교에서 팔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총학생회 홍보물을 북한을 고무찬양 문건을 뒤바꿨다는 점등을 들었다. 또, 가장 중요한 강령과 규약은 잠안재우기와 구타, 강요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사건 조작의 중지과 구속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경기남부연합은 지난23일 회원 500명이 집회를 갖은 것을 비롯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월말이 가까왔습니다.
구독료 쟁겨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편집자 주> '95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에서 발표한 아래의 글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사회개발을 다름으로서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인권 NGO(민간단체)들의 개발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참여연대에서 제공 받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넘어서서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NGO와 사회운동단체는 사회발전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만들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문과 실천 프로그램에는 사회개발의 기본인 "인간존엄과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국가 정상들은 "인권에 대한 모든 존경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시킬 것을 포함"하는 법적인 환경을 세우는데 서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개발과 참여로서의 인권에 대한 우선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여성, 어린이, 소수자, 선주민, 장애인 등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1. 인권의 최우선성

국가, 민간단체, 국제기구등 모든 개발의 행위자는 개발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루어지는 개발의 과정은 조화로운 개발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인권침해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빈곤, 실업, 사회통합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데는 실패했다.

3. 국가가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필요를 상기시키는 것

사회발전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기본적 요구", "빈곤박멸"과 같은 시민·문화·경제·정치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강등시켰다. 그대신 인권의 증진, 완성, 보호, 존경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상기시켰다.

4.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패러다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이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에는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동안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이 모두 인권의 관점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발전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시민·문화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5. 국가가 국제적인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은 모든 국가들의 국제적인 책무이다.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

6. 국제적인 조직과 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국제개발기구등은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존경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실천행동이 인권과 충돌하는 것을 평가하는 개발지표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7. 사적영역에서 인권 책무

인권NGO는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사적영역에서의 인권이 충돌할 경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의 책무

를 이행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것도 권고했다.

8. 인권의 보편성 (생략)

9. 국가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제소절차

사회개발정상회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첫 단계를 밟는데 실패했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모든 개발의 행위자들-국가, 사기업, 국제금융기구등-을 정의롭게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10. 국내에서 국제법을 통합시킬 책무

모든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정치·시민적 권리를 그들의 국내법 상황에 맞게 통합시킬 국제적인 책무를 가진다.

11. 정의의 효과적인 접근

개발의 과정에서 고통받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믿을 수 있는 정의에 접근해야 한다.

12. 협상과정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개발을 이루는 협상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예기하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다.

13. 인권교육은 사회개발전략이다.

인권교육은 개별적이고도 집합적인 인권이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94년에 착수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선언은 사람들에게 투쟁을 위한 연대에 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집산적인 양심이 모든 인간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14. 후속조치의 미약함

코펜하겐 문서들은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모니터에 대한 국가의 승락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연구하고자했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요구도 승인되지 않은 점에 우리는 크나큰 실망을 느꼈다.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

(제374호 - 제393호)